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2년도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2. 8.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 044-200-5197, 617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5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7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해양수산부 일반현황	11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III. 세부 추진계획	19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21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01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45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245
IV. 환류 등 관련계획	339
1. 이행상황 점검계획	34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44
3. 변화관리 계획	346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353
【붙임】	355
1. 성과지표 현황	357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369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해운·항만 분야

- (해운재건) 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한진사태 이전의 경쟁력을 회복, 국적선사(HMM)는 10년만에 흑자로 전환('20)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초대형 '컨'선 20척 발주('18.9, 3.1조원) 등

< 해운재건의 주요 정량성과 >

구 분	한진 사태 전	한진 사태 후	해운재건 중
해운 매출액	39조원('15)	29조원('16)	50조원('21)
원양 '컨' 선복량	105만TEU('16.8) (한진 63만, 현대 42만)	46만TEU('16.12) (현대 46만)	105만TEU('21.12) (HMM 98만, SM 7만)
지배선대(DWT)	8,586만('16)	7,994만('17)	9,393만('22)

- (조선-수출입 상생) 국내 선박발주 증가*, 물류지원기능 향상**으로 해운-조선-수출입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도 복원

* '18-'21년간 국적선사의 전체 신조발주량 277척(202억불) 중 215척(174억불) 국내 발주

** 임시선박 135척 투입, 중소전용 선적공간 배정(주당 900TEU) 등 물류난 해소 지원

- (연안해운) 국가보조항로(27개) 운영, 민간선사 운항결손 지원*('18~), 섬 주민 여객·차량 운임보조 확대** 등으로 항로단절을 방지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및 2년 연속 적자항로 지원('18년 3개 → '22년 8개) 등

** 섬 주민 대상 여객·차량 운임의 최대 50% 보조

- (해운인력) 실습선 2척 신조 등 교육인프라 확충, 인권교육 법제화('22), 선원 최저임금 인상* 등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17) 176만원 → ('18) 198 → ('19) 215 → ('20) 221 → ('21) 225

- (항만경쟁력) 부산항을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21년 2,271만TEU 중 환적물량 54%), 광양항을 세계 11위 종합항만('21년 2억 5,801만톤)으로 육성

- (스마트물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5),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건립(부산항·인천항) 등 스마트 해운물류 전환 착수

* '25년까지 IMO level 3(선원없이 원격제어), '30년까지 level 4(완전자율) 수준 개발

나. 해양 분야

-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19.10) 하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
 - 해양모태펀드를 신규 조성(2개 자펀드, 295억원)하고,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26개사), 투자박람회('19.10) 등을 통해 약 247억원 투자유치
 -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19~'23)을 수립('19.1)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기업·연구소 대상 해양 유용소재 150건 분양 / 연간 수소생산량 330톤 규모 실증플랜트 준공('19.11)
-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23)을 마련('19.5)하고, 국민들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 확대*
 - * 해양레저관광 거점 5개소,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청소년해양교육원 2개소 등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1.12) 및 「해양치유자원법」 시행('21.2) 등과 더불어 해양치유센터(4개소)* 인프라 구축
 - * 완도(스포츠재활형), 태안(레저복합형), 울진(중장기 체류형), 경남고성(기업연계형)
- (해양문화) 국립인천해양박물관('19.7)·해양과학관('19.12)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준공('20.) 등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 (심해·극지 연구)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이사부호)을 활용하여 인도양 열수 생명자원 연구와 북서태평양 태풍 연구 등 추진('17~'21)
 - * 인도양 생명자원 탐사로 신종 생명체 발견이 기대되는 세계 4번째 인도양 新 열수구를 발견('18.7)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21.6),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21.10), '2050 북극 활동 전략' 수립('21.11) 등 극지 진출 기반 마련
 -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 '22~'26 / 2,774억원
- (해양영토) 제4차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21~'25) 이행 및 실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서비스 제공('21.8)*하여 국민 관심 제고
 - * 방문자 수 : (영상개시 전) 일평균 180명 → (개시 후) 일평균 1,500명
 - '21년까지 총 22개소의 영해기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최외곽 지역에서 해양관측자료 확보

다. 수산 · 어촌 분야

- (자원 관리) 금어기·금지체장 강화(12종), ^{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TAC) 내실화*, 근해어선 감척** 확대(4→108척)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마련
 - * 정부직권 최초 시행('21, 근해자망(오징어)], 조사원 확충(85→120명) / ** 총량 : 1,404척('17~'21)
- 中 불법어업 강력 대응, 어업지도선 6척 확충('17, 34척 → '21, 40)
 - * 입어규모(척): ('17) 1,540 → ('21) 1,350 / 불법어업 단속(건): ('17) 278 → ('21) 108
- (양식어업) 「양식산업발전법」 제정('19.8), 아쿠아팜 4.0 추진계획 수립('19.9)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식산업의 디지털·스마트화 기반 구축
 - * 부산, 경남 고성('19년 선정) / 전남 신안('20년 선정) / 강원, 경북 포항('21년 선정) / 제주('22년 선정)
- (소득) 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에 진입하였고, 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28.2억 달러) 달성
 - * 어가소득(만원) : ('17) 4,902 → ('20) 5,319 / 수출액(만달러) : ('17) 23.3 → ('21) 28.2
-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21, 515억원)하고, 세제개편으로 농어업간 소득세 비과세**의 불평등도 완화('20)
 - * (기존 1종) 조건불리지역 + (신규 3종)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 ** 비과세범위 : (기존) 어로·양식소득 각각 3천만원 → (개선) 8천만원(어로5천, 양식3천)
- (어촌) “어촌뉴딜300 사업”(‘19~)을 통해 어촌 300개소의 노후화된 항·포구시설(접안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어촌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어촌지역 신규인력 유입, 일자리 창출, 주거여건 개선 등을 반영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시행('21.9)
- (수산물 안전)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18. 194→'20. 300개소),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17. 2,333 →'21. 3,493건) 등 수산물 안전 강화
 - 청정위판장 건립* 및 위판장 등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 * 1개소(전남 고흥, '19~'20), ** ('20) 저온경매장 3개소,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

라. 해양환경·안전 분야

- (해양수산 탄소중립) 2050년 탄소배출 네거티브(△323.7만톤)를 목표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수립('21.12), 갯벌복원 등 탄소흡수 블루카본 확대
- (日원전 오염수 대응) 해양방류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 수립('21.4)·추진
 - *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국내 생산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
- (해양공간 통합관리) 「해양공간계획법」 제정('18.4)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 바다모래 및 해상풍력 관련 어업인-업계 간 상생방안* 마련
 - * 골재수급 안정대책(해수부·국토부, '17.12), 해상풍력 상생·발전방안(해수부·산업부, '20.7)
- (해양쓰레기 대응) 제1차 해양폐기물 기본계획('21~'30) 수립('21.5)을 통해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을 '30년 60% 저감, '50년 제로화 추진
 - * 「해양폐기물법」 제정('19.12)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21.5),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21.10), 친환경부표 보급(누적 2,130만개) 등 관리 강화
-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12/18개소 360km²→ '32/29개소 1,798.7km²)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한국의 갯벌* 등재('21.7)
 - *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총 면적 1284.11km²)
- (해사안전관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 「지능형해상 교통정보법」 제정('20) 등 해사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
 - * 최근 5년 인명피해('17~'21, 591명)는 종전대비('12~'16, 908명) 34.9%(317명) 감소
 - 전해상 100km까지 디지털통신망 구축(263개 기지국)으로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이용이 지속 증가*
 - * ('21.1분기) 9TB → (2분기) 24TB → (3분기) 29TB → (4분기) 31TB
- (어선안전) 화재경보장치 및 원거리 어선위치발신장치 보급(811척) 등 안전설비의 설치 의무화, 사고대응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관리 시스템 구축('21.3)으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연안안전) 연안침식 실태조사('21. 360개소) 및 연안정비사업('21. 76개소), 침식관리구역 지정('21까지 7개소) 등을 통한 사전 연안재해 예방
- (국제해사기구 대응) 韓 사무총장 연임('20~'23), IMO 대표부 설립('21.7) 및 IMO A그룹 이사국 11연임('21.12) 등 국제해사분야 선도국가 입지 강화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 세계를 선도하는 해산물류체계 구축

-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과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 가속화
- 스마트항만 등 미래 항만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물류거점 등을 추가 확보하여 촘촘한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
-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와 전략물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해상 수송을 적시 지원하고, 해운산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지속가능한 수산업, 돌아오는 연안·어촌 구현

- 어촌 생활공간을 혁신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촌소멸을 방지
- 수산식품산업, 어선어업,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및 스마트·친환경 전환 추진
- 지역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연안지역의 활력 제고

□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수산 전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탄소 흡수원을 적극 발굴하여 2050년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발생-수거-처리-재활용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국제협력 주도
- 어선사고 저감, 연안·항만의 안전관리 강화, 국가의 책임 아래 해양수산 전분야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해양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도 및 인프라 보강, 극지 연구 확대, 해저공간 창출로 과학기술 역량 제고
- 해양문화·레저관광 향유 공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 확산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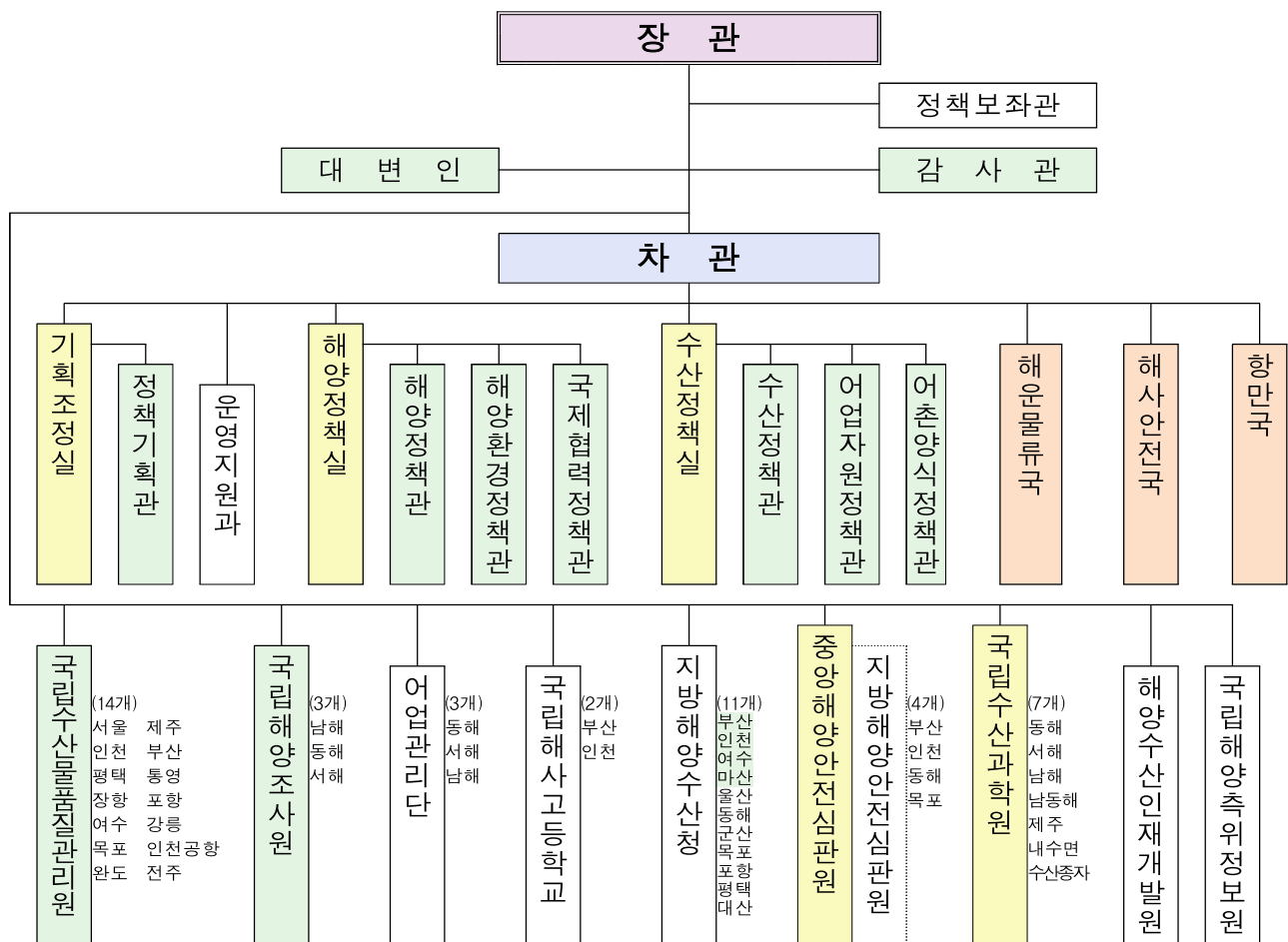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해양수산부 일반 현황

(1) 조직

-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 (48과 5팀)
- ◆ 소속기관 : 69개 (1차 22개, 2차 40개, 3차 7개)
-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2) 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9급	연구직	교원직	전문직	시간선택
합계	4,254	2	2	39	17	82	75	448	3,119	99	244	111	8
본부	622	2	2	15	13	36	53	217	278	2	2	-	2
소속기관	2,929	-	-	17	3	41	20	205	2,475	8	37	111	6
책임기관	703	-	-	7	1	5	2	26	366	89	205	-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	'23	'24	'25	'26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63,849	60,443	59,137	56,857	54,570
(전년대비증가율, %)		(△5.3%)	(△2.2%)	(△3.9%)	(△4.0%)
○ 총계	83,653	80,793	80,695	81,952	84,325
(전년대비증가율, %)		(△3.4%)	(△0.1%)	(1.6%)	(2.9%)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3,487	3,731	3,992	4,271	4,570
(전년대비증가율, %)		(7.0%)	(7.0%)	(7.0%)	(7.0%)
○ 기본경비	449	453	475	489	503
(전년대비증가율, %)		(0.9%)	(4.9%)	(2.9%)	(2.9%)
○ 주요사업비	59,914	56,259	54,670	52,097	49,497
(전년대비증가율, %)		(△6.1%)	(△2.8%)	(△4.7%)	(△5.0%)
□ 예산					
○ (총)지출	58,614	55,230	54,036	52,115	49,949
(전년대비증가율, %)		(△5.8%)	(△2.2%)	(△3.6%)	(△4.2%)
○ 총계	74,386	69,216	69,053	65,904	63,504
(전년대비증가율, %)		(△7.0%)	(△0.2%)	(△4.6%)	(△3.6%)
【일반회계】					
○ (총)지출	21,604	21,582	21,863	21,800	20,383
(전년대비증가율, %)		(△0.1%)	(1.3%)	(△0.3%)	(△6.5%)
○ 총계	37,377	35,567	36,880	35,589	33,939
(전년대비증가율, %)		(△4.8%)	(3.7%)	(△3.5%)	(△4.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지출	18,127	15,414	12,872	11,168	10,782
(전년대비증가율, %)		(△15.0%)	(△16.5%)	(△13.2%)	(△3.5%)
○ 총계	18,127	15,414	12,872	11,168	10,782

구 분	'22	'23	'24	'25	'26
(전년대비증가율, %)		(△15.0%)	(△16.5%)	(△13.2%)	(△3.5%)
【교통시설특별회계】					
○ (총)지출	16,450	16,212	17,277	17,050	16,816
(전년대비증가율, %)		(△1.4%)	(6.6%)	(△1.3%)	(△1.4%)
○ 총계	16,450	16,212	17,277	17,050	16,816
(전년대비증가율, %)		(△1.4%)	(6.6%)	(△1.3%)	(△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1,075	611	604	600	597
(전년대비증가율, %)		(△43.2%)	(△1.1%)	(△0.7%)	(△0.5%)
○ 총계	1,075	611	604	600	597
(전년대비증가율, %)		(△43.2%)	(△1.1%)	(△0.7%)	(△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1,358	1,412	1,420	1,497	1,370
(전년대비증가율, %)		(4.0%)	(0.6%)	(5.4%)	(△8.5%)
○ 총계	1,358	1,412	1,420	1,497	1,370
(전년대비증가율, %)		(4.0%)	(0.6%)	(5.4%)	(△8.5%)
□ 기금					
○ (총)지출	5,236	5,212	5,101	4,742	4,621
(전년대비증가율, %)		(△0.5%)	(△2.1%)	(△7.0%)	(△2.6%)
○ 총계	9,267	11,577	11,641	16,048	20,821
(전년대비증가율, %)		(24.9%)	(0.6%)	(37.9%)	(29.7%)
【수산발전기금】					
○ (총)지출	5,236	5,212	5,101	4,742	4,621
(전년대비증가율, %)		(△0.5%)	(△2.1%)	(△7.0%)	(△2.6%)
○ 총계	9,267	11,577	11,641	16,048	20,821
(전년대비증가율, %)		(24.9%)	(0.6%)	(37.9%)	(29.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및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2022 ~ 2026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22.8)하고, 2022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시행계획을 마련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따라 4대 전략목표, 15대 성과목표 설정
 - (해운물류강국 도약) 민간주도 선박투자 활성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디지털 해양 교통정보 서비스 시행,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안전·친화적인 해양·항만 조성)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해 안전항만 강화,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경제활력·국민행복 해양공간 구축)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해양관광 명소 조성 및 콘텐츠 확산, 해양쓰레기 전주기 대응, 해양보전과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및 활력 넘치는 어촌)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수산자원관리 체계 고도화, 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해양영토(44만km²,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전략목표 · 성과목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 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 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15	57	108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 민간 주도 선박투자 활성화 등 지원체계 강화	국정 40-1
	② 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국정 40-2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국정 40-3
	②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국정 40-3
	③ 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	국정 40-3
	④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국정 40-2
	⑤ '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국정 40-2
	⑥ 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국정 40-3
	⑦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 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 시행	
	②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국정 40-4
	③ 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국정 40-4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 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국정 40-5
	②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국정 40-5
	③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 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정 41-5
	②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102-3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 연안침식관리 강화	국정 41-5
	②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 안전항만 강화	국정 41-5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국정 40-4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국정 40-4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업무 3-3-2
	④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국정 41-1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국정 73-6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국정 73-6
	④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국정 73-6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국정 73-7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국정 41-1
	②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국정 41-1
	③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국정 41-1,5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국정 41-6,7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국정 41-6,7
	③해양보전과 이용의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	국정 41-6
	④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국정 41-7
	⑤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정 41-7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국정 73-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국정 73-4,5
	④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국정73-5
	⑤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국정73-5
	⑥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 41-4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조성 관리 강화	국정 41-7, 73-1
	②수산자원관리 체계 고도화	국정 73-1
	③어업경쟁력 강화형 어선 감축 추진	국정 41-7
	④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국정 41-1, 73-1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국정 73-1,5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국정 73-1,5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국정 73-4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정 41-7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국정 73-3
	②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국정 73-2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항만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적 선사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 등 역량 강화 필요
-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원천기술 확보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 필요
- 연안해역 이용 증대 및 新 교통수단 도입 등 환경 다변화에 따라 공간 중심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필요

◇ 그간의 성과

- 선박 신조보증 등 해운업 금융 지원체계 구축, 「해진공법」 개정을 통한 지원 범위 확대 및 친환경선박설비 설치 지원으로 조선·해운 상생 도모
- 선대 확충을 기반으로 임시선박 투입 등 적극적인 물류지원을 통해 수출 호조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뒷받침
- 세계최초 바다내비 시행 등 스마트 해사안전관리 정책기반 조성
 - 디지털통신망(LTE-M) 구축, 해양 PNT 고도화 추진계획을 마련('19. 5.)

◇ 주요 내용

-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국적선원 확충 및 선원 근로여건·복지 개선
- 자동화항만 도입 인프라 조성,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기반 구축
- 전국 연안에 유형별 해상 교통로 지정,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임무와의 상관관계

- 해운재건을 통해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운산업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5	2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①원양 선박량(만TEU)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①민간 주도 선박투자 활성화 등 지원체계 강화	①중소선사 경영안정 프로그램 추진율(%) ②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율(%)
	②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①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②선·화주 상생 추진율(%)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①지능형항로 자율운항시스템 성능목표 달성도(%) ②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달성도(%)
	②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율(%)
	③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	①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 추진율(%)
	④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①해외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건) (계획포함)
	⑤'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①주요 항만 '컨' 물동량(1~11월)(만TEU) ②민간투자유치 실적(억원)
	⑥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①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②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건수(건) ③해외항만개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율(%)
	⑦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①민간투자율 및 재해저감율(%) ②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이수인원(명) ③제도개선 달성율(%)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공공선박·친환경선박 전환 실적
	①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e-Navi) 시행	①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②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요해양사고(충돌·좌초·침몰·접촉) 저감율(%)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①고품질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율(%)
	③'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①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율(%) ②친환경선박 전환 및 제도기반 마련율(%)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①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율(%) ②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및 승선실습 제도개선 추진율(%)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①선원근로여건 개선 추진율(%) ②선원복지 증진사업 추진율(%)
	③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확대	①스타트업 창업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실적(명) ②전문가 매칭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인력양성실적(명)

(1) 주요내용

- **국적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
 -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종합적**(산업·경영·금융 등) **지원**과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공공간 제공, 장기운송계약 확대 추진 등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기반 마련**
-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항만경쟁력을 제고**
 - 글로벌 물류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
 -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만배후 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플랫폼으로 육성**
 -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기반 **확보** 및 현지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항만 내 해외 물류거점 지속 확장 및 활성화** 추진
-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
 - 바다네비 활용한 디지털 해양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 저탄소·무탄소 선박기술 등 **혁신기술개발** 및 **관공선·민간 선박의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촉진**
- **외국인 선원을 국적 선원으로 대체하고, 선원복지 개선 등을 통해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해상물류인력 양성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① 원양 선복량 (만TEU)	46	49	51	78	105	126	해운산업리더국가 실현전략('21.6)에 따른 원양 '컨' 선복량 목표 ('25/120만→'30/150만TEU↑) 달성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Alphaliner社의 선사별 선복량 (12월 기준)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 상황 개선

- 정부주도 구조조정으로 한진해운 파산('16) 이전 수준의 수송력은 회복*
했으나, 글로벌 선사와 격차 확대, 물류난 지속 상황에서 불확실성 증가

* 원양 '컨' 선복량(TEU) : ('16.8) 105만 → ('16.12) 46만 → ('21) 105만(신조 포함)

□ 해상운임 상승,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운임 유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재 수요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
항만·내륙물류 정체 등 수급불균형 심화로 해상운임 급증
- 글로벌 '컨' 물동량 증가세 둔화('21. 6.5% → '22. 4.2%) 등으로
점진적 안정화 전망되나, 코로나 재확산 등 위기요인 상존

□ 코로나19 팬데믹, 美·中 무역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해운·항만 분야의 급격한 변화 전망

- 세계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감소되는 가운데, 전략적 필수 물자,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물류체인의 변화가 예상(중심화→분산화·다변화 전략)

* 항만의 지향 가치 : (기존) 효율 지향, 비용절감 → (향후) 안전·신뢰 지향, 복원성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규제 및 시장변화 대응

- 선박기인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국내·외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신규제도 도입논의에 적극 참여해 대응방안 마련

- 국내 유망기술 발굴 및 기준 마련, 실선탍재 이력(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육·해상실증 지원 등 신기술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 항만인프라 확충 추진과 관련된 갈등 발생

-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추진 중인 항만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공해발생, 연안침식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 발생 가능
- 사전협의 및 설득, 영향 최소화 등을 통해 갈등 발생 방지 필요

(4) 기타

□ 친환경·스마트化 : 친환경선박 전환, 디지털 물류전환 가속화

- (친환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전환이 불가피 → LNG·LP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발주 확대('21년 200척)
 - '23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외항선박에 대한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운선사는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 필요
 - 미국, EU,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공동체, 포럼 등의 안전으로 청정해운(Green Shipping) 관련 다양한 기술협력 제안
- * 한·미 정상회담('22.5.21) 청정해운 협력 강화, 에너지·기후 주요경제국포럼
- (스마트) 세계 최초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노르웨이 콩스버그社), 해운물류 블록체인 플랫폼 상용화(머스크 - IBM) 등 혁신 추진

□ 물류거점 확보 : 공급망 위기 속 국제물류 경쟁 심화

- 국제물류 네트워크는 수출 경쟁력의 주요 요소 → 中·日 등 주요국과 글로벌 물류기업은 해외물류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 추진 중

* 세계 10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43%(3.4억 TEU) 점유('20)

(1) 주요 내용

□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혁신 지원

○ 주요 항로에 투입된 초대형 '컨'선 20척에 이어, '21년 신조
발주된 1.3만TEU급 '컨'선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 지원(해진공)

-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 21억달러 규모의 신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추가 선박 확보 적극 지원

* 해진공·산업은행 등 신조 지원 프로그램(15억달러), 해진공·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달러)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건조 시 고속 감가상각률을 적용
(법인세 절감 효과)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日·佛 시행 중) 도입 추진*

* 조세특례 예타 대상 선정 및 예타('22.1~9) → 세법 개정안 반영 추진

○ 신규투자 확대 및 경영혁신 등 'HMM 중장기 경쟁력제고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해진공 지원 확대

○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운 공동행위 관리·감독 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기반 마련

○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제공(900TEU/주) 등 지원대책 지속 추진

-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을 위한 '컨' 장치장 확충('22.下, 3,400TEU)

- 장기계약 체결 등 선화주 상생에 기여한 기업(우수선화주인증)에 대한 법인세감면 혜택의 요건 완화 및 감면 기준 다양화

* (현행) 포워더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적선사 이용비중 40%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 → (개선) 매출액 요건 완화, 국적선사 이용비중별 감면 혜택 차등화

- 핵심 화물 등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시 지원하고, 비상상황 대비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 검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190	167	64	100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 전년 대비 56% 상승한 1조원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실적 목표 설정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 발주, 터미널 확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취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내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필요

- 국내 선박금융 시장은 높은 투자리스크 등으로 시장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정책금융** 의존이 심화

* 국내 선박금융 규모 : '14년 34 → '18년 16억불 / 정책금융 비중 : '14년 78 → '18년 93%

- 민간 투자 인센티브 마련과 더불어, 정책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투자에 집중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

□ 해운시황 안정화 시까지 물류지원 지속

- 해상운임은 '221월 정점 이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선박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4배 수준

- 국내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적 선사 등과 협력하여 선적공간 제공 등 지원 지속 추진 필요

(4) 기타

□ 해운시장 현황 및 동향

- 美 항만적체 완화 등 공급망 정상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선박 수요 감소 등으로 운임 하락 추세

*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1)999 → ('21.1)2,782 → ('22.1)5,067 → ('22.7)3,997



<'22.7.15_금 : 3,996.8p>

* 최근 3년간 동월 평균 대비

-('19.7.) 802.0p 대비 ▲ 3,194.8p (▲ 398%)
 -('20.7.) 1,050.0p 대비 ▲ 2,946.8p (▲ 281%)
 -('21.7.) 4,037.6p 대비 ▼ 40.8p (▼ 1%)

* 최근 1년간('21.7 ~ '22.6) 수치 비교

-(최고) 5,109.6p ('22. 1. 7) 대비 ▼ 1,112.8p
 -(최저) 3,905.1p ('21. 7. 2) 대비 ▲ 91.6p
 -(평균) 4,500.9p 대비 ▼ 504.1p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민간 주도 선박투자 활성화 등 지원체계 강화(I-1-①)

해운정책과 (044-200-5718 / 5717 / 5720)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정부 주도 구조조정으로 HMM 흑자전환('20), 국적 선박량 증가('22. 9,300만톤, 세계 4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 정책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선사와의 격차 확대와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 국내 선박금융 규모(억달러) : ('14) 33.8 → ('15) 29.0 → ('16) 22.7 → ('17) 16.2 → ('18) 16.4
정책금융기관 비중(%) : ('14) 78.1 → ('15) 86.9 → ('16) 92.1 → ('17) 94.4 → ('18) 92.7
-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운산업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 안전장치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선박 건조 증가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선박금융 시장 활력 회복 기반 조성
 - (조세리스 제도) 신조선에 고속 감가상각률 적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선박투자 촉진
 - * 국내도입을 위한 세법개정안 반영을 위해 조세특례 예타(기재부, '22.1~) 추진
 - (정책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펀드 21억불을 조성하여 고위험 후순위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민간투자 마중물로 활용
- ② (HMM 경쟁력 제고) 선대 확충, 거점 터미널 확보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자체 생존기반을 마련

- (중장기 경쟁력 강화) 120만TEU 규모 선대 확충(~'26)*, 핵심시장 물류역량 강화**, 친환경 규제 대응 강화, 사업다변화 추진

* ('22.7月) 82만TEU → ('24)98.4만TEU('21.6月 발주한 13K 12척 투입) → ('26)117만TEU

** 미주, 아시아권 항만터미널 확보 및 핵심시장 내 국적 육상물류기업과 협력사업 발굴

③ (해진공 기능강화) 중소선사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선박 매입·임대를 전문으로하는 선주사업을 적극 육성

- (중소선사 특별지원) 선박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선사를 위해 투자요율 할인 확대, 특별보증요율 적용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사업규모) 2,500억원('22 ~ '26) / (지원대상) 중소 외항화물선사 98개사

- (선주사업 육성) 선주사업이 자리잡지 못한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해양진흥공사에서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26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

- (자본금 확충) 중소선사 경영 안정화, 선박도입 등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자본확충 추진

* 톤세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한 선사들의 자율출자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 예타 추진	'22.1월	국정 40-1
	해양진흥공사 미래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22.3월	국정 40-1
2/4분기	KOBC 해운시황포럼	'22.5월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	'22.5월	국정 40-1
3/4분기	해양진흥공사 미래비전 선포	'22.7월	국정 40-1
	국적선사 대상 선박 조세리스 설명회	'22.7월	국정 40-1
	HMM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2.7월	국정 40-1
4/4분기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개최	'22.12월	-
	HMM 경영권 관리방안 수립	'22.12월	국정 40-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운산업의 특성과 전후방산업으로서 조선·항만·철강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쏠 산업 해당
- (이해관계집단)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음

□ 기대효과

- 선박 확보 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대형·고효율 선박 중심으로 선대 경쟁력을 확충하고 원가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 추진이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운물류지원(III-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일반회계	-		
	▪ 한국해양진흥공사출자(327)	300		300
	▪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308)	51		49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	1		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중소선사 경영안정 프로그램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해진공 경영안정화 사업 및 중소선사지원사업 S&LB, 중소선사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S\&LB \text{ 추진} \times 0.5) + (\text{중소선사 특별 지원프로그램 추진} \times 0.5)\} \times 100$	내부 보고자료
②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율(%) (가중치 50%)	-	-	신규	100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조세리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예타추진, 정책펀드(21억불)지원 추진을 목표로 설정	$\{(\text{조세특례 예타추진} \times 0.5) + (\text{정책펀드 지원 추진} \times 0.5)\} \times 100$	내부 보고자료

② 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I-1-②)

해운정책과 (044-200-5722 / 5718 / 5721)

□ 추진배경 (목적)

- 선복량 확충에 발맞추어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화주 상생협력 공고화 필요
-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반등 뒷받침을 위해 그간 확보한 선복량을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우수선화주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
 - 우수 선화주기업을 지속 선정(19개사 선정 完)하고 법인세 감면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선화주 상생 강화 추진
- ② (수출입 물류지원) 주요항로에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中企 전용선복 지속 제공(~'22.12), 운임공표제 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해운질서확립
- ③ (카타르 LNG운반선 수주지원) 민관공* 협업을 통해 LNG 운반선 프로젝트(장기운송계약)를 수주하고, 금융지원 추진

* (해운사) 컨소시엄 구성, (정부) 외교적 노력, (공공기관)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임시선박 투입 및 선적공간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	'22.1월	국정 40-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업 선정(1차)	'22.3월	국정 40-2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용역 준공	'22.4월	국정 40-2
	카타르 LNG운송 선박 수주	'22.5월	-
3/4분기	카타르 LNG운송 선박 건조 금융지원 계획 수립 및 금융지원	'22.9월	-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운임공표제 이행 실태점검	'22.9월	-
4/4분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업 선정(2차)	'22.11월	국정 40-2
	우수선화주인증제 일몰 연장 및 법인세 감면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2.12월	국정 40-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운선사, 화주 또는 물류업체
- (이해관계집단)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음

☐ 기대효과

- 선화주 상생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제고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화주는 안정적인 화물운송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100	100	100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화주 전용선적공간 제공 등 국적 선사의 수출입 물류 지원 지속 추진을 목표로 설정	{{(임시선박 투입×0.5)+(중소화주 전용선적공간 제공×0.5)} × 100	국적선사 지원실적 (HMM, SM상선 등) 및 내부보고자료
② 선·화주 상생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100	100	100	선화주 상생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달성을 목표로 설정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 ×0.5)+(우수 선화주 기업인증 제도개선 ×0.5)} × 10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실적(해진공) 및 내부보고자료

(1) 주요 내용

□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 촉진

- (자율운항선박) 시험선 건조, 실험역 실증 등 상용화 시스템 및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 개발(~'25)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법」 제정 추진
- (스마트물류) 인천항·부산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선박-항만-육상물류 간 물류연계 최적화 시스템 신규 개발 착수('22~'25)

* (인천항) 설계 및 착공('22) → 완공('24) / (부산항) 설계 및 착공('22~'23) → 완공('25)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등 항만 인프라 혁신

- (스마트항만)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 한국형 스마트 메가पोर्ट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사전절차 실시*
 - * 예타 통과('21.12)에 따라 '22년 기초조사 등을 시작으로 '31년까지 '컨' 부두 9선석 개발(1단계)
 -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더불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26)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 추진

*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19~'23),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운송시스템('22~'24) 등

** (규모/장비) '컨' 부두 4선석 / 자동화 크레인 43대(C/C-ARMGC), 자동이송장비 44대(L-AGV) 등

- (항만인프라)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의 부두 증설 및 신규 터미널 개장*,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항만물류·운영 효율화

* (부산신항) 남'컨' 부두 3선석('22.6월 개장), 서'컨' 부두 5선석('23년 및 '26년 개장)

(인천신항) '컨' 부두 3선석('27년 개장)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2선석('22.12월 개장)

- 새만금신항 부두접근성 및 동해항 물류흐름 개선, 평택·당진항 배후수송망 조기확충 등 권역별 특화 항만인프라 확충

□ 항만배후단지 및 해외 물류거점 확충

- (항만배후단지) '30년까지 약 33km²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22~'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22.12)
 - 인천항(전자상거래·콜드체인), 부산항·목포항(복합물류·제조) 배후단지에 우수기업 유치 및 인천항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추진
- (해외 물류거점) 로테르담항('22.1), 바르셀로나항('22.6)·프로블링고항('22.12) 등 해외 공동물류센터 3개소 완전 개장
 - 국내 기업의 물류 서비스 수요가 많은 미국(조지아 등), 베트남(호치민) 등 지역에 물류센터 추가 확보 추진

□ 항만서비스를 다변화하고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서비스 다변화) 수리조선소 건립, LNG 병커링 등 서비스를 확대
- (원스톱 항만서비스) 검수·감정·검량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하역사가 선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 *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및 등록절차 마련
- (선박연료공급 시장 확대) 선박연료 정량공급 등 품질관리제 도입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산업 성장 지원
- (선용품산업 육성) 선용품 상품코드 개발('22) 등 선용품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국내 선용품 시장 규모(현 22조원)를 3조원대(~'27)로 확대
- (정책금융 지원) 해진공 지원대상을 항만운송관련사업*까지 확대하여 규모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추진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예선업 등

□ 항만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총괄 안전관리)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도입
 - (항만안전점검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과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 전담 항만안전점검관을 전국 무역항에 배치, 안전관리 추진
 - (안전투자 확대) ‘27년까지 중대재해 50% 저감 목표로 정부 (~’27, 200억원)와 민간*(~’27, 2,100억원)의 안전시설* 투자 확대
- * 추락 및 협착 방지시설, 작업자 대피시설, 하역장비 후방감지센서, 이동식 조명탑 등

□ 해외항만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및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우리 기업의 국제 항만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실시
- * 최빈국 대상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개도국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수립 지원
- 우리 기업 진출 종합지원을 위한 민간수요 적극 반영, 民·官·學 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진출기업 지원 기반 마련
- * 민간기업 주도 해외항만시장 개척을 위한 수주 활동 지원(민간경상보조금, 정부지원을 70%)
-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화주기업과의 동반진출 컨설팅 등 투자 여건 조성
- * 5.4억원을 투입, 年 10개 내외 기업에 현지 물류시장 조사, 컨설팅 비용 보조
-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 기업 수주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연중)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MDB 포함)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해외사업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 WB, AfDB(아프리카), CABI(중미) 등 MDB와 항만, 연안방재, 어항 사업 등에 대한 개도국 차관 제공과정에 우리 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 해외항만개발 정보망(coscop.or.kr)을 통해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동향, 입찰정보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1,913	1,925	1,913	2,108	22년도에 개장예정인 2-4단계 부두가 차질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 항만 근로자 일자리 공급 등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신규 부두 하역능력인 195만TEU를 합산하여 목표 설정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부산항만공사 산출자료 취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상 최대의 물량 처리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우리 항만의 순위(물동량 기준) 하락*

* 부산항 순위 : ('01) 3위(791만TEU) → ('10) 5위(1,419만TEU) → ('19) 6위(2,199만TEU)

- 높은 선박 입항빈도, 정기항로 확대 등으로 글로벌 연계성은 우수하나, 중국 항만과의 가격 경쟁으로 고비용·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한계
- 피더서비스 제공, 대형 컨테이너 선박 기항 등 환적화물은 증가 하였으나,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부족
- 물류 처리와 함께, 선박수리, LNG병커링(연료공급), 배후시설을 활용한 물류 가공·제작 등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창출

□ 항만 하역장비·정보통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반자동화 수준(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도입 지연)

-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전세계 주요 항만 선진국은 미래신기술(AI, Big-Data,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화

* 로테르담항 PCS(Port Community System), 함부르크항 Smart Port Logistics, 싱가포르항 SAFER(Sense-making Analytics For maritime Event Recognition), 중국 스마트항만 등

- 국내 스마트항만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자동화 및 정보연계가 부분적으로 진행되나, 해외 대비 스마트항만 관련 기술수준 미흡

(4) 기타

- 세계 주요 항만은 4차 산업혁명, 친환경 등 미래 항만시장 주도를 위해 스마트 항만, 허브항만 육성 등 경쟁적 정책 추진中

* 향후 21세기 선박대형화 추세에서 유일한 해답은 항만의 스마트 자동화(Dynamar)

- 물류기술 혁신과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따라 주요국들도 중장기 항만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中

* (싱) TUAS 신항은 '45년까지 자동화터미널을 포함한 컨테이너부두 65선석 개발 추진
(중) 상해 양산항, 청도항 자동화 등 11개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추진
(일) 전략항만 허브기능 강화, 항만스마트화 등을 포함한 'PORT2030' 정책 발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I-2-①)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 추진배경 (목적)

- (기술개발) 기존 선박에 비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조기 실용화·상용화* 기반 마련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될 경우 ①2035년까지 약 56조원의 파급효과, 42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Clarkson Research, '20년 산업연관표), ②인적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의 75%가 감소 기대((KMI, 2020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 ③최적 항로 운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함으로써, 연간 3,400억원의 환경편익 유발 효과 기대(KIMST, '18년 자율운항선박기술영향 평가결과)

- (규제개선) 자율운항선박의 원활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일반 선박 기준의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사법령의 규제 해소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술개발) 2025년까지 IMO Level 3.0 수준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형시험선 및 실제 컨테이너선박을 활용한 기술 실증 추진

- (자율운항시스템 개발) 선박의 최적 항로 결정 및 안전한 항해를 위한 실시간 충돌회피 기술개발

- (소형시험선* 활용 기술실증) 장비·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도 검증, 상황인식 및 최적항로 등 성능테스트

* 길이 24m, 총톤수 75톤, 속도 12노트, 최대 승선인원 10명(선원 4명, 연구원 6명)

- (실제 컨테이너선박* 활용 기술실증) 한·중·일 항로를 운항하는 실제 컨테이너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술 실증

* '22.8월 우리부-팬오션-현대미포조선-사업단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1,800TEU급 컨테이너선)

- (규제개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해사 관련 법령의 규제개선 추진

현행	제정 법률안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 건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등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 각 선종별 설치해야할 시설의 길이, 두께 등 규격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 선장의 권한 및 항해용 간행물 비치 의무, 조타실 시야 확보 의무	제22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각 선박별 최소 승무정원(1,600톤이상 국제 항해 선박은 선장을 포함 12명 승선 필요)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 선원의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선원의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 의무를 허가를 받아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22.2월	국정 40-3
	자율운항선박 다중 해상통신 게이트웨이 설계	'22.3월	국정 40-3
	제3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해수부-산업부 공동)	'22.3월	국정 40-3
2/4분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2.4월	국정 40-3
	자율운항선박 개발기술 검증에 위한 실증선박 확보 및 건조 시작 전 설계 반영을 위한 협력 추진	'22.5월	국정 40-3
	자율운항시스템 충돌회피 알고리즘 개발 및 모형선 적용 시험	'22.6월	국정 40-3
3/4분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진도점검 및 연구현황 공유, 업무협력을 위한 다부처(해수부-산업부) 통합 워크숍 개최	'22.7월	국정 40-3
	실증선 건조 및 자율운항시스템 적용 협력을 위한 해수부-실증선사-사업단-조선소 간 양해 각서 체결	'22.8월	국정 40-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관계부처 및 의원실 협의	'22.9월	국정 40-3
4/4분기	자율운항선박 안전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22.12월	국정 40-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발의	'22.12월	국정 40-3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1단계 단계 평가	'22.12월	국정 40-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조선사, ICT 분야 기자재 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 (이해관계집단) 해운업·단체·협회, 화주, 조선사 등

□ 기대효과

- 자율운항선박이 실용화·상용화될 경우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의 75%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한 최적 항로 운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함으로써, 연간 3,400억원의 환경편익 유발 효과** 기대

* (해양사고 감소) KMI, 2020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

** (환경편익) KIMST, '18년 자율운항선박기술영향 평가결과

-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 개선으로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35년까지 약 5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42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Clarkson Research, '20년 산업연관표

** (일자리 창출효과) KMI, 2020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수산연구개발(Ⅲ-4-일반재정③)				
① 항만물류기술개발(4149)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304)	일반회계	-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304)			138.5	126.7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지능형항로 자율운항시스템 성능목표 달성도(%) (가중치 50%)	-	100	100	90	지능형 자율운항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경로계획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자율운항시스템의 충돌회피 성공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충돌회피 성공률(%) =회피횟수/조우회수 ×100	연차실적보고서 최종결과에 대한 선급 등 공인 기관의 제3자 검증 보고서
②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달성도(%) (가중치 50%)	-	-	-	100	자율운항선박의 원활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일반선박 기준의 해사법령의 규제 해소가 필요하여 법률 제정 달성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법률 국회 제출·발의 시 100% 달성	법령정보시스템

②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I-2-②)

항만개발과 (044-200-5931 / 5933)

□ 추진배경 (목적)

○ (물동량)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우크라 사태로 인한 경제회복 모멘텀 둔화로 '22년 이후 항만물동량은 중장기 완만히 증가 전망

- 국내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하역능력 확보 필요(현재 하역능력 12.5억톤 수준)

* (총물동량) '21년 15.8억톤 → '30년 19.6억톤(연평균 증가율 2.7%)
(컨테이너) '21년 2,999만TEU → '30년 3,972만TEU(연평균 증가율 3.2%)

- 우리나라 '컨' 물동량은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중국 등 주변 항만들과 물동량 유치경쟁 심화 전망

*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만의 급격한 질적 성장으로 우리 항만의 순위는 하락
(부산항 순위 : ('01) 3위(791만TEU) → ('10) 5위(1,419만TEU) → ('21) 7위(2,269만TEU))

○ (스마트항만) 4차 산업혁명기술 등으로 IT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물류 흐름이 융합하여 항만물류 분야에도 자동화·스마트화 가속

- 감염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 중단 리스크를 저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 로테르담항(네)을 시작으로 롱비치항(미), 청도·양산항(중) 등에서 자동화 터미널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운영비, 생산성, 안전성, 친환경 등)

☞ 글로벌 항만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하고, 중장기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항만 구축과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물류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항만으로 도약

- 국내 기술 중심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한국판 뉴딜) 구축 추진
 -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적기 착수(‘22.6) 및 국내 기술중심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22.6~)
-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기반 마련 및 국내 산업 활성화
 - (R&D·용역) 안정적인 국내 항만 자동화 도입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항만 인프라, 하역 장비 등에 대한 국내 기술 확보 추진
 - * (R&D)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21.6억),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38.5억),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4.3억)
 - ** (용역) 스마트항만 구축전략(2.6억), 항만분야 BIM 적용지침(6억), 스마트 블록개발 및 적용(15억),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10억)
 - (협력체계) 4대 항만공사와 항만 자동화에 대한 업무협조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관련 기술·기준 표준화, 국내 기술 활용 확대 등 논의

◆ 국내 주요 물류거점 항만을 특화 개발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

- * [부산항] 동북아 Mega-Port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위상 강화
- * [인천항] 수도권 최대 수출입 관문이자 對중국 물류허브로 육성
- * [광양항] 항만과 배후 산업 간 동반발전으로 아시아 최고 스마트 종합항만으로 육성
- * [울산항] 동북아 에너지허브 육성을 위한 단계별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 [거점항] 국내 산업원자재 공급을 위한 동해신항,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만금신항 개발

- (부산항)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허브에 걸맞는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진해신항 기초자료조사(‘22.4) 및 북항 파제제 실시설계(‘22.4) 착수
- (광양항) 국내 최대 항만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광역준설토 투기장(호안 7.8km) 조성공사 착공(‘22.12) 및 낙포부두 개축(3선석)

공사 발주('22.4), 광양항 체선 완화 및 장래 물동량 증가를 대비한 석유화학부두 2선석 준공('22.12)

- (인천항) 대중국 수도권 물류허브 육성 대비 선박의 통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 준공('22.12), 항만배후 부지확보 및 준설토 수토를 위한 신규준설토 투기장 호안 준공('22.12)
- (울산항) 에너지허브 육성을 위한 2단계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항 방파호안 준공('22.9) 및 남방파제(2.3공구) 본격 추진
- (거점 항) 동해신항 방파호안(2공구) 준공('22.12),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22.12) 및 접안시설(1단계) 2선석 착공('22.8)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19~'40)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과 신항만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역주민협의체 운영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계획 추진현황 점검, 건설 첨단화 및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22~'24)
 - (제도개선) 신항만 예정지역의 지역 우대 방안, 항만법에 따른 항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스마트항만 도입 활성화 근거 마련 검토
 - (지역지원)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업체·주민 우대 방안 등 신항만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안) 수립
- * 대규모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부산항 진해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수립('21~'22)하고 추진체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신항만으로 확대
- (보상체계 확립) 국내 주요 신항만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 체계 및 어업피해조사 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지속 추진
 - (소통 강화) 신규 항만개발사업(부산항 진해신항 등)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요구사항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지속 운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 기초자료조사용역 발주	'22.2월	국정과제 40-3
	자동화 항만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사업 공모	'22.3월	국정과제 40-3
2/4분기	부산항 북항 과제제 실시설계 착수	'22.4월	국정과제 40-3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발주	'22.4월	국정과제 40-3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 기초자료조사용역 착수	'22.5월	국정과제 40-3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기초자료조사용역 발주	'22.5월	국정과제 40-3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구축	'22.6월	국정과제 40-3
	자동화 항만 기술개발 관련 신규 연구개발사업(R&D) 착수	'22.6월	국정과제 40-3
	국내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공사 협업체계 운영	'22.6월	국정과제 40-3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22.6월	
3/4분기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1단계) 2선석 착공	'22.8월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준공	'22.9월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기초자료조사용역 착수	'22.9월	국정과제 40-3
4/4분기	고생산성 컨테이너 자동하역장비(OSS) 구축	'22.12월	국정과제 40-3
	인천신항 신규준설토 투기장 호안 준공	'22.12월	국정과제 40-3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	'22.12월	
	동해신항 방파호안(2공구) 준공	'22.12월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준설 설계용역 준공	'22.12월	국정과제 40-3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착공	'22.12월	국정과제 40-3
	신항만건설 촉진 법령 일부개정 방침(안) 마련	'22.12월	
	국내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공사 협업체계 운영	'22.12월	국정과제 40-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수출입 물류기업, 국내외 선사, 터미널 건설·운영사, 지자체, 일반 국민 등
- (이해관계자) 선사, 화주, 터미널 운영사, 항만공사(PA), 지자체, 지역주민 등

□ 기대효과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적인 자동화 항만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로 스마트항만으로 도약

- 국내 항만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항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항만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항만 배후 국가 핵심 기간산업 지원기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부산항 신항만 개발(Ⅲ-3-일반재정①)			
① 부산항 신항만 개발(5050)	교특회계	915	1,207
▪ 부산항 신항만(1단계)(303)	교특회계	346	694
▪ 부산항 제2신항(305)	교특회계	18	150
▪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308)	교특회계	164	283
▪ 부산항 신항만 서컨부두개발(309)	교특회계	2	-
▪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312)	교특회계	41	-
▪ 부산항 신항 신규 투기장(313)	교특회계	30	-
▪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314)	교특회계	314	80
광양항 개발(Ⅲ-3-일반재정②)			
① 광양항 개발(5051)	교특회계	570	1,203
▪ 광양항(3단계)(302)	교특회계	570	1,203
인천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⑤)			
① 인천신항 개발(5054)	교특회계	1,109	497
▪ 인천신항(300)	교특회계	1,109	497
새만금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⑧)			
① 새만금 신항 개발(5057)	교특회계	744	1,262
▪ 새만금 신항(300)	교특회계	744	1,262
울산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⑪)			
① 울산신항 개발(5074)	교특회계	1,866	1,898
▪ 울산신항(300)	교특회계	1,866	1,898
동해신항개발(Ⅲ-3-일반재정⑫)			
① 동해신항 개발(5076)	교특회계	1,456	314
▪ 동해신항(302)	교특회계	1,456	314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Ⅲ-2-R&D④)			
①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4143)	교특회계	37	42
▪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302)	교특회계	37	4
▪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R&D)(315)	교특회계	-	38
② 항만물류기술개발(R&D)(4149)	일반회계	-	21
▪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R&D)(305)	일반회계	-	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율 (%)	신규	신규	신규	100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주요 과정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 설정	a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구축(5%) b 고생산성 컨테이너 자동하역 장비 구축 완료(15%) c 국내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공사 협업체 운영(5%) d 자동화 항만 기술개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사업 착수(5%) e 부산항 진해신항 기초자료조사용역 착수(15%) f 부산항 북항 파제제 실시설계 착수(10%) g 동해신항 방파호안(2공구) 준공(15%) h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15%) ① 인천신항 신규준설토 투기장 호안 준공(15%)	- 관련문서 - 관련문서 - 관련문서 - 관련문서 - 착수계 - 착수계 - 준공계 - 준공계 - 준공계

3 동북아 물류 HUB 항만구축(I-2-③)

항만정책과 (044-200-5918 / 5919)

□ 추진배경(목적)

- 선박 초대형화, 글로벌 얼라이언스 강화 등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 허브항만은 선도적으로 **인프라 확충 추진**
 - * 싱가포르(Tuas 66선석), 로테르담(MaasvlakteⅡ 20선석) 등 대규모 신항만 추진(수심 20m 이상)
- 지속적인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
-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의 위상 유지를 위해 **환적 기능 강화, 다양한 연관 산업 육성 등 항만부가가치 제고 추진**
 -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여 최대 3만TEU급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진해신항 등을 개발하고, 단순 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 및 항만별 특화전략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항만배후단지) 항만 부가가치 향상, 관련 산업의 활성화, 토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 업체 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
 -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 완화,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제도 정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항만법」 개정
 -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에 한해 예외적 임대가능토록 요건을 명확화

-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분양·임대(제한경쟁, 수의계약) 시 사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가격조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행정 신뢰성 제고와 정책 수립 시 자료 활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국 항만구역 현황을 파악하고 일괄 정비
- (터미널 배치) ‘컨’ 터미널 내 물류체계 개선 등을 위한 최적 평면배치 매뉴얼화
 - 적정 하역능력을 초과*한 화물 처리, 서비스 제공 공간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절감 및 터미널 효율 제고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 * 부산신항 전체 시설이용률은 119.3%로 약 241만TEU 초과 처리
 - ** 운영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터미널 구조 재배치를 통해 대응중
 - 컨테이너부두의 여건 및 현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터미널 최적 평면배치 검토 및 설계 등에 관한 매뉴얼 수립 추진
- (탄소중립) 친환경·저탄소 항만으로 능동적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 최적화 항만별 특화전략 마련
- (적정하역 능력 및 수요예측) 산정방식 개선 및 관련 시스템 등 고도화를 통해 항만개발 의사결정 및 재정투입 효율 제고
 - (적정하역능력) 현장실사 및 운영사 면담 강화 등으로 하역능력 산정 합리화 방안 마련 및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수요예측) 예측 역량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확대, 현 예측모델 한계점 분석 및 개선 방향 검토 등 수요예측 고도화 추진

○ (대외협력 강화) 한·중·일 항만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회의 추진

- 대외 항만정책 및 정보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항만의 공동 번영과 발전 도모를 위해 한·중·일 국장급 회의 참석 및 의견 교환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22.1월	국정 40-3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고도화 관련 용역 착수	'22.2월	국정 40-3
	항만 적정하역 능력 고도화 관련 용역 착수	'22.3월	국정 40-3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보고회	'22.3월	국정 40-3
2/4분기	컨테이너 터미널 최적 평면배치(Layout) 매뉴얼화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22.4월	국정 40-3
	전국 항만구역 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 착수	'22.5월	국정 40-3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2.6월	국정 40-4
3/4분기	항만법 시행령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22.7월	국정 40-3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관계기관 의견 수렴	'22.8월	국정 40-3
	컨테이너 터미널 최적 평면배치(Layout) 매뉴얼 관련 공청회	'22.9월	국정 40-3
4/4분기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	'22.12월	국정 40-3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참석	'22.12월	국정 40-3
	컨테이너 터미널 최적 평면배치(Layout) 매뉴얼화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	'22.12월	국정 40-3
	예측모형 고도화 및 지능형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2단계)	'22.12월	국정 40-3
	탄소중립 항만 구축 관계자 의견수렴(간담회 등)	'22.12월	국정 40-4
	컨테이너 터미널 최적 평면배치(Layout) 매뉴얼화 관련 용역 준공	'22.12월	국정 40-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수출입 기업, 지자체 등

○ (이해관계자) 항만공사(PA), 터미널 운영사, 선사, 지자체, 주민 등

□ 기대효과

-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응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을 비롯한 국내 항만의 대외 경쟁력 제고
- 단순 화물 처리에서 벗어나 처리화물 및 항만기능을 전략적으로 다양화하고, 항만입지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신산업을 육성,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 완화, 쏘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등 항만과 인접 도시가 협력하여 환경·안전 문제에 대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 추진율 (%)	100	100	100	100	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별 달성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	㉠ 지역산업과 연계한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25%) ㉡ 항만정책 제도정비를 위한 항만법령 개정(25%) ㉢ '퀵' 터미널 물류체계 개선 등을 위한 최적 평면배치 매뉴얼화(15%) ㉣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립(15%) ㉤ 적정하역능력 및 수요예측 고도화(15%) ㉦ 한·중·일 항만국장 회의(5%)	- 착수계, 방침자료 및 보고자료 등 - 방침자료, 보고자료 등 - 착수계, 방침자료 및 보고자료 등 - 착수계, 보고자료 등 - 착수계, 보고자료 등 - 방침자료, 보고자료 등

4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I-2-④)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 5758)

□ 추진배경 (목적)

- 국내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충,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적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해운·물류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대 추진
 - 타당성 조사 지원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 투자사업 발굴·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 진출 협력 과정에서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전담기관인 KMI 국제물류 투자·분석센터를 통해 해외 유망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해외 진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계획부터 진출 후 실적 관리까지 쏠주기 지원체계 구축
- 포스트코로나 시기 생산거점 다변화, 소비시장 인근 생산 (리·니어쇼어링)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해외 물류거점 확보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로테르담 물류센터 운영 개시	'22. 1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설명회	'22. 1월	국정 40-2
	美 진출 기업대상 물류센터 수요조사	'22. 3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 선정	'22. 3월	국정 40-2
2/4분기	LA 물류센터 물동량 유치 마케팅	'22. 6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니터링 실시	'22. 6월	국정 40-2
3/4분기	해외물류센터 이용기업 만족도 조사	'22. 9월	국정 40-2
	인도네시아 물류센터 준공·운영개시	'22. 9월	국정 40-2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22. 9월	국정 40-2
4/4분기	해외 한상 물류기업 설명회 개최	'22.10월	국정 40-2
	LA 물류센터 운영 개시	'22.10월	국정 40-2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법인 설립	'22.12월	국정 40-2
	말레이반도 남부지역 국제물류투자 유망사업 분석	'22.12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22.12월	국정 40-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국제물류주선기업을 포함한 국적 해운·물류기업 및 해외 물류거점을 통해 수출 활동을 하는 수출기업
- (이해관계자)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음

□ 기대효과

- ①국적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②공공기관 주도의 물류거점 확보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선제적 대응
- 물동량 창출 잠재력(해상교역량 전 세계 8.5%)과 글로벌 물류시장 성장에 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는 미진한 실정이나
 - 우리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이 포화상태인 국내 물류시장을 벗어나,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 제공

* 글로벌 거점(법인·지사) : 독일 DHL(220개국, 854개), 미국 UPS(200개국, 1,801개), LX판토스(37개국 360개 거점), CJ대한통운(40개국 279개 거점), 현대글로벌비스(해외 56개 거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민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유치(Ⅲ-3-일반재정⑩)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5066)				
▪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02)		교특회계	22	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외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건) (계획포함)	7	8	9	8	동 사업의 구조 상 기업이 신청하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간 지원가능기업이 최소 6개*에 그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실적을 고려 하여, '22년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 (8건)와 동일하게 설정 * 편성된 예산 중 기업 지원금은 4.74억원이고, 기업 당 타당성 조사사업 지원한도는 8천만원 이므로, 연간 지원가능 기업은 최소 6개에 그칠 수 있음	해외 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 (계획포함)	국제물류투자분석· 지원센터 사업성과 보고서

5 '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I-2-5)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5755, 5757)

□ 추진배경 (목적)

- 국가 수출입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의 물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항만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진
 - ('컨' 터미널) 국가 수출입 물류 지원, 환적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운영체계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필요
 - (항만배후단지) 항만의 물류 기능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 필요
 -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아진 유헤 항만시설에 고부가가치 新해양산업 집적·융복합화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유헤 항만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 근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컨' 항만 경쟁력) '컨' 물류 효율 개선(ITT 등), 주요 항만별 터미널별 여건을 고려한 경쟁력 제고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항만지역 경제적 가치 제고) 항만배후단지, 유헤 항만시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항만지역의 경제적 가치 제고
 - (항만배후단지) 입배후단지 특화구역 확대·운영, 입주 자격 완화, 우수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마케팅,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등 실시
 -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지속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2.1월	
	'21 부산항 ITT(터미널간환적) 실적 분석결과 및 관리 방안 마련	'22.2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	'22.3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관련 대국민 홍보	'22.3월	국정 40-2
	유휴항만 클러스터 지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	'22.3월	국정 40-2
2/4분기	'22.1분기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2.4월	
	부산항 수출입 물류 효율 제고를 위한 터미널 외부 전용 장치장 개장	'22.5월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22.5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확대 모집 추진	'22.6월	국정 40-2
	R&D 테스트베드 입주기관 혜택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22.6월	국정 40-2
3/4분기	'22. 2분기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2.7월	
	인천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 항만 운영 관계기관 간담회	'22.8월	
	전국 주요 항만별 맞춤형 물동량 유치 추진(인센티브제, 마케팅 등)	'22.9월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완료	'22.9월	국정 40-2
4/4분기	'22.3분기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2.10월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실태 점검	'22.10월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동	'22.11월	
	우수물류기업 인증	'22.12월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체계 개편	'22.12월	
	'22년 물동량,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광양항 경쟁력 제고 전략 분석	'22.12월	
	'22년 물동량,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인천항 경쟁력 제고 전략 분석	'22.12월	
	'22년 물동량,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부산항 경쟁력 제고 전략 분석	'22.12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22.12월	국정 40-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컨' 항만 운영 관계기관(하역사, 선사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입주 예정포함) 기업 등 항만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이해관계자) '컨' 항만 운영 관계기관(하역사, 선사 등), 항운노조, 화물연대, 시민단체,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항만공사, 지역주민 등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우수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지역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항만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항만 경쟁력 강화) 물류(수출입 및 환적) 효율 제고를 통해 국가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도모
- (신산업 육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책 마련으로 해양 신산업(스마트 항만물류·해양레저·관광 등) 육성 기여 전망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Ⅲ-3-일반재정⑩)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 유치(5066)		교특회계	3,939	2,957
▪ 물류기업유치지원(301)			3,939	2,9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주요 항만 '컨' 물동량(1~11월) (만TEU) (60%)	2,513	2,492	2,582	2,582	'22년 물동량은 '21 물동량과 동일하게 설정 * 러-우 전쟁('22.2월~) 여파, 중국 상하이 봉쇄('22.3~6월), 화물연대 파업('22.6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인하여 '21년 물동량 달성치와 동일하게 설정 ** 물동량은 다음 월 20일경 집계되며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서 제출시기를 고려하면 12월 물동량은 적용 불가(19, 20, 21 실적치 역시 1-11월 집계 결과)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
② 민간투자유치 실적 (억원) (40%)	신규	신규	6,158	3,000	최근 3년간 항만배후단지 공급면적 및 민간투자 유치실적과 '22년도 공급면적, 코로나 지속에 따른 투자 감소 등을 감안하여 3,000억원을 목표로 설정 * 공급면적 및 투자유치 실적 (평균 388천㎡ / 2,888억원) - ('19년) 346천㎡/1,073억원 - ('20년) 455천㎡/1,433억원 - ('21년) 363천㎡/6,158억원 ** '22년 공급계획 : 374천㎡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 공모 시 제출한 기업의 투자계획 확인	내부문서(관리기관 보고자료)

6 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마련(I-2-⑥)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3 / 5962, 5964)

□ 추진배경 (목적)

- (민간참여 확대)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국가재정 외 민간자본을 활용한 항만시설 개발 확대
 - (민자부두) 수익성 있는 부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17개 민자부두 운영 및 2개 신규사업 검토 중(수리조선, 양곡부두)
 - (배후단지 개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항만공간의 가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비관리청 항만개발) 민간의 사업참여방식 다변화를 위해, 「민간투자법」 외에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확충
- (해외항만개발) 국내 항만 인프라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해외 개발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 신흥국 경제 성장, 물동량 증가 전망 등에 따른 글로벌 항만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국내 항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간참여 확대)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한 사업유치 지속 추진
 - (민자부두) 부산항 신항 내 대형선박 수리조선소와 함께, 양곡 부두의 민간개발을 통하여 항만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 (배후단지) 개발 중인 4개 사업을 통한 적기 배후단지 확보와 함께, 신규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지속
- * (개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평택·당진항(2-1단계), 평택·당진항(2-3단계) / (투자유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인천남항 2단계

- (비관리청 항만개발) 비관리청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발굴(수시),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시행 허가 등 신규사업 지속 유치

* '16년 1조 2천억원(169건), '17년 5천억원(151건), '18년 1조 565억원(168건), '19년 1조2,997억원(236건), '20년 2조420억원(191건), '21년 1조7,107억원(203건)

○ (해외항만개발)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체계 개선,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확대

- (협력사업) 마다가스카르, MRC, 세네갈 등 사업추진*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마련을 위한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지속 개최

*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46개(총 36개국) 완료, 3개 진행중

- (지원체계) 해외항만협력 지원센터(항만협회)에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단계별*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

* 사업발굴 → 협력구축(MOU 체결,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지원 등) → 사업 수주진출 지원 → 사후관리(진행상황 점검, 정기협의회 개최 등)

- (협업체계)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와 항만개발 프로젝트 공동 진행을 타진하고, 정기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소통기회 확대

* 다자개발은행 : WB, CABI, AfDB, EBRD 등 / 국제기구 : UN ESCAP, IMO 등

**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기업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공모	'22.2월	
	항만배후단지 연구용역(2종 표준모델 개발 등) 준공	'22.3월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협상대상자 선정	'22.3월	
	이라크 교통부장관 초청 및 국내기업 비즈미팅 제공	'22.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민자 적격성 조사 완료	'22.4월	국정40-3
	메콩강위원회(MRC)와 업무협약 체결	'22.4월	
	상반기 항만민자사업 현장점검	'22.5월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사업준공	'22.5월	국정40-3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협상대상자 선정	'22.5월	
	항만 민자사업 관리·운영 개선방안 마련	'22.5월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22.5월	
	마다가스카르 툴레아항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22.6월	
3/4분기	항만배후단지 관심기업 간담회 개최	'22.7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담당자 청렴교육	'22.9월	
	ASEAN 해상교통실무회의(MTWG) 참석	'22.9월	
	해외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시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한 대사관 항만관계자 대상으로 연수 검토)	'22.9월	
4/4분기	하반기 항만민자사업 현장점검	'22.11월	
	해외항만개발 관심기업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22.11월	
	세네갈 어항개발 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22.11월	
	UNESCAP과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22.11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제3자 공고	'22.12월	국정40-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배후단지 입주자, 물류·부두 운영사, 항만개발 선진기술 전수 수원국 및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항만 물류·건설 기업
- (이해관계집단) 민간투자자, 공공기관, 지자체, 해외건설 참여 업체, 항만운영 관련 업체 등

□ 기대효과

- (민간참여) 민자를 통한 신규부두, 1·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 419만㎡의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약 7.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2만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며,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서도 약 58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배후단지 개발 고용효과 >

(단위 : 만㎡, 억 원)

사 업 명	면적 (만㎡)	총투자비 (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억원)	고용효과 (명)	비고
배후단지 합계	419	9,069	77,616	22,285	
부산항신항 웅동지구 2단계	85	2,435	13,528	3,659	착공예정
인천신항(1-1단계 2구역)	94	1,487	34,175	9,394	착공
평택·당진항(2-1단계)	113	2,128	23,947	6,551	착공
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94	2,132	3,921	1,648	신규
인천남항 2단계 2종	33	887	2,045	1,033	신규

*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16년) 및 사업제안서 참고

- (해외항만개발) 항만개발 선진기술 지원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1	'22
일반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② 일반항(5059)	교특회계	93	95	
▪ 마산항 1-1단계 최소운영비용보전금(MCC)(320)		(999)	(999)	
울산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⑪)				
③ 울산신항(5074)	교특회계	112	60	
▪ 울산신항 1단계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320)		(1,866)	(1,866)	
포항영일만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⑦)				
④ 포항영일만신항(5056)	교특회계	68	65	
▪ 포항영일만 신항(MCC)(320)		(205)	(205)	
목포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⑥)				
⑤ 목포신항(5055)	교특회계	83	85	
▪ 목포신항(1-1단계,1-2단계)(MRG)(320)		(447)	(447)	
인천북항 개발(Ⅲ-3-일반재정④)				
⑥ 인천북항(5053)	교특회계	300	300	
▪ 인천북항 일반부두(MCC),다목적부두(MRG)(320)		(415)	(415)	

평택당진항 개발(Ⅲ-3-일반재정③)				
⑦ 평택·당진항(5052) ▪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MRG)(320)	교특회계	35	30	
		(182)	(182)	
		35	30	
항만 민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유치(Ⅲ-4-일반재정⑬)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5066) ▪ 항만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사업(300)	교특회계	54	74	
		54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항만 민자사업 추진율(%)(가중치 30%)	80	100	100	100	'21년 목표치와 민간투자사업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정책수립(3건),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건), 신규 민간 투자사업 발굴(1건) 목표 설정	① 항만 민자사업 정책 수립 건수 (3건)(40%) * 측정방법 : (실적건수 / 목표건수) × 100%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건)(30%) * 측정방법 : (실적건수 / 목표건수) × 100% ③ 신규 민자 사업 발굴(1건)(30%) * 측정방법 : (실적건수 / 목표건수) × 100%	① 공문서 또는 고시문 ② 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서 ③ 신규사업 제안서 및 제안 공모 공문서 또는 고시문
②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건수(건)(공통)(가중치 30%)	3	3	3	4	해외항만 개발협력 및 개척지원 추진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	① 해외협력사업 추진 건수	① 추진(발주)보고서, 관련 용역계약서, 협약서 등
③ 해외항만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율(%)(가중치 40%)	100	100	100	100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치로 설정	① 해외시장진출 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20%) ② 항만관계관초청연수(20%) ③ 협력국, 국제기구 등 협력기반 문서 체결(20%) ④ ESCAP세미나개최(20%) ⑤ 지원협의체회의개최(20%)	① 지원계획수립 문서 ② 초청연수결과서 ③ MOU, SOI, Aide memoire 등 ④ 회의개최결과 문서 ⑤ 회의개최결과 문서

7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I-2-⑦)

항만운영과 (044-200-5771 / 5772)

□ 추진배경 (목적)

- 항만하역 등 항만물류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항만 근로환경 조성 및 국가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
 - 탄소중립 및 항만도시 미세먼지 저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박 저속 운항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스마트항만 도입, 선박의 대형화 등 변화된 항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항만보안 인프라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 Code)」 이행 지원 및 테러 등 무역항 보안사고 예방
 - 국내 선용품 업계 경쟁력 강화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선용품 전용 코드체계 개발 추진
- * 선용품 주문공급시 많이 사용되는 국제적인 코드는 국산 선용품 등록이 적고, 코드 활용시 사용료 발생 등 선용품 홍보·마케팅에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
|--|
| ◆ 국민과 항만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항만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한 항만경쟁력 확보 추진 |
|--|

가. 안전한 항만 근로환경 조성

- (항만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및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통한 항만 종사자 안전관리 개선
 - 항만하역사업자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청 승인 절차, 항만 안전점검관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항만하역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 필수 재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법정(항만안전특별법 등)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교육과정 구축

나. 탄소중립 및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 (제도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및 자동검증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로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 추진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사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저속운항 여부를 즉시 파악

다.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인력양성) 항만 자동화 등 스마트항만 도입에 따라 기존 항만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추진

* 재직자 교육·훈련비 지원 및 교육·훈련 장비 임대료 지원 등('21~'25)

- (제도개선) 도선사 선발제도 개선 및 도선수습생 시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도선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 신설, 합격자 범위 조정, 도선사 시험 위탁 근거 마련 등

라. 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내실화

- (인프라 강화) 부산항 민간항만 CCTV의 종합상황실 연계*, 항만 보안 리스크평가 프로그램 개선** 등 항만보안 관리 인프라 고도화

* 부산 북항·감천항 소재 총 24개 항만시설 연계 / '22년 / 국비 37.7억원

** 비대면 보안행정, 보안심사·평가결과 DB 구축, 현장심사 지원 등 온라인연계 및 기능 확대 추진 / '22년 : 방안수립 및 예산확보, '23년~ : ISP 및 구축

- (역량 강화) 전국항만 합동보안훈련* 및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항만 보안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전국 항만시설 보안담당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보안 관계기관 등 참여

- (제도개선) 항만공사 항만 출입자 보안 검색 기준 체계화, '컨'터미널 '컨' 전용게이트 출입보안 관리 강화*,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등 추진

* 기존 RFID 시스템 노후화·미사용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입관리 대안을 마련

- (첨단장비) 항만 '컨' 위험화물 자동검색 기술개발* 및 항만보안 검색 장비 성능 인증제** 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

* '컨'위험화물 자동검색복합탐지 시스템 개발, 검색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등 / '20~'24, 국비 283억

** 항만시설에서 보안 검색 시 해수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 사용 의무화

마. 국내 선용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활성화 기반 마련

- 10자 이상의 코드체계(대·중·소분류 및 품목, 규격 등)를 개발하여 국내외 선용품(5만여 건)에 품목 코드*를 부여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

* 선용품 전자상거래 및 관세신고 지원을 위해, 개발 선용품 품목코드를 HS코드, 국제적인 선용품 코드 및 관세청 품목코드와 매칭

- ('21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항만공사 항만보안 관리강화 TF 운영 등 이해관계자 소통정책개선 협의(12월), 항만보안 강화 종합대책 수립(10월)을 통한 보안사고 제로화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선박 저속운항 참여 자동검증 프로그램 운영	'22.1월	
	항만사업장 자체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실증 사업장 선정	'22.2월	
	부산항 민간항만 CCTV 연계사업 실시설계 발주	'22.3월	
	항만보안 검색 장비 성능인증기관 협약 체결	'22.3월	
2/4분기	항만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22.5월	
	항만사업장 자체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4종 마련·배포	'22.6월	
3/4분기	도선법 시행령 개정	'22.7월	
	부산항 민간항만 CCTV 연계사업 공사 발주	'22.7월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22.7월	
	항만보안 검색 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 지정	'22.7월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제때 마련	'22.8월	
	선용품공급업 육성 및 관리방안 수립	'22.9월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 계획 수립	'22.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항만운송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22.10월	
	'컨'터미널 '컨' 전용 게이트 출입 보안관리 강화방안 마련	'22.10월	
	위험물 하역시설 전수 점검	'22.11월	
	선용품 코드체계 개발	'22.11월	
	항만공사 항만 출입자 보안 검색 기준 체계화 방안 마련	'22.11월	
	부산항 민간항만 CCTV 연계사업 공사 준공	'22.11월	
	전국항만 합동보안훈련 실시	'22.11월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2.11월	
	항만 '컨'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 자문위원회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부두운영회사, 항만운송(하역) 종사자, 항만이용자 등
- (이해관계자) 항만공사, 국가보안기관, 항만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 항만운송(하역) 종사자, 한국항만물류협회, 항운노조 등

□ 기대효과

- 안전한 항만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항만 종사자 재해율* 저감 및 항만하역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예방

* 사고재해율 : (전 산업) 0.48('18)→0.50('19)→0.49('20)/ (항만하역) 0.61→0.66→0.68

- 선박 저속운행 유도를 통해 항만 대기환경 개선 및 국제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항만보안 인프라 및 보안인력 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무역항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 항만 운영을 지원
- 선용품 코드체계에 기반한 홍보·마케팅 등 업계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항만운영 및 관리(Ⅲ-4 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 스마트항만전문인력양성지원(335)		일반	3.2	3.2
② 해운물류지원(6133) ▪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353)		일반	-	31.4
③ 항만운영 및 관리(5064) ▪ 항만보안시설 확충(303)		교특	82	74
		교특	82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민간투자율 및 재해저감율(%) (가중치 40%)	-	-	-	95%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하역사업자 투자는 기업의 의지가 필요하며, '22년 신규사업인 만큼 95%의 집행율은 도전적인 수치임	① 민간사업자 투자율(70%) ② 재해저감율 (30%) → $\{[(\text{민간사업자 재해예방시설 투자액}/\text{목표액}(30\text{억 원}) \times 100) \times 0.7] + \{(\text{지원사업장 당해연도 재해율}/\text{전년도 재해율}) \times 100\} \times 0.3$	재해율은 고용부 또는 항만물류협회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
②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이수 인원(명) (가중치 30%)	-	-	194	160	'22년 중 직무전환 교육예정인 항만 재직자 총 200명에 통상 교육 이수율 80%를 적용하여 산출	교육 이수자 인원 집계	교육수행기관 내부자료
③ 제도개선 달성율(%) (가중치 30%)	신규	100	100	100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실적을 목표치로 산출	① 컨터미널 출입관리 강화 방안 수립 여부(50%) ②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 수립 여부(50%)	법령 및 지침 개정안 및 이행실적표

(1) 주요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 연안해역 이용 증대* 및 新 교통수단 도입 등 환경 다변화에 따라 공간중심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 ▲해상교량 32개('00)→113개('20), ▲해상풍력 9개소('22)→229개소(타당성 조사중)

- 5cm 미만 위치 오차의 해양 PNT 시스템을 구축 및 전파 교란에도 정상 활용 가능한 지상파 항법서비스 제공

□ 바다내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개선

- (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최적항로 서비스 등 기술개발 및 재해에도 중단없는 운영을 위한 제2운영센터 구축('22~)

- (해양안전 플랫폼 운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바다내비)의 관계기관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

* 국정원, 국방부, 관세청, 기상청,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KT),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지상파 통신망 기반의 연안해역 해사안전정보* 통합 제공체계 구축

* 해경청(VTS, 항행안전경보, NAVTEX), 해양조사원(해양수로정보, 항행통보), 해수부(항로표지정보) 등

□ 글로벌 친환경선박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 (제도개선) 국가 기본계획('21~'30)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행(매년), 재정지원 대상확대*를 위한 「친환경선박법」 개정('22.~)

* 기존(선박소유·사업면허 소지자) → 확대(친환경선박 건조 후 사업면허취득 예정자)

○ (기술개발) 저탄소선박 기술 국산화 및 무탄소선박 기술 선제적 확보

-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연료 핵심부품(화물창, 전기추진 시스템 등) 국산화* 및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원천기술(엔진, 연료전지 등) 확보**

* LNG탱크 설계 해외 의존(GTT社), 국내 전기추진시스템 선진국 최고기술 대비 약 20%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 등

- 선박용 이동식 배터리 및 선박 개발('20~'24), 친환경 추진기술 실증용 선박(2천톤급) 건조 및 연구·실험동 건립 추진

○ (보급확산) 공공부문 선제적 전환 및 민간 보급확산

- 소속기관 선박의 선제적 전환 및 타 부처·지자체 기술지원 강화, 친환경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LNG 등) 건조 보조금* 지원

* (내항) 선가 최대 30% 보조('21~)

○ (상용화 지원) 국가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해상실증선박(Test-bed) 운영 등 국산제품 상용화 및 시장진입 지원

○ (대응지원) 해운·조선·항만 분야 탈탄소화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관리자급, 10월), 실무협의회(분기별) 운영 / 우리부(주관), 해운사·조선사·학계 및 연구기관·선박검사기관으로 구성(16개 기관·업단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공공선박 친환경 선박 전환 실적	2	2	2	48	친환경 전환 선박척수((관공선 건조 척수 + 개조 척수) + 민간선박 건조지원 척수))	국가예산 투입 선박 건조·개조 이행현황	내부 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 필요

- (환경분석)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송수신기는 소형선박 설치에 한계*가 있어 소형송수신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필요

* 기존 송수신기(연안100km까지 통신用)는 장비 크기로 소형선박에 설치가 불가능, 소형선박의 특성(연안 50km이내 운항)에 적합한 장비 개발 및 행정절차(준공·검사 등) 간소화 필요

- (갈등관리) 소형송수신기 개발 및 바다국민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형송수신기를 전파법상 '휴대용무선국'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고품질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위성기반 서비스 연계 필요

- (환경분석) 우리부가 개발 중인 지상기반 고정밀 위치정보의 해양 이용범위 확장을 위해 위성기반 서비스와의 연계 필요

- (갈등관리) 다부처 협력사업(과기정통부 주관)인 KPS*에 우리부 연구 성과를 연계해 위성기반 서비스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한국형 지역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2~'34, 약 3.7조, 위성 8기로 구성)

**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2개소(200억), L6 위성탑재체(300억) 등

(4) 기타

□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 규제 동향

- '23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외항선박에 대한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운선사는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 필요

- 미국, EU,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공동체, 포럼 등의 안전으로 청정 해운(Green Shipping) 관련 다양한 기술협력 제안

* 한·미 정상회담('22.5.21) 청정해운 협력 강화, 에너지·기후 주요경제국포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e-Navi) 시행(I -3-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142 / 6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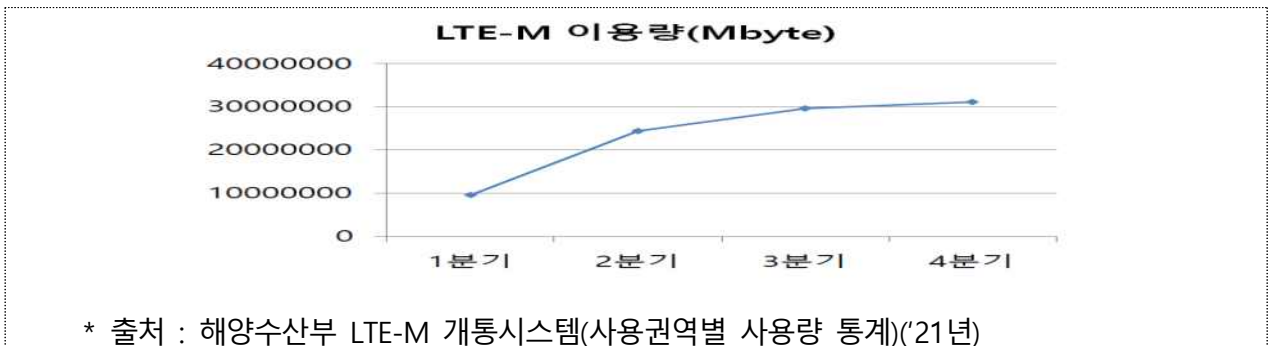
□ 추진배경 (목적)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21.1) 이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이용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 ('21.1분기) 9TB → (2분기) 24TB → (3분기) 29TB → (4분기) 31TB

- 해상재난 대응(국가통합공공망 연계), 해상안보(軍·국정원), 해상밀수 예방(관세청), 해양환경(국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바다내비 활용 증가 예상

<'21년 바다 내비게이션 이용량>



- 바다 내비게이션(서비스+통신체계) 이용자 증가 및 다양한 기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상통신환경 개선으로 육·해상 정보격차 해소 및 LTE-M 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바다 내비게이션(서비스+통신체계)의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추진

- (바다내비 안정화) 바다내비 시행 2차년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수립 및 홍보 등 바다내비 단계적 확대·추진
 - * △소형송수신기 성능기준 마련, △서비스 만족도 개선, △서비스 기능 개선 등 추진
- (이용 활성화) 바다 내비게이션(서비스+통신 인프라)을 다양한 해양 디지털서비스에 활용되도록 범부처·유관 기관 협력 추진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정책협의회 및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운영 등
- (시스템 고도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품질 고도화, △서버 용량 확충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비상복구체계 강화) 화재·정전 등 비상시에도 바다 내비게이션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제2운영센터 구축 추진
- (국제화 주도) ^{초단파대역 데이터교환 시스템} VDES 통신 등 해양디지털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해양디지털 산업 주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22.2월	
	'22년 우리부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수립	'22.2월	
2/4분기	해상밀수 예방을 위한 바다 내비게이션 관세청 연계	'22.4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관공선 설치 추진	'22.5월	
	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개최	'22.6월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확정·공표	'22.6월	
3/4분기	주요어항 순회 설명회 개최	'22.8월	
	아·태지역 국제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22.9월	
4/4분기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22.10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통신품질 고도화	'22.11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2.11월	
	제2운영센터 구축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선원, 어업인 및 해운선사 등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및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이해관계자) 해운·항만·조선·기자재, 육·해상 통신 인프라 산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 업계 등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 세계 최초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이용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 해상통신 분야 디지털화, ICT 기반 해양 新산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해양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스마트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일반회계	41	37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	일반회계	136	293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	교특회계	35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 (가중치 50%)	신규	신규	82점	85점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85% 이상을 목표치로 산출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② 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요해양사고(충돌·좌초·침몰·접촉) 저감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20%	전체 등록선박의 사고율 대비 전용 단말기를 통한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선박의 사고율을 20%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바다내비 서비스로 예방이 가능한 충돌·좌초·침몰·접촉사고로 기준으로 산출	[서비스 이용선박의 사고율 / 전체 등록선박의 사고율] x 1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 및 단말기 설치현황 자료

2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I-3-②)

항로표지과 (044-200-5871 / 5873)

□ 추진배경 (목적)

- 주요 국가들은 PNT(위치·항법·시각)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국가별 독자성 확보를 위해 경쟁 중
- 차세대 PNT 정보제공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조기 도입 및 위성항법시스템 전파교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과 해양 4차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PNT (위치·항법·시각) 인프라 조성 및 선도적인 기술개발 추진

- 전파교란 대비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R-Mode) 상용화 추진
 - (인프라 구축) 서해안 전역에 안정적인 지상파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Loran 신규 송신국 구축('21~'22, 40억원, 소청도)
 - * 항법 계산을 위해서는 3개 송신국의 신호가 필요(기존 포항·광주 + 신규 송신국)
 - (기술개발) 확보된 eLoran 핵심기술이 해양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 PNT 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기술개발* 추진
 - * 지상파통합항법시스템(R-Mode) 기술개발('20~'22, 105억원)
 - (활용확대) 성능시연회 등을 통해 이동체 항법(관공선, 군함 등) 및 국가기반시설 시각동기(방송망, 전력망 등)에 활용되도록 협력강화
- 차세대 위성항법보강시스템 구축 추진
 - (지상기반) GPS 오차를 10c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센티미터급 보강서비스를 개발·구축('20~'24), 지상통신망을 통해 우선 활용*

* 자율운항선박/자동접안, 스마트항만 운영, 도선지원, 수로측량, 준설, 항만 및 해양 플랜트 건설, 해저케이블 부설, 해양드론 등

- (위성기반) 확보된 지상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KPS* 항법위성 서비스 기술을 개발·구축**, 국가의 모든분야 활용(자율주행차 등)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22~'35, 다부처 사업/3조72백억원/우리부 69백억원)

** 우리부 전담분야: KPS 센티미터급 보강기술 개발('22~'32, 285억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우리부 전담분야 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정 40-4
	eLoran 이용활성화 표준시 서비스 시연회 개최	'22.2월	국정 40-4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서비스 확산 관계기관 업무협의	'22.3월	국정 40-4
2/4분기	해양 PNT 고도화 기술세미나 및 지원단 회의 개최(1차)	'22.4월	국정 40-4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예산 확보 대응	'22.5월	국정 40-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22.6월	국정 40-4
3/4분기	해양 PNT 고도화 기술세미나 및 지원단 회의 개최(2차)	'22.7월	국정 40-4
	해양 PNT 테스트베드 항만 실해역 검증	'22.9월	국정 40-4
	KPS 관련법 제정 협의 및 개발운영단 신설 대응	'22.9월	국정 40-4
4/4분기	eLoran 이용활성화 관계기관 업무협의	'22.10월	국정 40-4
	국제기구(UN ICG, IALA, FERNS 등) 회의 대응 및 의제 제출	'22.11월	국정 40-4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성과 보고회 개최	'22.12월	국정 40-4
	eLoran 신규 송신국(소청도) 구축 완료	'22.12월	국정 40-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선박·차량 등의 이동체 항법정보 이용자, 시각동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간 산업체(에너지, 금융, 통신 등) 등
- (이해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수협, 어촌계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해양안전기술개발(Ⅲ-2-R&D⑧)			
① 해양안전기술개발(4163)	교특회계	87.62	221.41
▪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305)		87.62	57.98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09)		-	163.43

□ 기대효과

- 안전한 해양교통과 4차산업 혁명에 필수적인 PNT 제공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항행안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스마트화 확산을 지원
- 전파교란·간섭 등 위성항법 중단 시에도 지상파항법을 사용하여 PNT 정보를 끊김 없이 제공, 국가의 공공안전 기능을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① 고품질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율(%)	신규	100	100	100	eLoran 신규송신국 구축 완료도와 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베드 항만에서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정보 확보 달성도 평가	eLoran 신규송신국 완공(40%)+ 해양 PNT 위치 정확도(≤10cm) 성과목표 검증(60%)	완료보고서

3] 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I-3-③)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 5843)

□ 추진배경 (목적)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 친환경선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상용화·보급 지원 필요

* 국제해운의 선박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

-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등에 따라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적극이행 요구

* 국내해운 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70% 감축(101→71만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규제에 따른 친환경 新기술 개발이 상용화 및 보급·확산으로 이어져 해운부문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구현

* IMO 국제환경규제 → 신기술 확보 → 기준마련 → 해상실증(Track Record) → 상용화 → 규제 이행수단으로 국제 표준화 → 新시장 창출 → 시장선점

□ 친환경 新기술이 개발 및 상용화되고, 실제 공공·민간부문으로 보급 확산되어 시장창출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지원 추진

- (상용화 지원) 국가 친환경선박 유망기술에 대한 상용화 로드맵 수립 및 국내기준 마련, 국가 인증* 부여 등 상용화 지원

* 기술 난이도·국산화율 등을 고려한 등급 부여 후, 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

- ‘그린쉽-K 통합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IMO, ISO) 전략을 수립하고 문서제출·회의대응 등 지원

* 친환경 관공선 기술자문단, 잠정기준 기술자문단, 국제표준화 지원단, 신규사업 발굴자문단 총 4개 분과로 구성된 ‘그린쉽-K 통합기술자문단’ 운영 중(21~)

○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노후 관공선의 대체 건조 및 운항중 선박의 친환경 개조 추진

- 각 부처·지자체 별 선박 건조·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해결*을 위해
자동설계 플랫폼 운영 및 업무 위탁관리 등 제도 개선 추진

* 표준설계 부재로 개별 설계, 개별 건조계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 선박 운항특성에 최적화된 설계 자동제공, 관공선 건조·운영 전문기관 위탁 수행

○ (민간부문) 친환경선박 보조금 확대(보조율 최대 20→30%), 민간
금융상품 결합* 등 정부지원 확대**로 민간선사 친환경 전환 유인

*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산업은행+해진공), 민간금융, 이차보전 등 결합

** LNG연료 세금감면 및 선박 전기요금 감면 등(산업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우리부)

○ (기술개발)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선박 기술은 고도화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추진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 등

□ 국적선박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지원과 황산화물·질소산화물
규제강화로 친환경선박 운항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온실가스 감축) IMO 온실가스 감축규제 도입을 위한 국내 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용과 우리부-IMO 공동 교육프로그램 이행

○ (기술·재정지원) '23년 시행되는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 충족을 위한
국내 해운선사의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

* (지원기간/예산/대상) '22~'23년 / 51.3억원 / 국제항해 선박 중 규제 미충족 선박 약700척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	'22.1월	국정40-4
	친환경선박·기자재 국가인증시스템 운영	'22.1월	국정40-4
	친환경인증선박 민간보조금 지원 1차 사업공고	'22.1월	국정40-4
	우리부-IMO 공동 개도국 온실가스감축 교육프로그램(1차) 운영	'22.1월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2.2월	
	해운분야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해운선사 CEO 간담회 개최	'22.3월	
	친환경선박 신규 R&D 사업 공고	'22.3월	국정40-4
2/4분기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개조사업 착수	'22.4월	국정40-4
	외항선 에너지효율 개선장치 장착 지원 1차 사업공고	'22.4월	
	신기술 해상실증용 선박(Test-bed) 도입 착수	'22.4월	국정40-4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사업추진단 발족	'22.5월	국정40-4
	친환경선박 전환 및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 중간점검	'22.6월	국정40-4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제해사기구의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규제 도입)	'22.6월	탄소중립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온실가스감축 규제동향 설명회 개최	'22.6월	탄소중립
3/4분기	'22년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중간점검	'22.7월	국정40-4
4/4분기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22.10월	
	우리부-IMO 공동 개도국 온실가스감축 교육프로그램(2차) 운영	'22.11월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규제(EEXI&CII) 제도설명회 개최	'22.12월	
	'23년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	'22.12월	국정40-4
	친환경선박 전환 및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 최종 점검(173척)	'22.12월	국정40-4
	친환경선박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마련	'22.12월	국정40-4
	국내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22.12월	탄소중립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운, 조선 및기자재 업체, 항만 인근 주민, 선원, 환경 시험기관 등
- (이해관계자) 해운, 조선, 기자재업체 및 선박검사기관 등

□ 기대효과

- 선박기인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달성·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수산산업진흥(Ⅰ-2-R&D⑩)				
① 해양수산산업진흥(R&D)(2046)	일반회계	- (436)	92 (642)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314)		-	68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318)		-	24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58 (305)	85 (241)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315)		49	79	
▪ 선박배출 오염예방(303)		9	6	
해양안전기술개발(Ⅲ-3-R&D⑦)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51)	일반회계	146 (146)	82 (82)	
▪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 개발(R&D)(301)		61	-	
▪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303)		85	48	
▪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306)		-	34	
해양안전기술개발(Ⅲ-3-R&D⑨)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63)	교특회계	79 (286)	51 (475)	
▪ 수소선박 안전기준개발(R&D)(303)		79	51	
해운물류지원(Ⅲ-4-재정(3))				
① 해운물류지원(6133)	일반회계	7 (1,345)	60 (1,128)	
▪ 관공선 건조 및 운영(300)		7 (197)	60 (304)	
- 친환경관공선 도입		7	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율(%) (가중치 : 50%)	100	100	100	100	친환경선박 기본계획과 보급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친환경선박 인증건수 등)와 정성지표(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마련)를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부-IMO의 협정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도국 대상 선박온실가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목표로 설정	친환경선박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마련(25%), 친환경 선박 국가 인증제도 운영(8건)(25%), 해상실증용 선박(Test-bed)도입(1척)(25%), 우리부-IMO 공동 선박온실가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25%)	방침문서, 관련공문 등
② 친환경선박 전환 및 제도기반 마련율(%) (가중치 : 50%)	100	100	100	100	친환경 관공선 전환 시행계획 및 배출규제해역 시행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친환경선박 전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친환경선박 전환 및 장치지원 척수, 시행계획 수립)를 목표로 설정하고 '23년 시행되는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 준비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홍보를 목표로 설정	친환경 선박 전환 추진(63척)(25%),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110척)(25%), '23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25%),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마련(15%), 선박온실가스 규제 설명회(2회)(10%)	방침문서, 관련공문 등

(1) 주요 내용

- 청년 유입을 위해 국적선원으로 대체 및 일-삶 양립 지원
 - (대체 고용) 외국인 대신 국적 해기사를 고용한 외항 선사에 임금차액을 지급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 (비전공자 취업) 오션폴리텍 운영 및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해운 비전공 청년, 군 전역자 등의 취업 지원
 - (선원 교대주기 단축) 현재 8개월 승선 후 휴가를 받는 상선 선원의 교대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
- 선원복지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선원의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취업·보건안전 등 지원 확대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충원(13명) 및 전문화, 선원인권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양 선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승선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 원격의료 지원 확대
- 스마트항만 일자리 안정화 및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
 - (기존 인력) 원격조종·자동화 하역장비 등 직무교육 지원으로 스마트항만으로의 원활한 전환배치 유도
 - (신규 인력) 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 제어사 등 자율운항선박 신(新)직업군에 대한 면허 및 근로기준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	283	265	257	300	외국인 선원의 국적선원 대체고용, 비전공자 대상 해기사교육 지원과 미취업자 대상 특수선 (LNG·LPG 등)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신규 해기사 양성	대체고용 지원실적+ 미취업·비전공자 대상 교육양성 인원	내부 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노사 이견 조율 필요

- 근로여건 개선 등은 선사의 비용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 간 갈등 발생 우려
- 육상근로자 및 해외 사례, 국제협약 등을 감안하여 선원, 선사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4) 기타

- (취업현황) 선원 임금의 상대적 하락,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국적선원은 감소추세이며, 50세 이상 선원이 전체 선원 약 67%로
선원인력이 심각하게 고령화(부원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 선원의 약 75%)

《 취업선원의 연령별 현황('21년말 기준) 》

(단위 : 명)

연령	합계	25세 미만	25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전체 선원	32,510	995	2,636	3,294	4,901	8,757	11,927
- 해기사	20,164	940	2,309	2,340	2,435	4,381	7,759
- 부원	12,346	55	327	954	2,466	4,376	4,168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I-4①)

선원정책과 (044-200-5741 / 574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등 지정교육기관 등을 통한 선원의 양성에도 불구하고 선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확대하여 국적선원의 취업 비중이 매년 감소

* 국적 외항선 외국인 해기사비중 : ('13) 19.0% → ('17) 26.2% → ('21) 29.7%

** 외국인해기사와 국적해기사 간 평균 약 3,000만원의 임금차액이 존재

- 사회와 단절, 가정과 삶을 불균형 등에 따른 청년 선원의 기피 현상(5년내 이직률 78%)과 선원 인력의 고령화*로 국적선원이 부족

* '21년말 기준 60세 이상 선원이 11,927명으로 총선원(32,510명) 대비 36.7% 차지

- 해운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적 해기사 및 국적 부원선원의 일정 규모 유지 필요

- 해기사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으로 일부선사가 요구하는 특수 선종 해기교육 필요성이 강화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해기 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해기사 수요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원인력 양성) 구인을 희망하는 참여기업과 구직희망자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적 해기사·부원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 (해기사) 단기 집중교육을 통한 해기사를 양성하고 현장취업 연계를 통해 해운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3급 외항 140명, 5급 내항 20명, 어선 5급 40명, 6급 20명

** 미취업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선사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특화교육(공통 직무·현장실무)을 지원하여 취업 연계 지원

- (부원) 신규 구직 희망자에게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LNG, 컨테이너선 등 특수선박) 취업 기회 제공
- (승선실습 개선) 승선실습 확대 및 실습생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해 해기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해기사 공급 추진
 - (신조 실습선 본격 운영) 해사고(부산·인천) 학생 해기역량 제고 및 해기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연수원 신조 실습선 본격 운영
 - * 한반도호(부산해사고), '21.8월 건조 한나래호(인천해사고) 총 2척 실습 투입
 -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 실습선(한우리호, 선령 31)* 대체 건조사업 추진
 - * 관공선 상태평가 결과('21.3) 즉시 대체 건조 필요, 국회 결산심사 지적('21)
 -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2.2월), 사업기간 4년, 총사업비 1,200억원
 - (교육기관 실습생 관리강화) 선사 승선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의 실습생 관리제도 마련(~'22.下)
 - * 선박직원법 및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개정 추진(~'22.下)
- (안정적 해기인력 공급)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해기사 시험 및 해기교육 수요 충족을 통해 선원 직업고용 안정성 제고
 - (해기사 시험) 방역수칙 철저히행을 통해 '22년도에 연간 4회 정기시험 및 30여회 상시시험 실시로 해기사 수요* 해소(연중)
 - * 연간 3만여명의 해기사 시험 수요에 차질 없도록 대응
 - (교육수요 충족) 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운영 등('21.2~)을 통해 안전 교육수요* 폭증 대응 및 서남해권 교육수요 편의 제공
 - * 5년 주기 안전교육수요 등 예년대비 '22년도에 7천여명 추가수요 발생 예상
- (해외취업 지원) 청년해기사 해외취업 프로젝트, IMO 해사영어 교재 보급 등 국적해기사 해외진출 지원
 - 청년 해기사에 대한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40명)

- IMO 표준 해사영어 자가학습용 동영상강좌 제작('22.下, 80강좌)

* ('21.上) IMO 표준 해사영어교재(12권) 보급, ('21.下) 동영상 강좌(40강좌) 제작·보급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적부원 양성사업 선사 개별 설명회 개최(부산, 인천, 제주)	'22.2월	국정 40-5
	오션폴리텍 외항상선 3급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 개시	'22.2월	국정 40-5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2.2월	국정 40-5
	오션폴리텍 어선 5급·6급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 개시	'22.3월	국정 40-5
	제1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2.3월	국정 40-5
	국적부원 양성사업 참여선사 채용수요조사 및 MOU 체결	'22.3월	국정 40-5
	국적부원 양성사업 제1차 채용박람회 개최	'22.3월	국정 40-5
2/4분기	오션폴리텍 내항상선 5급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 개시	'22.5월	국정 40-5
	제2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2.6월	국정 40-5
3/4분기	청년해기인력 맞춤형 특화 교육생 선발	'22.7월	국정 40-5
	해외취업 프로젝트 교육생 선발	'22.7월	국정 40-5
	해외취업 프로젝트 교육 개시	'22.8월	국정 40-5
	실습생 안전확보를 위한 선박직원법 개정추진	'22.9월	국정 40-5
	제3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2.9월	국정 40-5
	부산·인천 해사고등학교 교육훈련 관련 관학 협의회	'22.9월	국정 40-5
	국적부원 양성사업 제2차 채용박람회 개최	'22.9월	국정 40-5
4/4분기	제4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2.11월	국정 40-5
	교육기관의 선사 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정추진	'22.12월	국정 40-5
	IMO 해사영어 동영상강좌 제작(80강좌)	'22.12월	국정 40-5
	2022년 선박관리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22.12월	국정 40-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대, 해사고, 오션 폴리텍 등 선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일반국민, 해기사, 해운산업계 관련 업·단체 등
- (이해관계자) 해운업·단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국적선사 등

□ 기대효과

- 양질의 해기사를 적기에 공급하여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된 인력의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습교육을 내실화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해양산업발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운인력양성 지원(Ⅲ-4-일반재정②)			
① 해운인력양성 지원(6132)	일반회계	528.3	539.6
▪ 해사고등학교 지원(300)		90.1	128.3
▪ 해양수산연수원 지원(302)		438.2	41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율(%) (가중치 : 40%)	97.7	90	90	95	국적선대 감소 및 코로나 19로 인한 해운경기 불황을 고려하되 업계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적극적인 취업 지원 추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 이상 도전적인 목표 설정	① 해사고 목표 취업률 (80%) 대비 달성율(10%) ② 오션폴리텍 목표 취업률(90%) 대비 달성율 (20%) ③ 부원 양성 및 취업지원 목표(150명) 대비 달성율(35%) ④ 청년해기 인력 취업 지원 목표(150명) 대비 달성율 (35%)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등
②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승선실습 제도개선 추진율(%) (가중치 : 60%)	100	100	100	100	국적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해기사 시험 시행, 승선취업 프로젝트 운영, IMO 표준 해사영어 온라인 강의 제작, 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함	① 정기적인 해기사 시험(4회) 시행(25%) ② 승선취업프로젝트 운영(25%) ③ IMO 표준해사영어 온라인 강의 제작(25%) ④ 실습생 관리제도 개선(25%)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등

②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I-4②)

선원정책과 (044-200-5745 / 5743 / 5747)

□ 추진배경 (목적)

-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확대 및 근무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 사회와 단절 등 선원직 매력도 감소 등에 따라 국적선원의 육상직군으로 이직이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해기사는 국적 해기사 대비 평균 약 3천만원의 임금차액 존재

** 외항선 외국인 해기사 비율: ('13) 17.9% → ('17) 26.2% → ('21) 32.6%

*** 외국인 부원선원 비율: ('13) 34.9% → ('17) 41.9% → ('21) 66.5%

**** 국적선원 이직 현황: ('13) 6.1% → ('17) 23.4% → ('21) 16.9%

- 선원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하고 싶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원의 양성 및 교육에서부터 취업, 복지, 안전, 재해관리까지 원스톱 관리·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
 - 증가하는 외국인어선원(20톤이상 46.9%차지)의 과도한 송출비용, 열악한 근무여건 등 인권침해, 근로여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보장 및 송출입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20.6) 및 이행방안('20.12)을 마련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 실시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원생애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선원 양성·교육에서부터 취업, 복지·안전, 재해관리까지 원스톱 관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 구상을 위해 노·사·정 협의 추진

* 교대주기 단축 및 선원채움 공제 도입 등 전주기 복지정책에 대한 노·사·정 협의

- (선원정책 수립)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선원 복지, 양성, 교육훈련의 시행을 위한 '23년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

* 3대 전략: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

- (근로여건 개선) 선원직 매력도 제고를 위한 근로제도 개선 및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 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선원의 급여수준을 육상직 급여수준 대비 해상근로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노·사 협의를 통한 '23년 선원최저임금 고시('22.12)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선원들의 자유로운 교대 및 환자 이송 등이 어려운 선원 및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전파 등 추진
 - 임신한 여성선원의 모자보건 권리 확대를 태아 검진시간 도입, 선원의 재해보상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실태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점검(2회) 실시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20.12.)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사·정 합동 점검 실시(분기 1회)
 -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선주·노조단체, 정부, 학교 등 유관기관 간의 선원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
 - 선원근로감독관의 전문적인 근로감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2회) 시행
- (체감형 복지) 선원 직업을 매력화하고, 안정적인 선원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 수혜자인 선원 중심의 보편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선원 복지증진 사업 지속 추진
 - 무료법률구조, 교통 편의시설 운영, 장해선원 재활지원, 선원 가족 장학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선원복지 사업의 지속 추진
 - * (무료법률구조) 선원들에게 법률상담, 노무상담 지원 및 무료 법무업무 지원
 - ** (교통 편의시설) 전국 10개 항만의 항만구역 내 셔틀버스 운영하여 선원들의 이동편의 제공

- 해상근로에 종사하는 선원들에게 자기개발 기회 부여, 여가시간 활용 등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원전자도서관 운영
 - * 국적 선원들에게 전자 단말기(스마트폰, PC 등)를 통한 전자책 대여
- 서남해권 선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선원 편의시설(숙소, 휴게실) 등 운영 개시('22.4월)
 - * 선원복지회관: ('18) 24개소 → ('20) 26(대전항·성산포항) → ('22) 27(목포항)
- (의료 복지) 사회와 단절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들에게 주기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수준 향상
- 원양선박 승선 선원에게 원격진료 서비스(육상 의료인↔선상 선원) 제공을 위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확대(120척→140척) 추진
 - * 원양선박에 위성통신 등 ICT 기술을 활용,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①건강상담 서비스, ②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 고립된 근로환경에서 가족·사회와 단절된 선원들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선원마음건강센터* 운영
 - *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원격 상담(상담톡, 메일 등), 검진 및 힐링프로그램 제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명절 대비 특별 선원 근로 감독 실시	'22.1월	국정 40-5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22.2월	국정 40-5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1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2.3월	국정 40-5
	'21년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 신규선박 20척 선정(총140척)	'22.3월	국정 40-5
2/4분기	근해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T/F 회의	'22.4월	국정 40-5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1차 회의	'22.4월	국정 40-5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개소식	'22.4월	국정 40-5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22.5월	국정 40-5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2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2.5월	국정 40-5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교육	'22.5월	국정 40-5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명절 대비 특별 선원근로감독	'22.8월	국정 40-5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3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2.8월	국정 40-5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2차 회의	'22.9월	국정 40-5
4/4분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교육	'22.10월	국정 40-5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22.10월	국정 40-5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3차 회의	'22.11월	국정 40-5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4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2.11월	국정 40-5
	'23년 선원최저임금 고시	'22.12월	국정 40-5
	태아 검진시간, 압류방지 통장 도입 등 선원법 개정	'22.12월	국정 40-5
	'23년 선원정책시행계획 수립	'22.12월	국정 40-5
	해양원격의료지원 '22년 시범사업 최종 보고회	'22.12월	국정 40-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내·외국인 선원 및 선원 가족
- (이해관계자) 선주, 선주단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박관리
등록업체 및 선원노동조합 등

□ 기대효과

- 선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
- 선원복지 증진을 통한 선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선원 수급
안정화로 해운수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선원근로 복지 향상 (Ⅲ-4 일반재정①)				
① 선원근로 복지 향상(6131)		일반회계	76	79.6
▪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301)			63	66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305)			9	9
▪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310)			4	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선원근로여건 개선 추진율(%) (가중치 : 40%)	100	100	100	100	선원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이행 점검,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 및 외국인점검,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 선원근로감독 직무교육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	①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이행 점검(30%, 4회) ② 특별근로감독·실태 점검(30%, 4회) ③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20%, 3회) ④ 선원근로감독 직무교육 실적(20%, 2회)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② 선원복지 증진사업 추진율(%) (가중치 : 60%)	신규	100	100	100	보편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선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원법 개정, 선원복지회관 운영 개시, 원양선박 선원대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완료 여부 등을 성과지표의 목표치로 설정	①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확대 달성율(20%, 140척) ②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20%) ③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운영 개시(20%) ④ 23년 선원최저임금 고시(20%) ⑤ 23년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20%)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③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확대(I-4-③)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4)

□ 추진배경 (목적)

- IT 기술 및 스마트 기술의 도입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해운업계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인재 양성 지원
- 물류 전공 위주의 해운물류산업에 IT 기술 등을 가진 새로운 인력을 양성·유입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과기관계장관회 '19.1), 「수출입물류스마트화 추진방안」(현안점검회의 '20.2), 「스마트해운물류확산전략」(경제중대본 '21.4) 등에서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지원 의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 확보) 스마트 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인력 선발
- (자격제도 도입) 물류 지식과 ICT지식을 겸비한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가 자격제도를 통하여 인재풀을 확대하고 자긍심 고취
- (스타트업 등 사업화 지원) 스마트 해상물류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기초 구축
-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R&D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인력양성
- (스마트 해상물류 전문가 매칭) 기업 실무 전문가와 대학생을 매치하여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해상물류와 ICT 융합인재 양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22.3월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자 자격제도 등록 요청	'22.3월	
2/4분기	스마트 해상물류 전문가 매칭 및 프로젝트 착수	'22.4월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 프로그램 일정 공고	'22.5월	
3/4분기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자 선발 시행	'22.7월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 프로그램 운영	'22.8월	
4/4분기	스마트 해상물류 경진대회 개최	'22.11월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 프로그램 성과발표	'22.12월	
	스마트 해상물류 전문가 매칭 및 프로젝트 성과 등록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해운업계 종사자 등
- (이해관계집단) 해운업·단체, UPA, UNIST,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 기대효과

- 새로운 물류 서비스 개발 및 스타트업 발굴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
- 해운물류산업에 IT 등 새로운 배경의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가능한 인력풀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운물류지원(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일반회계	1,313	1,129
▪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308)			50.8	48.6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10)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실적(명) (가중치 50%)	신규	신규	55	60	'21년도 실적인 55명을 감안하여 '22년에는 10% 상향된 60명을 목표로 설정	Σ(스타트업 창업인원)	내부 보고자료 보도자료
② 전문가 매칭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인력양성실적(명) (가중치 50%)	신규	신규	231	253	'21년도 실적인 231명을 감안하여 '22년에는 10% 상향된 253명을 목표로 설정	Σ(전문가 매칭 인력양성인원)	내부 보고자료 보도자료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노후·유향항만 재개발 및 어항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국민들이 방문·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연안경제 활력 제고
- 연안침식 등 재해에 취약한 연안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해양사고 대처능력 향상 등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도모

◇ 그간의 성과

-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5년간 총 90개소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 안전관리 강화로 최근 5년 인명피해('17~'21, 591명)는 종전대비('12~'16, 908명) 34.9%(317명) 감소
- 해양안전체험관(경기 안산) 개관('21.6), 국민해양안전관(전남 진도) 건립('21.12),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어선형 개발('21)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연안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어항 개발 및 항만 재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 연안침식에 대응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자연재해로부터 연안 안전망을 확보
- 해양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 중대 사고 및 취약선박 집중 안전관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0번(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번(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02번(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 없는 개최 추진) 등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8	1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① 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실종, 명)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건)
	① 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① 항만재개발 추진율(%)
	②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북항재개발 추진율(%)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 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① 연안침식관리 강화	①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②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 안전항만 강화	① 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강화 추진율(%)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건)
	①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①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 체계 선진화 평가(점) ②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②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① 국적선 1천척당 해양사고 피해 지수 저감(점)
	③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① 안전·복지형 표준 선형 어선의 등록 증가율(%) ② 안전·복지형 표준 선형 어선의 에너지 절감율(%)
	④ 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	① '해로드' 앱을 활용 구조신고 비율(%) ② 등대스탬프투어 완주자 인원(명)

(1) 주요내용

□ 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항만재개발 추진(6개소) 및 소규모 항만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 광양항 3단계, 부산북항 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목포남항, 구룡포항,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 및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 BIE 실사('23.3월)와 박람회 개최시기('30.5~10월)에 맞추어 부지 마련

- 2단계 북항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 박람회부지 내 자성대, 양곡, 관공선 부두 및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 이전 추진

- 박람회 유치 활동 적극 전개

- BIE 회원국 고위급 대상 외교 계기 시 부산 유치 교섭 적극 전개

□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 조성

- 「연안관리법」 개정('24)으로 연안관리 근거, 통합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고위험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추진

- 강화된 안전기준(기존 50년→100년 빈도)을 갖춘 재해안전항만 및 재해 대응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어선·여객선 등 취약선박 대상 무상점검·수리 서비스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권역별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추진

- 체험관, 박물관, 대학·고교 등을 연계한 해양안전문화 종합 클러스터 구축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해양사고 인명 피해 (사망·실종, 명)	145	102	98	126	120	100	5년간('17~'21년) 평균 해양사고 인명피해 발생 건수(118.2명)를 기준으로 매년 3%씩 감축 - 22년도 목표 : $118.2 \times 0.97 = 114$ 명 - 23년도 목표 : $118.2 \times 0.94 = 111$ 명 - 24년도 목표 : $118.2 \times 0.91 = 107$ 명 - 25년도 목표 : $118.2 \times 0.88 = 104$ 명 - 26년도 목표 : $118.2 \times 0.85 = 100$ 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우려 지속

- 국민의 해양이용 다변화 및 증가추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을
낚시어선 · 레저선박 등 소형선종과 일반국민까지 확대 · 강화 필요

□ 해양자원 · 에너지 개발 등 연안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연안재해 피해도 증가

-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 평균 2.90mm/년
- ** 연안침식 우심률의 비율 증가 : 43.6%('14)→58%('16)→61.2%('19)
- *** 자연재해 피해액 중 연안지역 비율(%): ('11)45%→('12)87%→('13)9%→('14)74%→('15)98%

- 해양 신산업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연안이용 및 보전수요의
합리적 조정, 연안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타 분야 사례 등을 참고해 2년간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유예기간 확보* 및 제도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적용대상 순차적 확대 추진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해사안전기본법」)을 통해 도입 근거 및 업계의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유예기간(2년) 중 시범사업 추진 근거(부칙) 마련

- 해양안전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에 대한 폭넓은 체험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안전교육, 레저체험, 직업체험, 해양역사·문화의 이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양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

- 이에, 단순 체험·교육에 그치지 않고, 해양안전문화를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해양안전문화 클러스터’ 조성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1) 주요 내용

□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경제 거점 조성

-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활용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항만재개발 추진

* 노후·유휴화된 항만도시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개조

□ 항만 재개발 활성화 및 체계적 항만 관리

- (부산) 북항 1단계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우선 준공하고, 2단계는 예타 완료('22.下)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 1단계 사업은 '22년까지 부지조성 및 주요 기반시설 준공, '24년까지 지하철도, 오페라하우스, 신규시설(트램, 공공콘텐츠) 등 일부 사업 추진

- (인천·광양·거제)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는 연내 준공하고, 인천내항 1·8부두는 우선개방 협의, 묘도·고현항*도 사업 추진 가속화

* (묘도) 에너지허브(LNG-태양광 열병합 발전시설 등) 조성 / (고현) 상부시설 분양(1·2단계 부지) 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	-	-	1	1	항만 재개발 지역 확대를 위해 매년 1개소 이상 항만에 대한 신규 사업계획을 공모(제3자 제안 공모 포함)하여 사업시행자 모집 추진 - 최근 3년간 재개발 사업계획 공모 실적(연평균 0.3건)을 상회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항만재개발 사업 직접 공모 또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항만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 계획 수립시 지자체, 항만공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반영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
- 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 사업 추진 전 적극 소통 및 공감대 형성

□ 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절차 간소화) 부지 적기 제공(‘27.3)을 위해 38개월 소요되는 재개발 2단계 관련 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20개월로 단축 필요
- (해결방안) 기존 부두(관공선, 곡물, 컨테이너), 부산진역 ‘컨’ 야적장 이전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 타 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신속 추진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Ⅱ-1-①)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3 / 5984)

□ 추진배경 (목적)

- 노후·유희화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하여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 지역의 도시경쟁력 증진
-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항만 공간이 항만도시의 '경제·산업·문화 거점'이 되는 항만재개발 추진

<제3차('21~'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국정과제41-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 항만재개발 신규 추진(6개소, ~'27) 및 소규모 항만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천항 영종도) 영종·청라지구와 연계한 종합 관광레저단지 부지조성 사업 지속 추진(~'23) 및 상부 시설 유치 확대
 -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준공('22.1)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IPA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22.3)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 '22년 2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2.하)
- (광양항) 묘도 투기장(312만㎡, '17~'26) 항만·에너지 허브단지 조성 지속 추진 및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실시계획 수립 등
- (고현항) 3단계 사업('19~'24) 정상 추진, 문화공원 등 공공·기반 시설의 주민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계·착공

- (구룡포항) 지역특산물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안 공모·선정
- (금란도·장항항) 지역 상생 항만재개발을 위하여 광역·기초·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재개발 로드맵 마련 착수
- (용호부두) 항만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22.1)
- (제도개선)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상대상자 지정 등 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고시) 개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공사 준공	'22.1월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재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22.3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	'22.3월	국정 41-5
	금란도·장항항 재개발 추진협의체 구성	'22.3월	
	부산항 용호부두 재개발 설문조사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	'22.3월	
2/4분기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추진	'22.5월	
	금란도·장항항 재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	'22.6월	
3/4분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연결교량 실시설계 완료	'22.8월	
	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공모	'22.9월	국정 41-5
4/4분기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22.10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2.10월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역주민, 지자체, 전 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부두 운영사 및 항만근로자, 지자체,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항만 공간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원도심 활력 제고 및 지역 생활·문화거점 조성
- 산업시설, 해양관광·문화시설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항만 재개발(Ⅲ-1-일반재정⑬)			
① 항만 재개발(5061)	교특회계	155	158
▪ 기타항만 재개발(301)		155	1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항만 재개발 추진율 (%)	95	100	100	100	'22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목표치로 설정	①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20%) ②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20%) ③ 고현항 사업계획 변경(20%) ④ 광양항 3단계 실시계획 승인(20%) ⑤ 금란도·장항항 재개발(20%) - 추진협의체 구성(5%) - 추진협의회 운영(5%×3회)	-고시문 -관련문서 -고시문 -관련문서 -관련문서

2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Ⅱ-1-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051-604-3111 / 3112)

□ 추진배경 (목적)

- 노후·유희화된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배후지역 연계개발을 통해 원도심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축으로 육성
 -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및 비즈니스 산업 등 재창출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및 민간자본 유치 추진
- ⇒ 부산의 경제, 문화, 역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북항통합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부산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102-3번)’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 1단계 부지조성 및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함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 및 북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박람회 핵심지원시설이 위치할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공공 시설(경관수로, 친수공원, 보행데크 등) 대국민 개방(5월) 및 부지 조성 완료(12월)

* 문화공원 26천㎡ 및 야영장 8천㎡ 우선 개방 완료('21.12.23)

- 미매각 부지(18만㎡)에 대해 조망권 개선 등 공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부지 사업화(매각 등) 추진

* (민자유치) 조성 토지(31만㎡) 분양 등을 통해 13만㎡ 투자유치(43%)

- 박람회장으로 활용될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여 BIE 현지실사('23.3.) 시 2030부산세계 박람회 적극적 유치 의사 표명

- 박람회 일정('30.5~10월)을 고려하여 실시협약,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4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

- 박람회 부지 조성방안 확정을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실현 가능한 이전 및 재배치 계획 수립 추진

- 자성대부두, 양곡부두, 관공선부두 및 철도시설 이전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22.1월	
	부산항 북항 1단계 현장 간담회 개최	'22.2월	국정102-3
	부산진역 CY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2.3월	국정102-3
2/4분기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2.4월	국정102-3
	부산항 북항 1단계 문화공원 등 친수공간 개방	'22.5월	국정102-3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사업비 산정 검토용역 발주	'22.6월	
3/4분기	부산진역CY 이전사업 추진 관계기관 회의	'22.9월	국정102-3
4/4분기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2.10월	국정102-3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부산진역CY 이전사업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2.12월	국정102-3
	부산항 북항 1단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공사 준공	'22.12월	국정102-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부산시, 부산시민 및 전 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부두 운영사 및 항만근로자, 지자체,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및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제고
 - 부산북항 항만재개발을 통해 약 20만명의 고용창출과 약 3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대
 - * (북항1단계) 생산유발효과 17조 9,3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5,929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2만명
 - * (북항2단계) 생산유발효과 18조 2,31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3,632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8만명
 -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약 4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8조원과 고용유발효과 약 50만명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항만재개발(Ⅲ-1-13(항만개발 및 관리))				
① 항만재개발(5061)			700 (858)	819 (947)
▪ 부산북항 항만재개발(300)	교특		700	8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illegible]

(1) 주요 내용

□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공간조성

- 해양의 직접 작용으로 연안침식 등 재해에 취약한 연안공간의 통합·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 추진
 - 74개 연안 취약지구*를 지속 정비하고, 집행·추진이 저조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회계 변경 추진
- * 국가 20개소(신규 6개소, 계속 14개소) / 지자체 54개소(신규 15개소, 계속 39개소)
- 사전 예방적 공간관리를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 협의를 통한 참여형 거버넌스 운영

□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안전항만 구축 추진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발생빈도 증가 등으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된 안전항만 정책 추진
- 강화*된 설계기준을 충족하여 100년 재현빈도(기존 50년)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항만 구축 프로젝트 추진
 - * 심해 설계파 개정('19), 설계파 산정방식 개선('20), 설계파 재현 빈도 개정('21) 등 기추진
- 재해안전항만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취약 지구 정비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 재해안전항만 구축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 시민 안전이 보장되는 항만에는 방재언덕 완충공간 상부를 활용하여 친수·문화공간 제공
- 자동제어 기술(AI, IOT 등) 도입하여,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는 스마트 신속 대응 항만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88.2	96.1	96.7	100	'항내 정온수역 및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외곽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축조'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확인 지표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X 100	내부 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력 확보 시급

- 해양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태풍·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연안침수, 재해쓰레기 발생, 생태계 교란 등 기후재난 빈번·강화 우려

* (표층수온) '68~'20 1.27°C ↑(세계 평균 0.53°C) (해수면) '71~'06 2.56mm/yr ↑(세계 평균 2.36mm/yr)

□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으로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

-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연안침식관리 강화(Ⅱ-2-①)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3 / 5984)

□ 추진배경 (목적)

-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및 환경 친화적인 연안공간 조성을 통해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 추진
- 연안침식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연안침식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등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강릉 하시동지구 등 신규 21개 지구를 포함한 총 74개 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구별 추진상황 점검 실시
 - 국가 20개 지구, 지방자치단체 54개 지구 등 연안정비사업 시행, 상·하반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2회)
- 연안정비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효과 달성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준비·설계·시행·사후관리 등 연안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효과 달성을 위해 시행 주체별 중점 시행사항을 명확화하고 지속 관리
- 연안침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안 마련, 실태조사, 정밀조사, 시설물 사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연안관리법 개정안 마련, 실태조사(360개소), 정밀조사(5개소),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지침 개정(6월), 효과평가 시범실시(2개 지구) 등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추진

- 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 예산확보 및 기존 관리구역 침식 피해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 관리협의회 개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안정비사업 추진 효과 제고 방안 수립	'22.1월	
	'22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마련	'22.2월	국정 41-5
	'22년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추진계획 마련	'22.3월	
2/4분기	연안정비사업 신규 5개소 실시계획 수립 착수	'22.4월	국정 41-5
	상반기 연안침식관리협의회 개최	'22.5월	
	연안침식 정밀조사 착수	'22.5월	국정 41-5
	상반기 연안정비기본계획 시행현황 점검	'22.6월	
3/4분기	연안침식, 연안정비, 사후관리 관련 워크숍 개최	'22.8월	
	하반기 연안침식관리협의회 개최	'22.9월	
4/4분기	하반기 연안정비기본계획 시행현황 점검	'22.11월	
	연안관리법(연안침식) 일부개정안 마련	'22.12월	
	연안정비사업 준공(2개소)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연안지역에 생활기반을 둔 지역주민, 연안 이용 국민
- (이해관계자) 연안 토지소유자, 연안개발사업 시행자 등

☐ 기대효과

- 연안침식 및 연안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연안침식 저감 대응기술 및 관측기술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침식 및 연안재해 관리대응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연안환경관리(I -1-일반재정③)				
① 연안환경관리(1034)		일반회계	471 (507)	609 (653)
▪ 연안정비(302)			471	609
해양 및 수자원 관리(I -1-일반재정⑥)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1062)		균특회계	360 (501)	401 (537)
▪ 해양 및 수자원관리(301)			360 (501)	401 (537)
- 연안정비			360	401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1063)		균특회계	8 (15)	8 (15)
▪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301)			8 (15)	8 (15)
- 연안정비			8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46	4.3	9.1	14.0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9)에 따른 연차별 추진율로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22년에는 4.9% 증가한 것을 목표치로 설정	(집행누계 금액/연안정비 사업총사업비) ×100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9), '22예산명세서

2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 안전항만 강화(Ⅱ-3-②)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 5972)

□ 추진배경 (목적)

- 기후변화 및 항만구조물의 노후화 등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 안전항만 기술개발 및 제도 정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정과제41-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파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설계파 추산방식을 반영한 재해예방 항만시설 보강계획 수립

<한국형 설계기준 전면 개정>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설계기준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 설정

- (보강계획 수립) '19~'21년 개정*한 심해설계파 및 설계파 산정 방식 설계기준 등을 반영, 항만시설 중장기 보강계획**(22~30) 수립

* 기후변화에 항만시설 설계기준 개정 : 심해설계파 개정('19), 설계파 산정방식 개선('20), 설계파 재현 빈도(50년 주기→100년 주기) 개정('21) 등 설계기준 강화

** 기존 재해 대비방식(선적 방어)에서 재해 안전성을 높이고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면적방어의 방식을 도입하여 개념 전환을 추진하고, 자동제어 기술(AI, IoT 등) 도입

- 항만시설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소를 관측·계측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파랑 관측망 구축계획과 항만별 지진계측기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한국형 설계기준 전면 개정 추진) 한국의 독자적인 항만 설계 기준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 설정 및 로드맵 마련

- 국내 해양환경 및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한 최신 설계기술 확보 및 안전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한 항만설계기준 전면 개정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해 안전항만 구축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22.3월	국정41-5
	한국형 설계기준 전면 개정을 위한 개정 방향 설정 회의	'22.3월	
2/4분기	재해 안전항만 구축 계획 관계기관(해군 등) 협의	'22.6월	국정41-5
	한국형 설계기준 전면 개정 방향 설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2.6월	
3/4분기	재해 안전항만 구축 계획 해양공간 적합성 평가 협의	'22.8월	국정41-5
	한국형 설계기준 전면 개정 로드맵 작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2.9월	
4/4분기	재해 안전항만 구축 사업계획(안) 마련	'22.12월	국정41-5
	한국형 설계기준 전면 개정 로드맵 마련	'22.12월	

- ('21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한국형 기술기준 전면 개정 추진 방안 마련(12월), 제2차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계획 마련(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국민, 지역주민, 설계사, 시공사,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수출입 기업,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등
- (이해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수출입 기업,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등

□ 기대효과

-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 및 태풍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목표 달성
- 자동제어 기술(AI, IoT 등) 도입으로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는 스마트 신속 대응 항만구축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설계기준 개정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비 항만 기술력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일반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① 일반항 건설(5059)			
▪ 일반항(302)	교특회계	999	880
- 설계과 개정에 따른 재해안전항만구축 보완		31	-
- IoT기술을 활용한 파력계측 시스템 구축		-	10
-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8	10
- 한국형 설계기준 확보를 위한 개정용역		-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강화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기후변화 대비 재해 안전항만 강화 주요 과정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 설정(㉠~㉢)	㉠ 재해안전항만 중장기 보강계획 수립(60%) ㉢ 한국형 설계기준 로드맵 마련(40%)	-내부문서 -내부문서

(1)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촘촘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맞춤형 재난대응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 취약계층 현장체험 추진
- 항행장애물 제거체계 구축,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범정부 재난 대응 합동훈련, 재난안전 협의체 구성 등 추진

□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 (중대재해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관련 예방활동, 법정 의무사항 이행관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안전보건 조치 강화
- (대형해양사고 예방) 여객선 및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위험물 운반선 대상 전담 해사안전감독관 지정 및 연중 집중관리*

* 연안여객선 전수점검(휴가철·설·추석) 및 모니터링 강화, 노후 내항선 중점점검 등

- (안전문화 정착) 해양수산 종사자·바다 이용 국민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프로젝트* 추진('22~)
- (안전서비스 강화) 어선, 사고이력·고선령 소형선 원스톱 서비스 (점검·수리·교육 등) 제공을 위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23)

* 인천 남항 및 목포 북항 센터 착공('22.1), 권역별(남해·동해권) 단계적 확대 추진

□ 선박안전 강화

- (어선사고 예방) 장거리 어선위치장비를 보급(2,100척, ~'23)하고, 노후어선을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대체건조 지원 확대

- 원양어선은 안전편드를 확대*(~'27, 총 14척)하고, 중고선 개조 및 안전설비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22~, 36척)

* 노후 심화 업종인 채낚기, 봉수망 우선 지원, 향후 참치연승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여객선 안전) 연안여객선 운항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대화 편드 활성화로 여객선 건조 시 선사부담 완화(정부지원 용자 30→60%)

□ 항로표지 스마트화 및 기능확대·시설확충

- (항로표지 스마트화) 항로표지에 ICT 기술(LTE-M 등 다중통신)을 적용하여 디지털정보(항로표지 기능장애, 조류, 기상 등) 실시간 수집·제공
- (기능확대·시설확충) 해로드앱 개선, 해상안개관측시설 구축 확대, 위험지역 표지시설 확충 및 노후 항로표지 개량·관리

* (기상청) 시정계 설치·운영('19~'22, 총 100기) / (해수부) 등대 부지 및 장비설치 협조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	2,971	3,156	2,720	2,735	5년간('17~'21년) 평균 해양사고 발생건수(2,820건)를 기준으로 매년 3%씩 감축 - 22년도 목표 : $2,820 \times 0.97 = 2,735$ 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선박안전·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정부·규제중심에서 참여·맞춤·지원형으로 전환 중
- 국민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고 고위험선박, 빈발 해양사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및 각종 규제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바다에서도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대, 특히 선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강화 등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 종사자 및 바다 이용 국민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부족, 위험불감증 등으로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 발생*

* (어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245명 중 86명(35%)이 해상추락 으로 발생, 사망자(59명) 97%가 구명조끼 미착용

(비어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74명 중 17명(23%)이 해상 추락으로 발생, 사망자(14명) 전원 구명조끼 미착용

□ 해양수산분야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태풍, 폭염에 따른 고수온 등 이상기후 심화로 대형재난 가능성에 대한 국민우려 증가

* 최근 5년('16~'20)간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액은 연평균 334억

-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책무는 강화되고 있으며,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단계에서의 대비·대응 태세확립이 요구

□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으로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

-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갈등 해소 필요
- 대국민 캠페인·홍보*, 무상보급, 연구개발, 의무화 등을 중점·지속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해양안전문화로 정착

* 도로교통분야 자동차 안전띠의 경우, 단계적 착용 의무화('81~'18) 추진 및 30년 이상 다각적 교육·캠페인·홍보·단속 등을 통해 착용률(앞좌석) 90% 수준 달성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Ⅱ-3-①)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3 / 5857)

□ 추진배경

- 해양수산 재난유형의 다양화 및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 기대치 증가 등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관리 역량 요구
-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 실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재난유형별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 (추진사항) ①연간관리계획 수립, ②매뉴얼 정기점검, ③매뉴얼 담당자 교육 강화, ④매뉴얼 전주기 종합개선계획 마련
- (재난안전포럼 운영)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수산 재난안전 포럼’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재난관리 역량강화
 - (추진사항) ①재난관리 업무별 컨설팅·자문 및 현장점검 참여, ③분과별 회의개최, ④운영실적 평가·환류
- (재난대응 강화) 하절기·동절기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추진
 - (추진사항) ①재난대응계획수립, ②종류별 훈련(안전한국훈련, 상황전파훈련 등), ③재난안전 체험활동 ④재난안전인문학 강좌 실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재난매뉴얼 관리계획 수립	'22.1월	국정 40-4
	설 연휴 해양 재난사고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2.1월	국정 40-4
	재난매뉴얼 운영·작성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교육	'22.3월	국정 40-4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제출	'22.3월	국정 40-4
	해양선박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참석	'22.3월	국정 40-4
2/4분기	봄철 농무기 해양 재난사고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2.4월	국정 40-4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22.5월	국정 40-4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22.5월	국정 40-4
	재난대비 상시훈련	'22.5월	국정 40-4
	재난매뉴얼 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	'22.6월	국정 40-4
3/4분기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22.9월	국정 40-4
	재난매뉴얼 담당자 워크숍 개최	'22.9월	국정 40-4
	추석 연휴 해양재난사고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2.9월	국정 40-4
	재난안전인문학 강좌	'22.9월	국정 40-4
	취약계층 재난안전 체험활동	'22.9월	국정 40-4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확정	'22.9월	국정 40-4
4/4분기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행안부 일정 고려)	'22.10월	국정 40-4
	겨울철 해양 재난사고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2.10월	국정 40-4
	겨울철 재난대응계획 수립	'22.11월	국정 40-4
	재난매뉴얼 현황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2.11월	국정 40-4
	재난관리 전문가 회의	'22.12월	국정 40-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수산 소분야 관련 종사자, 시설 등 이용자
- (이해관계자) 국가안보실,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해수부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청, 어업단, 항만공사 등) 등

□ 기대효과

-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해양수산 재난관리정책 실효성 제고, 분야 간 접목을 통한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및 전문성 향상 기대
- 재난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및 실효적인 훈련·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비·대응태세 유지, 직원의 역량향상 및 편차해소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13	15
▪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307)			13 (13)	15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평가(점) (가중치 50%)	신규	신규	80	85	○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대상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점의 85점 이상 획득을 목표로 설정	전문가 대상 평가 (설문조사)결과	내부자료(보고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②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 재난매뉴얼 관리 체계화(35%) - 재난관리체계 강화·개선에 필수적인 재난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 수립, 실적 달성 ○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35%) - 취약계절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및 효과적인 훈련·교육 추진 ○ 재난관리 중요성 인식제고(30%) -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설정	① 0.5×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점검·교육 4회 ② 0.5×해양선박 사고 매뉴얼 관리개정실적 (1회) ① 0.5×취약 계절별 대책 수립·시행(2회) ② 0.5×재난대응 훈련(4회) ① 0.5×재난안전 인문학 강좌 (1회) ② 0.5×국민안전 교육 실태점검 (1회)	내부자료(보고자료), 보도자료 등

②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Ⅱ-3-②)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 581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지속, 사고예방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해양안전관리 혁신요구 증대
 - * 화물선 침몰('17, 22명), 낚시어선 충돌·침몰('17, 15명), 어선 화재('19, 12명), 어선 전복('21, 7명)
- 선진국형 민간자율관리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회로 성숙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안전관리 불가피
 - 체계적인 대책수립·이행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해사안전·해양환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정부 안전계획) 해사안전증진을 위해 제3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2~'26)에 따른 '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협업강화) 안전대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유관부처·단체, 지자체 등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 (취약분야 안전대책) 기상특성 및 선종별 취약요인을 고려한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수립·시행 및 현장이행 점검 추진
- (현장이행력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계획, 취약선종 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등
-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해양안전 체험관(진도) 개관,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 (국제해사분야 영향력 강화) IMO 주요회의 대응, IMO 회원국 감사('22.11월 예정) 성공적 수감,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사업* 추진 등

* 국민편익 증진 여부를 고려하여 '22년 IMO 기술협력사업 추진

※ '국제해사분야 영향력 확대('21년 6-3-2과제)'는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과 해양안전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관리과제 통합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22.1월	국정 40-4
	'22년 해사안전 지도·감독 계획 수립·시행	'22.1월	국정 40-4
	'22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22.2월	국정 40-4
	'22년 선박 안전관리체제 제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22.2월	국정 40-4
	카페리화물선 점검계획 수립·시행	'22.2월	국정 40-4
	IMO 회원국감사 점검계획 수립	'22.2월	국정 40-4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1.3월	국정 40-4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회의 개최	'22.3월	국정 40-4
	IMO 특별이사회 대응	'22.3월	국정 40-4
2/4분기	선박 통항로(항만, 연안수로) 안전성 평가 추진	'22.4월	국정 40-4
	IMO 기술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2.4월	국정 40-4
	해양안전문화 홍보계획 수립·시행	'22.5월	국정 40-4
	해양교통안전지수 도입 추진	'22.5월	국정 40-4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운영 개시	'22.5월	국정 40-4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22.6월	국정 40-4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2.6월	국정 40-4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22.6월	국정 40-4
3/4분기	세계해사대학(WMU) 장학생 소식지 발간	'22.7월	국정 40-4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22.8월	국정 40-4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22.8월	국정 40-4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2.9월	국정 40-4
	2022 한국해사주간 행사 개최	'22.9월	국정 40-4
4/4분기	해사안전감독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2.10월	국정 40-4
	2022 모의 IMO 총회 개최	'22.10월	국정 40-4
	IMO 회원국감사 수감	'22.11월	국정 40-4

해양안전문화 인식조사 실시	'22.12월	국정 40-4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시범운영) 실시	'22.12월	국정 40-4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22.12월	국정 40-4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2.12월	국정 40-4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22.12월	국정 40-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내·외항 해운선사, 선박 종사자 및 이용자, 국제해사 분야 관련 종사자 및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자) 해운협회, 해운선사 등 해운업·단체와 정부기관 및 선박검사기관 등 공공기관, IMO 및 회원국(175개국) 등

□ 기대효과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정부 안전관리 강화·혁신으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해양사고 발생 최소화
-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 교육 및 홍보 추진으로 해양안전문화 내재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도모
- IMO A그룹 이사국(11연임)으로서의 국격 제고, 주요 해운·항만 국가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해사안전 분야 영향력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216.5	147.5
▪ 해상안전 국제협력(301)		58.5	63.5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302)		158	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국적선 1천척당 해양사고 피해 지수 저감(점)	46.0	41.5	39.0	38.0	국적선 1천척당 3년간('19~'21년) 평균 사고피해 지수(42.2)의 <u>10%</u> 감축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년평균 1천척당 사망·실종자 + 3년평균 1천척당 주요사고* 건수] x 0.90 * 안전·운항저해, 기타사고 제외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Ⅱ-3-③)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5527)

□ 추진배경 (목적)

- 어선사고는 최근 5년 연평균('17~'21) 1,881건으로 전체 해양사고 (평균 2,808건)*의 67%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 어선사고 발생건수: ('17)1,778 → ('18)1,846 → ('19)1,951 → ('20)2,100 → ('21)1,786

** 어선사고 인명피해(명): ('17) 100 → ('18) 89 → ('19) 79 → ('20) 99 → ('21) 89

-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충돌·화재사고 역시 매년 발생* 하며, 사고시 20일 내외의 장기 수색으로 국가적 부담** 증가

* 3명 이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중대형 어선사고 : ('19) 5건→('20) 3건→('21) 3건

** 중대형 어선사고 발생 시 약 10일 이상 수색을 지속, 일일 최대 약 25억원(추산) 소요 / 25억원 = 동원선박 유류비(23.4억원) + 항공기유류비(0.4) + 조명탄(0.5)

- 그간 어선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및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미흡

- 어선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어선어업 구조 심화

- 조업중심으로 설계된 어선구조와 설비는 ¹⁾안전사고 취약, ²⁾선단의 척수·에너지·어선원(노동집약) 과다 소요 및 ³⁾복지공간 열악 및 승선 기피

- 이에 따른 복원성 안전강화, 화재사고 방지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표준선형 개발과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선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안전제도·관리)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및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2~'26)에 따른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사고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2인 이하 소규모 조업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 및 기본계획 정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 수립
 - (안전점검) 어선사고예방을 위한 봄철·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 10톤 미만 어선, 화재취약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 대상으로 봄철 안전점검 실시하고, 기관·전기·어구설비(양망기·로프 등)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 (교육·홍보 강화)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조업교육 내실화 및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안전 캠페인 활성화
 - 이론교육 대신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청년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교육: 전남·전북 지역 연안어선 10여척을 청년에게 임대

 -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어업인 안전생활실천 결의대회 등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 (어선건조 지원) 안전한 고효율 표준어선 보급을 위해 「차세대 표준어선 설계도면 고시」를 제정하고 약 600억원 규모의 노후 어선 건조자금 등 지원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17~'21, 241억원): 안전·복지공간 및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연근해어업 10개 업종 어선 설계 및 개발

- 700마력급 LPG 추진어선 기술개발·실증 사업(120억원) 착수('22~)

* 에너지절감형친환경어선개발('21~'25, 414억원): 탄소배출저감 및 어업경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어선(하이브리드+LPG어선) 기술개발 및 실증

○ (안전설비 강화) 안전 조업·항행을 위해 어선 안전설비 보급·개발 및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근해어선에 보급('22년 700대, '23년 600대, '20~'23년 2,100대)하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D-MF/HF 수신기* 추가설치 등 통신망 강화

* ('22) 서남해안 및 제주(도서지역 등) 전파환경 측정 후 간이수신기 보강

- 실효성있는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 전기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소화장비 기술개발

○ (건조산업 지원) 어선건조 조선소 및 설계사 등을 집적화하여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고효율 어선을 건조토록 어선건조 진흥단지구축 추진

- 어선건조 기업 유지 및 산업 고도화 기반마련을 위한, 공동이용 설비·시설 및 기술·생산지원 설비 지원 예산 확보 등* 추진

* (예산확보) 재정당국 협의를 통해 '23년 단지구축 신규 예산확보 추진('22.上~)

** (지역검토) 유희산단, 항만배후부지 등을 중심으로 적정지역 검토 추진('22.下~)

○ ('21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성과목표 상향 조정, 정책효과 향상 방안 발굴(6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AI기반 어선안전 통합플랫폼 구축(R&D) 사업자 모집공고	'22.1월	업무 3-3-2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22.2월	업무 3-3-2
	봄철 어선 안전점검	'22.3월	업무 3-3-2
2/4분기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실시	'22.4월	업무 3-3-2
	어선안전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강화 고도화	'22.5월	업무 3-3-2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보급	'22.6월	업무 3-3-2
3/4분기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 제정 및 시행	'22.7월	업무 3-3-2
	외국인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실시	'22.8월	업무 3-3-2
4/4분기	겨울철 어선 안전점검	'22.10월	업무 3-3-2
	표준어선형 설계공모전 개최	'22.11월	업무 3-3-2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사업 협의회 개최	'22.11월	업무 3-3-2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관련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22.12월	업무 3-3-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11개 시·도 연근해 어선(6만6척여척) 어업인 및 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등
- (이해관계자) 해양경찰청(해경서), 지방자치단체(시·도), 수협(어선 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업인, 연구기관, 조선소 등

□ 기대효과

- (안전성 측면) 연근해 어선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화로 어선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지속성 측면) 어선어업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국내 어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및 어촌 사회·경제 활성화
- (어업경영 측면) 고효율 표준어선, 전기복합 추진 어선 도입 시 어선사고 예방과 어업경비 절감 등 어업경영 개선

- (환경적 측면) 노후어선 대체 마련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 (국가경제 측면) 어선 신조에 대한 투자증대로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한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어업안전지도강화(Ⅱ-3-일반재정①)				
	① 어업안전지도강화(3132)	일반회계	57	56
			(248)	(240)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04)		23	20
	▪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306)		34	36
연근해어업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8	22
			(1,267)	(1,231)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301)		8	17
	▪ 어선청년임대(303)		-	5
기술개발(Ⅱ-3-일반재정⑩)				
	① 기술개발(6431)	기후대응기금	60	102
			(60)	(102)
	▪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 연구(R&D)(753)		60	1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어선의 등록 증가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어선의 등록 척수 증가율을 목표치로 산출	(연간 증가한 표준선형 등록척수) / (전년도 표준선형등록척수) × 100%	선박 등록 결과
②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어선의 에너지 절감율(%) (가중치 50%)	-	-	-	7.0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R&D)를 통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기준으로 측정	(기존어선 톤당 유류 소모량 - 표준선형 어선 톤당 유류소모량) / 기존어선 톤당 유류소모량 × 100 = 7.0% 절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실적보고서

4 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Ⅱ-3-④)

항로표지과 (044-200-5871/5873)

□ 추진배경(목적)

- 선박, 해양시설물 간 충돌 등 해상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해로드 앱 이용 활성화 추진
 - 해로드 앱을 활용한 구조기관의 해상조난사고 대응지원* 강화, 위해요소 개선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 강화
- * '21년 전체 조난신고의 4.1%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등대스탬프투어 추가(시즌 3·4) 출시, 대국민 공모전 실시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 (누구나, 언제라도) 나홀로 조업, 해양레저 이용객 등 안전 취약층의 해양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해로드앱 기능개선 추진('22.3.)
 - 편의·안전기능이 강화된 신규 버전 해로드(5.0) 앱 출시 및 해로드 앱 연계 자동 조난신고·위치 발신 장치(해로드 세이버) 대국민 보급
- * 안전위해요소(수중방파제 등) 충돌위험 경고, 기상·조석정보 제공 확대 등
- (위해요소 개선)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전국 해양구조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시설 개선
 - 해양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 등 행정규칙 개정('22. 8.), 해양구조물 부근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 강화('22. 12.)

* (해양구조물) 총 191기 / 해상교량 89개소, 사설부두 등 인공구조물 89개소

< (지역경제) 경제활동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 (지역연계) 등대여권 테마 추가('17년 1→'23년 6종), 여행코스에 해양 관련 기관(국립수산물과학관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등대여행의 경제 효과 >

- 1인 1회 여행 시 평균 지출액* 28,980원을 기준으로 '21년에 약 523억 원 (180만 명×28,98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
 - * 2018 국민여행 조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 ('21년 등대여행통계) 등대스탬프투어 신규 참여자/완주자: 11,302명/554명, 유인등대 방문객 1,667,112명 <'21. 12. 31. 기준>

- (정책참여 확대) 등대관광 활성화, 대국민 공모전 실시 등 자발적 정책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등대해양문화 행사* 개최, 등대여행자를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 이달의 등대 선정(12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개최
 - * 등대해양문화 탐방 및 특강, 여름등대해양학교, 영상·문학·사진·웹툰·그림 대국민 공모전 등 실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등대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22.1월	
	등대여행자용 인터넷 카페 운영	'22.1~12월	
	2022년 이달의 등대 선정 및 홍보	'22.1~12월	
	해양구조물 위해요소 개선 이행현황 점검 추진	'22.3월	
	해로드 신규 버전(5.0) 출시 및 해로드 세이버 무상보급	'22.3월	
2/4분기	등대스탬프투어 시즌 추가 출시	'22.4월	
	등대해양문화행사 개최	'22.5~11월	
	등대 영상사진 공모전	'22.6월	
3/4분기	세계항로표지의 날 개최	'22.7월	
	등대해양문화 탐방 및 특강	'22.8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해로드 앱 홍보 포스터 공모전 개최	'22.8월	
	등대 방문 인증 SNS 이벤트	'22.9월	
	해양구조물 위해요소 개선 이행현황 점검 추진	'22.9월	
4/4분기	등대문화 웹툰 공모전	'22.11월	
	해로드 앱 이용자 만족도 조사	'22.11월	
	등대느림보 우체통 운영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해양안전 >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산업 종사자, 해양레저 이용객 등
- (이해관계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 선박회사 등

< 지역경제 및 참여 >

- (정책·사업의 수혜자) 관광산업 종사자, 해양관광 이용객 등
- (이해관계자) 해양관광과 관련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 구조기관과 협업하여 소형선박 및 레저이용객에 대한 초기 사고 대응 능력 강화로 인적피해 최소화 도모
- 자발적 등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근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항만, 지역 축제, 관광지 등을 연계 홍보하여 해양관광 수요 직접 창출
- 등대를 활용한 감성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활성화로 해양안전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1	'22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Ⅱ-5-일반재정②)				
①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6350)	교특회계	609	545
	▪ 표지시설(300)		571	481
	▪ 표지시설-측위원(304)		38	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로드 앱을 활용 구조신고 비율(%) (가중치 60%)	3.3	4.2	4.1	4.5	해경 구조신고 접수 총 건수 대비 해로드 앱을 이용한 신고 건수 비율 * 과거 3년간 평균실적(3.9) 및 과거 최고치('20년 4.2)보다 높은 수준 으로 설정: 연평균 증가율(11%)을 고려하여 '22년 목표치(4.5) 설정	신고 비율 = 해로드 앱을 이용한 신고 건 수/ 총 구조 신고 건 수	해양경찰청 통계자료
② 등대스탬프투어 완주자 인원(명) (가중치 40%)	192	366	554	760	'22년 등대스탬프투어 완주자 인원 * 최근 3년간* 등대 스탬프투어 완주자 평균(370명) 보다 105% 상향한 760명을 목표치로 설정 · '19년: 192명, '20년 366명, '21년 554명	등대스탬프투어 완주자 수	국립등대박물관 통계자료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해양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극지, 대양진출 및 심해저 개발 등 경제영토 확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 그간의 성과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5),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전략(21.1) 등을 수립하여, 유망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추진(21.4) 등 극지 과학영토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독도해양주권 관리능력 강화
- 「해양폐기물법」 제정(19.12)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21.5), 탄소배출 네거티브(△323.7만톤)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21.12)
- 「갯벌법」 제정(19.1) 및 제1차 갯벌 기본계획 수립(21.6) 등 갯벌관리 기반 구축, 해양보호구역 확대(32개소, 1,798.7km²) 및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등재(21.7)

◇ 주요 내용

- 해양 바이오, 마리나,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고, 무인도서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
- 해양환경 위해요소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해양수질 확보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청정 해양환경 조성
-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 공유수면 불법행위 감축 등 해양공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4	4	17	3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①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②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건)
1.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하고 해양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①해양에너지 실증시설 추진율(%) ②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기반 구축율(%)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①해양수산생명 자원 주권강화율(%) ②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①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②투자유치액(억원)
	④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①창투센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수(명) ②창업기업수(개소)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국민 해양레저 관광 체험률(%)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①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②해양레저신산업 기반 구축 추진율(%) ③해양관광인프라 조성률(%)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②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③해양문화시설 인프라 구축률(%)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이어도 및 해양주권 학술 홍보 성과(%)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①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율(%) ②무인도서 관리 기반 구축 추진율(%)
	②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①독도 심해저탐사 성과(%) ②사전예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율(%)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①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 강화율(%)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①수산분야 통상협상 FTA, CPTPP 관련 설명회 참석자(명) ②주요 FTA 상대국의 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수용률(%)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①정부 아세안 정책 연계 해양수산 ODA 추진 건수(건) ②양자협력 MOU 체결건수(건) ③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건)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①원양어업 조업 쿼터 확보량(천톤) ②옴서버 신규양성 및 제도 활성화 추진율(%)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수질 개선율(%)
	①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전(全) 주기 관리	①해양쓰레기 수거량(톤) ②반려해변 입양수(개) ③오염퇴적물 수거량(천㎡)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①해양수질 개선 개소수(개소) ②해양오염 방제교육 이수인원(명)
	③해양보전과 이용의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	①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및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②보전·관리 중심의 공유수면 관리 체계 마련 ③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기반 마련
	④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①갯벌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율(%) ②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⑤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③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추진율(%)

(1) 주요내용

□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중건설로봇 등 해양 新장비 개발과 사업화 지원
- 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LNG·전기 등 친환경 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을 개발하고, LNG병커링 인프라조성 등 기술개발로 상용화 기반 마련

□ 해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발굴 및 지원 추진

□ 해양영토 확대를 위한 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 (극지 진출) 과학연구, 국제협력,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종합적 극지 활동 지원
- (대양연구) 해양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심해 환경 및 생태계 탐사 등을 위해 대양연구 수행

- 해양교육문화법 시행(21.2)에 따라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 권역별 인프라 구축 및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추진
 -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와 해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문화 대중화·산업화 추진
 - 권역별 대규모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국립인천해양박물관, 미래 해양과학관 조성) 및 해양교육·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수립(공공개발 검토 등)을 통해 해양복합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콘텐츠 강화로 국민레저수요 창출
 - 국내 해양관광 수요에 맞춰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안전성 확보, 우수해양관광 콘텐츠 신규 발굴 추진
 - 연안크루즈 취항 지원 등 크루즈 수요 확대와 산업 지원 지역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및 대회 운영
- 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新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관광·해양문화 콘텐츠 강화
 - 권역별 특색있는 해양레저 관광(해양치유, 마리나, 수중레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육성
 - 해양치유, 마리나, 수중레저 등 특색있는 해양관광 新산업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 추진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9)에 따라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정책 추진
 - 독도 중장기계획 수립* 등 독도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및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
 - * 제4차('21~'2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1.3.5, 국무총리 주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및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행
 - 독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국민 교육·홍보 정책 강화
- WTO 수산보조금 규범, FTA, CPTPP 등 수산 관련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전(전)주기 관리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 체계적 이행 및 해양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체계도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
 - 수산자원 보호, 선박 안전운항 확보,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해양 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전주기 과정 관리 추진
-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 질서 확립, 갯벌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 국민 모두가 바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 공간계획의 체계적 운영과 해양수산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
 - 다양한 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개발·이용 수요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법 및 해양생태계법 개정 등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① 극지 및 대양 탐사 진척도(%)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13.6	100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남·북극해, 아북극-서태평양 등 연차별 탐사 계획 최종목표('26년까지 조사 목표 정점 수 총 1,250점) 반영 * ('22년) 90%, ('23년) 92.5%, ('24년) 95%, ('25년) 97.5%, ('26년) 100%	실제 조사 정점 수 / 조사 목표 정점 수(%) * 최종 목표('26년, 1,250점) 대비 정점 조사율 누적 집계	연구과제 연차보고서, 탐사보고서, 관측DB 등 확인
② 극지 및 대양 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0	최근 3년 평균(53.3건)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 사업 논문 발행 건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19년) 46건 ('20년) 53건 ('21년) 61건	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 건수 집계	중빙자료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확인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현장 목소리 다수 발생

- 유망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계획 변경, 비대면 행사 개최 등 적극적 대응 실시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해양관광 저변확대 장애, 특히 크루즈선박 '국내 입항 금지 조치'('20.2월)에 따라 크루즈 관광 타격

- 포스트 코로나 이후 크루즈 운항 재개 및 크루즈 관광객 수요 변화를 고려한 외교부·법무부 협의 및 선제적 정책 마련
- 국외 관광 억압수요의 해수욕장 이용 전환 위한 관리청(지자체)과 협업하여 편의·안전성 확보 및 해수욕장의 매력도 제고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해양레저축제 사업 계획 조정·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최를 최대한 추진

- 다양한 新기술 개발에도 국내기준 또는 실선탍재 이력(Track Record) 부재 등으로 상용화·상업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유망기술 발굴, 기준마련 및 국가인증 획득 연계 및 관공선 우선 도입 등 국가주도로 신기술 상용화 및 시장진입 지원
- 무인도서 관련 이해관계집단(토지소유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이 다양하여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등 이해관계자별 설득·대응 필요
 - 관련 전문가·지자체·소유자 등과의 무인도서 현장점검 및 이의 신청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독도 관련 사업 추진시 안전·환경·문화재경관 보존 및 외교 관계 등과 상충될 우려
 -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고,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독도시행계획 수립 등 독도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 구축·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 전략적 양자협력 추진을 통한 해양수산업 해외진출 지원
 -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교류·이동 제한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으로 촉발된 국제사회 긴장 고조
 - (대응전략) 서면 또는 화상방식을 활용하여 입장 유사국과의 양자협력 및 고위급 접촉 확대 추진
-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강우량, 기온 등 기상조건과 육상 오염 물질 유입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각종 정책의 시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분석이 요구

(4) 기타 : 해당없음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 경제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중건설로봇 등 해양 新장비 개발과 사업화 지원
- 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해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발굴 및 지원
- 해양모태펀드 규모 확대 및 기술창업 촉진 등 해양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	100	100	100	해양수산 신산업 상용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율을 목표로 설정	(차세대 선박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 친환경선박 보급 기반 마련율) ÷ 3 × 100	방침문서, 관련공문 등 내부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현장 목소리 다수 발생
 - 유망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계획 변경, 비대면 행사 개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Ⅲ-1-①)

해양개발과 (044-200-5241/5244/5248/5664)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에너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산업 육성 필요

◦ 제9차 전력수급계획('20~'34)	⇒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재생 22.2)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34)	⇒ '34년 신재생에너지 주력 에너지원, 저탄소 이행 가속화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 우리부, '30년 21.1만톤(해운 19.1, 어업 2)
◦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17)	⇒ '30년 발전설비 용량 63.6GW 확충
◦ 해양e 2030 계획('18)	⇒ '30년 발전설비 용량 1.5GW(=신고리원전 1기≈75만가구분)

- 풍부한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총 147GW)과 기술 수준(최고 기술국 대비 81.5%) 고려 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필요

- (해양장비) 수중용 장비기술 개발·실증과 사업화 지원 필요

- (수중건설로봇) 해상풍력 등 해양구조물 수요 확대에 따라 사람 대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고위험 수중작업을 수행할 로봇 개발
- (수중통신기술) 수중 이동체(잠수부·잠수함 등) 간 정보교환과 수중-육상 간 통신 연결을 통해 효과적 해양 활동 지원
- (수중글라이더) 해양연구 기초가 되는 해양관측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의 양과 품질을 향상

- (차세대 선박)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황산화물 배출 규제 등 IMO의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은 필수적

- (LNG) 상용화된 저탄소 원료인 LNG 추진선 확대와 LNG 병커링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 (전기추진선) 무탄소 연료인 전기(現 보조전원수단으로 상용화)를 주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추진차도선 개발·실증 추진
- (해양플랜트 서비스) 지속된 저유가에 따른 해양플랜트 산업 침체로 국내 업계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으로 구조 개편 추진
 - *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시운전, 유지·관리,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 부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60%↑)
-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로 조기 활성화와 해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지원체계 구축, 홍보 등을 통해 미래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필요
- (해저공간) 수심 50m에 5인이 30일 거주할 수 있는 해저 거주 공간 창출·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 관련 탄소중립 위원회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4월)
- (조류) 자체발전하는 도서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소형 조류발전기 제작(6월) 및 현장 성능시험을 거쳐 준공(11월)
- (파력) 도서지역 보급 기반이 될 방파제 연계 파력발전설비의 시운전을 통하여 누적 발전량 1MWh을 달성(9월)
- (해양장비) 개발하는 장비가 목표한 성능을 확보했는지 실증
 - (수중건설로봇) 성능 고도화 및 하드웨어 안정성, 작업성능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험(9월)
 - (수중통신) 수중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수중 근거리 모뎀 구현(3월), 수중 장거리 모뎀 시험(5월)

- (수중글라이더) 부력엔진 내압시험(3월), 원격 진·회수장치 실시 설계(6월), 연속 운용 및 남해 실험역 시험(9월)
- (차세대 선박)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을 확대 하고 LNG병커링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 (LNG) LNG병커링 선박 Ship-to-Ship 시운전(7월), 한국선급 승인(12월)
 - (전기추진선) 전기추진선의 선체건조 완료·진수식(3월), 선박 충전동 착공(6월),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선박 반영·인도식(10월)
 - (테스트베드) 친환경선박 연료 통합시험선박 건조 착수(11월)
- (해양플랜트 서비스) 민간 기업('17, 51개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해외시장 정보제공(3월~ , 월1회)과 시장설명회(12월)를 통한 저변 확대
 - 출연연 소유 장비·소프트웨어·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기업의 초기 기술개발 부담을 줄이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21.3~)
 -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시범 사업 해체공사 착수(12월)하고, 인니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10월)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심층수 대국민 인지도 제고
 - 해양심층수 시행계획을 수립(5월) 및 업계 간담회 개최(10월)
- (해저공간) 해저 공간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 하고, Test Bed를 구축하여 실증
 - 착수보고회 개최(5월) 및 Test Bed Site 해양 지반 물리 탐사 및 시추 조사(10월)

- (현장 의견 정책반영) 해양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과의 정책 협의회 및 업·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책개선 환류체계 구축
-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관련 간담회를 통하여 중장기 연구 개발 방향에 반영 등
- (차세대선박)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의견 수렴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 차도선 진수	'22.3월	
	(해양장비) 근거리 수중통신 모뎀 구현	'22.3월	
	(해양장비) 수중글라이더 부력엔진 내압시험	'22.3월	
	(해양플랜트) 해외시장 정보제공, 공동활용, 인니 해외진출 사업 착수	'22.3월	
2/4분기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방향 점검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2.4월	
	(해양장비) 장거리 수중통신 모뎀 시험	'22.5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시행계획 수립	'22.5월	
	(해저공간) 착수보고회 개최	'22.5월	국정 41-1
	(해양에너지) 조류발전-ESS 통합시스템 제작 완료	'22.6월	국정 73-6
	(해양장비) 수중글라이더 원격 진·회수장치 실시설계	'22.6월	
	(차세대 선박)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충전동 착공	'22.6월	
3/4분기	(해양에너지)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시험운용	'22.9월	국정 73-6
	(해양장비) 수중건설로봇 실험역 성능시험	'22.9월	
	(해양장비) 수중글라이더 연속 운용 및 남해 실험역 시험	'22.9월	
4/4분기	(해저공간) Test Bed Site 해양 지반 물리 탐사 및 시추 조사	'22.10월	국정 41-1
	(차세대선박) 전기추진 차도선 인도식	'22.10월	
	(해양심층수) 업계 간담회 개최	'22.10월	
	(차세대선박) 친환경선박 연료 통합시험선박 건조 착수	'22.11월	
	(해양에너지) 조류발전-ESS 통합시스템 준공	'22.12월	국정 73-6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 차도선 시운전, LNG병커링 선박 한국선급 승인 완료	'22.12월	
	(해양플랜트)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 시범사업 해체공사 착수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일반국민, 해양에너지·해양플랜트·차세대선박·해양장비 등 연관 업체·근로자·구직자, 관련 연구기관 등
- (이해관계자)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업 등

□ 기대효과

- (에너지·장비) 해양에너지 기술개발·고도화를 통해 보급 기반 마련, 해양과학 기반 기술을 개발·도입
- (차세대선박) LNG 등 저탄소 연료와 전기 등 무탄소 연료 기반 선박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 기여

- (LNG) LNG추진선은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 최대 99%, 질소산화물 85% 감축, 선제적 기술개발로 관련산업* 수주 확대

* (조선) LNG 연료추진선 관련 신·개조시장 약150조원 예상('13~'25, 노르웨이 선급)
(항만) LNG 연료공급(벙커링)량은 31.3만톤('16) → 2,600만톤('25) 증가 전망(노르웨이 선급)

- (전기추진선) 미세먼지 저감 등 연안 환경 개선*, 신산업(선박용 배터리 공급업) 창출, 기존 선박 대비 연료비 절감 효과**

* 연안 전기추진선박 전환에 따른 환경편익 연간 최대 19억원/척 발생

** 기존 선박 연료(중유·선박경유)에 비해 전기충전 비용(배터리 도입, 유지보수 비용 포함)은 약 2억원/척('28~'47 평균) 규모의 연간 연료비 절감 효과 발생

- (해양플랜트)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수준 향상**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는 약 300조원 규모(동남아 수리·해체 분야 시장규모 : 32조원 추정) /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21년 30% → '30년 85% 수준

- (해저공간) IT기업 수중데이터센터, 잠수사·우주인 훈련장, 의료·생명과학 연구 공간, 해양레저·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I -2-R&D①)				
①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2041)	일반회계	211 (246)	102 (212)	
▪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301)	일반회계	151	81	
▪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R&D)(304)	일반회계	60	21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I -2-R&D②)				
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2042)	일반회계	158 (430)	105 (435)	
▪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300)	일반회계	74	-	
▪ 해양장비연구성과활용촉진사업(R&D)(313)	일반회계	84	72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318)	일반회계	-	33	
해양수산산업진흥(R&D)(I -2-R&D(3))				
① 해양수산산업진흥(2046)		286 (435)	330 (642)	
▪ LNG병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300)	일반회계	39	31	
▪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전원공급시스템개발(302)	일반회계	127	22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303)	일반회계	72	91	
▪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306)	일반회계	48	186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 조성 (I -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 활성화(2031)		36 (758)	36 (1,211)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312)	일반회계	36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에너지 실증 시설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① 도서지역-조류발전 ESS 제작완료 (가중치 50%) ② 파력발전 시험장 이용-건수(연 2회, (가중치 50%))	①*50%+②*50%	과제 연차보고서 내부자료
② 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기반 구축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① 차세대선박구축공정율 (가중치 50%) (㉠ LNG병커링 선박 한국선급 승인완료(50%), ㉡전기추진차도선 선박 건조 완료(50%)) ②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율(가중치 50%) (㉠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4개기업, 30%) ㉡ 한-인니 수출상담회(1회, 40%), ㉢ 시장설명회(1회, 30%))	차세대 선박 구축 공정율*0.5+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0.5	과제 연차보고서 내부자료

②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Ⅲ-1-②)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1 / 5672)

□ 추진배경 (목적)

- (해양바이오 성장 잠재력) 바이오시장* 중 형성 초기 단계인 해양 분야 신기술 선점을 위해 자원확보, 소재개발 등 해양바이오에 투자 필요

* 세계 바이오시장 규모 : ('19) 4,502억\$ → ('24) 6,433억\$ / 연평균 7.4% 성장 전망

** 해양생물(33만종 중 1%만 활용 중)은 연 26조\$의 경제적 가치 보유

- (해양바이오 육성)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21.1)*에 따라,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산업화 지원 강화를 통해 중장기 정책의 체계적·단계별 추진 필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주재, '21.1.14) 상정, 10년 단위('21~'30) 기본계획

- (생명자원 확보) 나고야의정서*, BBNJ** 등 해양생물자원 이용 제한 강화에 대응하여 각 국은 자원 확보 및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추세

* 생명 자원에 접근 시 사전승인 및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의무화 규정('17.8)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자원주권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① 체계적·효율적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 (제도개선) 해양생명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22.12), '22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22.1)

* 분양용도 확대(시험·연구용→교육용) 등 해양생명자원법 개정('22.12)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245종 신규추가, '22.2)

- (국내외 자원 확보) 미탐사 해역(동해, 독도 등, '22) 등에 대한 2단계 조사*('22~'26) 추진, 환경유전자 분석**, 해외거점 국가 등을 통한 체계적 자원 확보

* 2단계('22~'26) 법정 자원조사 계획 수립('22.1)

- (종 목록 확대) 자원주권 강화를 위해 자원조사 결과를 반영, 국내 서식기록이 있는 해양생물종 목록 구축 및 공개('22.4) 추진

* 시기: '19.12월('18년 기준)→ '20.6월('19년 기준)→ '21.3월('20년 기준) → '22.3월('21년 기준)

- (등급화) 확보된 자원의 경제·학술·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화*('22.12)하고, بانک 자원의 효능 정도에 따라 효능정보 등급화**하여 기업 등에 제공('22.12)

* 1등급 : 우선확보 대상종 지정, 1~2등급 : 국외반출승인대상 지정

** ('21) 추출물 320종 → ('22) 1,050종 → ('23) 800종

- (국제규범 대응) 나고야의정서 및 BBNJ* 협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 하는 대응전략 마련('22.9~12)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

- 자원제공국 제도·절차 안내 가이드 마련, 기업·연구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추진(연중)

②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강화

- (바이오뱅크 활성화) بانک 소재 품질관리 국제인증(ISO) 유지 및 화장품 بانک 신규추가('22.12), 소재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분양 등 홍보 강화

- (소재중개 및 정보제공) بانک를 통해 학계·연구계(제공)와 기업(수요) 간 소재공유·활용 시스템 구축('22.12) 및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산업 정보 제공, 상담 등 추진

* 학계·연구계에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소재정보를 بانک에 등록하고 기업 등에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산업화 추진

- (수요맞춤형 지원) 기술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상용화** 연구를 지원하고, **바이오뱅크**를 통해 유용소재 정보 및 실물 제공*

* 분양건수 : ('19) 150건 → ('20년) 194건 → ('21년) 226건 → ('22년) 250건

- (상용화 지원) 전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식품·의료 바이오소재 **FDA** 승인 등 **해외 진출** 지원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19~'23, '22년 84억원)

- (수소에너지 상용화) 해양미생물 활용 수소 생산플랜트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수소정제(50→99.8%) 및 **운영 최적화** 시스템 개발 지속('21~'23)

* 수소 생산단가 : (現) 4,400원/kg → ('23) 2,785원/kg

- (수산부산물 소재화) 생선 껍질, 뼈 등 수산부산물로부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쓰이는 바이오 소재 개발('22~'27)

- (산업소재 국산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바이오소재*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공정 공유를 통해 자립도 제고 및 산업기반 강화 ('22~'26)

* 대상 소재: 피코시아닌, 포르피린, 잔토피, 알긴산, 베타-글루칸 등

- (권역별 거점 조성)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 특성화 거점 조성 추진

* 해조류 특화 생산 시설 설계('22.12월), 산업화 인큐베이터 착공('22.12월)

서해권	산업화 인큐베이터('20~'23, 347억원, 서천), 인증지원센터 건립('23~'26 250억원 잠정)
남해권	해조류 소재 GMP 생산 시설('21~'23, 250억원, 완도)
동해권	해양바이오 의료·헬스케어 유망기술 연구개발 센터('23~'27, 300억원, 잠정)

-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기업 재직자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해 현장 맞춤형 단기(주 1~2회, 3개월 이내) 실무교육* 실시('22년, 2.5억원)

* 위탁기관 선정('22.3) → 교육생 모집·교육('22.6, '22.9) → 성과점검('22.12)

- (민관협력 확대)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선도 기술 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 등을 통해 산학연 관심을 제고하고 산업화 연계 추진('22.12)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혁신발전협의회를 반기별(연 2회)로 개최하여 중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민간 의견수렴 확대

③ 해양수산생명자원 가치 및 중요성 인식 제고

- (체험형 교육서비스 제공) 해양생물 주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및 학교 현장 활용 교사용 학습자료 개발('22.3~12)

*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해양수산생명 자원학교' 운영('22.5~12),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22.9.)

- (디지털 프로그램 구축)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해양생명자원의 전시·교육에 접목함으로써 능동적인 전시관 관람 전환

*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 공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2.7.~11.)

- (사회적 가치 실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 해양생물자원 체험 기회(바다나눔), 해양생물 분야 진로 탐색 지원 (바다드림) 등('22.4~12.)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수립	'22.1월	국정 73-6
	해양생명자원조사 2단계 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2.2월	
	BBNJ 협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2.2월	
	해양바이오 분야 현장소통 추진	'22.3월	국정 73-6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평가 대상종 선정	'22.3월	
	해양바이오뱅크 효능정보 등급화(320종) 및 서비스 운영	'22.3월	국정 73-6
	BBNJ 4차 국가간회의 참석 현장대응	'22.3월	
2/4분기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연구기관 선정	'22.4월	국정 73-6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연구기관 선정	'22.4월	국정 73-6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작성 및 목록집 발간	'22.6월	
	해양바이오 연구혁신발전협의회(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개최	'22.6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교육기관 선정	'22.6월	국정 73-6
	해양생명자원조사 실시(춘계조사)	'22.6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신규지정	'22.6월	
	해양수산생명자원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제작	'22.6월	
3/4분기	환경유전자 분석 시료 채취(고성 등 4정점)	'22.7월	
	해양생명자원 조사 실시(하계조사)	'22.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최외곽도서(독도) 해양생물자원조사	'22.9월	
	해양바이오 분야 현장소통 추진	'22.9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착공	'22.9월	국정 73-6
	BBNJ 협정 관련 설명회 개최	'22.9월	
	해양생물탐구대회 개최	'22.9월	
4/4분기	해양수산생명자원 국명 부여	'22.10월	
	해양바이오포럼 개최	'22.12월	국정 73-6
	해조류 특화 소재 생산시설 설계	'22.12월	
	해양바이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2.12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 연구혁신발전협의회(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개최	'22.12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 소재 정보채널 구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22.12월	국정 73-6
	해양생명자원 조사 실시(추계조사)	'22.12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심의 및 등급부여, 공개	'22.12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확대 제도개선(법 개정)	'22.12월	
	해양바이오뱅크 국제인증 유지 및 화장품 뱅크 구축	'22.12월	국정 73-6
	찾아가는 해양수산자원학교 운영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바이오 관련 업계(직접 수혜자), 학생(해양생명자원 관련 교육 직접 수혜), 바이오 업계를 통해 개발된 식품,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간접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나고야의정서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확대,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활동을 규제하는 국제규범 신설 시 국내 산업 및 해양과학조사 연구기관 등

□ 기대효과

-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21.1)”에 따라 해양바이오 산업 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육성의 기반 마련
 - 산업계 수요기반 유용소재 발굴, 바이오뱅크 활성화를 통해 기초기술 및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지원 강화

- 산업화 인큐베이터 및 대량배양시설 착공,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인허가 지원 등 산업화 지원 인프라 조성 본격화

○ 해양바이오 산업 원천소재 확대 및 자원 이용 활성화

- 과학적·체계적인 자원조사 확대, 유용자원에 대한 신속한 분양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전략적 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화
- 해외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등을 규제하는 국제규범 신설 등에 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내 영향 최소화 도모

○ 비대면 디지털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해양생명자원 가치 및 중요성 대국민 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I -2-R&D④)				
①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2044)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300)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303) ▪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해수부)(R&D)(305) ▪ 빅데이터 기반 해양 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R&D)(308) ▪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R&D)(309) ▪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311)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312)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405) ▪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406)	일반회계	403 42 98 98 94 36 35 -	394.5 14.4 84.6 96 80 22 50 5	
해양생명자원조사 * 성과관리번호는 없음(10억미만 소액사업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① 해양생명자원조사(일반)(1032) ▪ 해양생명자원조사(301)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302)	일반회계	8.5 6 2.5	10.5 6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수산생명 자원주권 강화율 (%)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자원조사 결과 확증표본 700종(5년평균 583종 대비 120% ↑), 소재 효능 정도 등급화(1,000종), BBNJ 4차 정부간회의 참석, BBNJ 의제 관련 설명회 개최, 생명자원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건수 30회(전년대비 50% ↑, 원격수업+자원학교+특별전시)	① 확증표본 확보 목표(700종) 확보(20%) ② 미확보종(30종) 확보(20%) ③ 소재 효능 등급화(20%) ④ BBNJ 정부간 회의 참석(10%) ⑤ BBNJ 의제 관련 설명회 개최(10%) ⑥ 생명자원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건수 30회(20%)	결과보고
②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250건(3년평균 190건 대비 132% ↑), 산업화를 위한 인체적용시험 4건(난이도 고려 전년 수준),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대(동·서해권 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신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25명(신규)	①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250건(30%) ② 해양바이오 신소재 분야인체적용시험(4건) (20%) ③ 동·서해권 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0%) ④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25명(20%)	결과보고

③ 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Ⅲ-1-③)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5/6229)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해양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해양수산 기업 발굴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필요

* 해양수산 창업기업은 77,976개로 전체 산업 대비 4.2% 수준

- 더불어 해양수산업의 성장성 강화를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기업 연구성과의 사업화 관련 추가 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 필요

- 해양산업은 투자 자금회수 실패 위험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민간 투자가 저조*한 바, 정책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 지원 필요

* 해양 기업 1%만이 민간투자자로 자금 조달, 78%가 민간투자 경험 전무('18)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업생태계개선) 유망기업 보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스타트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해양수산기업을 '예비 오션스타'로 10개사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및 성장 유도

* 사업화 자금·컨설팅 우대 지원(가점, 의무선발 등) 및 투자유치 지원(기업설명회) 등

- '창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여 보육·투자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 운영(4개사)('22년, 9억원)

- 시제품 제작, 홍보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사업화 역량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 자생력 제고

*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22년 40개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사업) '22년 15개사 지원 /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22년 20개사 지원

-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 고도화, 국내외 인증 확보 지원을 통해 기존 R&D 성과의 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지원 사업(49억원),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70억원),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53억원)

- (투자활성화) 정책펀드 확대, 투자기관 해양수산 분야 관심 제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모태펀드 지속 출자를 통해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촉진

* ('19) 2개 자펀드, 295억원 → ('20) 4개 자펀드, 593억원 → ('21) 5개 자펀드, 736억원 → ('22) 6개 1,022억 규모 조성 추진

-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기업-투자사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팸투어(연 3회), 투자심사역 양성과정(연 2회) 등 진행

- 유망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및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성과사례집 발간('22.4) 등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 성과 확산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모태펀드 출자금 교부	'22.1월	국정 73-6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선정	'22.3월	국정 73-6
2/4분기	해양수산 우수 성과사례집 발간	'22.4월	
	해양수산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22.4월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22.5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2.6월	국정 73-6
3/4분기	해양수산 창업 설명회 개최	'22.7월	
	투자기관 대상 해양수산 유망기업 팸투어 실시	'22.8월	
	예비오션스타 기업 발굴·선정	'22.8월	
4/4분기	투자심사역 양성과정 운영	'22.11월	
	해양수산 R&D 혁신 WEEK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관련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 등
- (이해관계집단) 수혜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

□ 기대효과

- 해양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붐(boom)을 조성하고,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 창업 초기부터 성장, 성숙 등 성장주기별 창업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오션스타 기업 발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문화활성화(I -2-일반재정②)				
① 해양문화활성화(2031)			226.01 (777.63)	446.19 (1,211.11)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312)	일반	126.01	246.19
	▪ 해양모태펀드(313)	일반	100	200
해양기술역량강화(I -2-R&D⑨)				
② 해양수산기술역량강화(2045)			178.13 (178.13)	173.85 (173.85)
	▪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R&D)(302)	일반	140.60	55.35
	▪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R&D)(304)	일반	37.53	69.75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306)	일반	-	48.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가중치 70%) (공통)	97	124	197	206	해양수산 분야 창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 상향(과거 3개년 평균(139.3) 기준 48%↑)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지원업체 수	내부자료 KIMST 보고서 등
② 투자유치액(억원) (가중치 30%) (공통)	120	144	482	298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목표의 도출을 위해 최근 3년간('19~'21) 평균 투자유치액(248.7) 대비 20% 상향된 도전적 목표치 설정	지원업체의 투자 유치금액 합계	내부자료 KIMST 보고서 등

4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Ⅲ-1-④)

수산정책과 (044-200-5427 / 5428)

□ 추진배경 (목적)

-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산분야 창업지원 및 투자 활성화 추진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창업·교육,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업·투자 지원 체계 강화
 -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 ('21) 6개소(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 ('22) 기존 + 1개소 추가(전북)
 - 수산모태펀드 운용 계획 수립 및 수산펀드 결성('22.2~10)
- 예비 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육성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한 유망기업 발굴·육성('22.1~12)
 - 해양수산업 창업 붐 확산 등을 위한 창업콘테스트 추진('22.2~10)
- 우수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자금지원
 - 수산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수산기업에 투자(연중)
 - 우수기술 보유자에게 저리의 사업화자금 지원(연중)
- 현장의견 수렴,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반영
 -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22.5)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 운영점검 및 업무협의(연 2회)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22.1월	국정 73-6
	'22년 수산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	'22.2월	국정 73-6
	'22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추진계획 수립	'22.2월	국정 73-6
	'22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위탁계약 체결	'22.3월	국정 73-6
2/4분기	'22년 창업투자 지원사업 운영점검 및 업무협의회 개최	'22.4월	국정 73-6
	'22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22.5월	국정 73-6
	'22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신청·접수 공고	'22.6월	국정 73-6
3/4분기	'22년 수산펀드 운용사 선정	'22.7월	국정 73-6
	'22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멘토링(창업캠프) 개최	'22.8월	국정 73-6
	'22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결선	'22.9월	국정 73-6
4/4분기	'22년 수산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완료	'22.10월	국정 73-6
	'22년 창업투자 지원사업 운영점검 및 업무협의회 개최	'22.11월	국정 73-6
	'22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 평가회 개최	'22.12월	국정 73-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업인, 수산 기업 등 수산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하여 창업 및 기업을 경영하려는 자
- (이해관계집단) 창업·투자 관련 유관기관, 어업인, 수산기업 등

□ 기대효과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산기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수산펀드 조성·투자 등을 통해 수산 기업들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수산분야에 시장형 선순환* 자금흐름 생태계를 조성

* 투자→ 경영 지원 및 수익창출 노력→ 기업 이윤 발생→ 자금회수(투자금+수익)→ 재투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산업창업투자(Ⅱ-4 일반재정⑩)				
① 수산산업창업투자(3432)		일반회계	48 (48)	53 (53)
어업경영자금(기금)(Ⅱ-4 일반재정⑧)				
① 어업경영자금(3465)		수발기금	70 (415)	70 (426)
▪ 수산모태펀드출자(370)			70	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창투센터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수(명) (가중치 : 60%)	1,338	1,182	1,482	1,401	○ 최근 3년간('19~'21) 신규고용수 평균인 1,334명 대비 5% 상향된 1,401명을 '22년 목표치로 설정	'22년 창업투자지원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원 수	지역별창업투자 지원센터 성과보고서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②창업기업수(개소) (가중치 : 40%)	33	31	35	35	○ 최근 3년간('19~'21) 창업기업수 평균인 33개사 대비 5% 상향된 35개사를 '22년 목표치로 설정	'22년 창업투자지원 센터를 통해 신규 창업한 기업 수	지역별창업투자 지원센터 성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1) 주요 내용

-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콘텐츠 강화로 국민레저수요 창출
 - (관광 콘텐츠 개발) 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선, 우수 관광상품 개발, 섬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 (연안크루즈) 크루즈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및 연안크루즈 육성 및 지원
 - (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및 대회 운영
- 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핵심 新산업 육성
 - (마리나) 수도권, 동남·서남해안권 등 권역별 입지 특성, 도시·어촌, 내륙·해수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리나 인프라 기능 확충
 - 마리나정비업 신설을 통한 마리나 안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레저선박 제조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 (수중레저) 수중레저 활동 안전 기반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양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중경관지구 조성
 - (해양치유) 해양치유 시범지구(센터) 조성 and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업,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문화 진흥을 통해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권역별 해양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해양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율(%) (공통)	15.4	9.8	7.7	17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관련 산업 활성화 정도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전국민 해양 레저관광 체험*율 목표치를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19년도까지 실적과 코로나19 이후 대폭감소된 실적 ('20~'21년도)을 고려하여, '22년에 '21년도 당초 목표인 17%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이용객들의 추세선($1.4546 \times \ln(x) + 13.798 = 15.814$)을 토대로 추세를 반영할 수 있으나 추세대비 약 1.2%p 향상된 적극적 목표치 산정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약 3천여명) 으로 해양레저관광 (지역축제, 해양레저 스포츠, 마리아, 해안가 캠핑) 체험율을 측정	표본통계조사 (통계조사용역)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어, 관광레저소비
지출액 감소 등 회복 및 재도약 전략 필요성 대두

* 관광레저소비지출액(조원) : ('19년) 94 → ('20년) 67 → ('21.上) 33

○ 단체관광의 퇴조 속 소규모·개별화 성향 증가,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는 경향 강화 등으로 웰니스·휴식·치유 수요 증가

* 해양·섬·산림·공원 등 저밀도 청정지역 중심의 실외관광지 선호도 증가

○ 관광 환경 및 국민 수요 변화에 따라 휴식·휴양 목적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필요

○ 마리아산업 등 서비스산업은 콘텐츠 한계, 과당경쟁으로 수익
악화 우려, 장비산업은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해양레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추진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해양관광 저변확대 장애**

- 국외 관광 억압수요의 국내 해양관광 전환을 위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상품 확대 등으로 매력도 제고 추진

(4) 기타

- **(마리나)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15.5/경제관계장관회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16.10/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5/경제관계장관회의)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Ⅲ-2-①)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 5252)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73-7**(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관련 연안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권역별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추진
- 마리나, 수중레저, 크루즈,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분야별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치유)** ‘해양치유 기본계획(‘22~‘26)’ 수립(‘21.12.)에 따라 고시 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양치유지구 조성 기반마련
- 해양치유 연구개발, 해양치유자원 정기 조사,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추진
- **(레저산업)** 레저선박 제조기술 개발 추진, 레저장비산업 판로 확대 지원, 업계 신뢰성·안전성 확보 등 산·학·연 협력 강화
- 해양레저장비 기술표준화 연구개발 착수, 국제보트쇼 전시·홍보 지원, 마리나산업 점검, 전문가 정책의견 수렴기회 확대
- **(관광 콘텐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연안자원과 연계된 특성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콘텐츠의 단순 개발이 아닌 창업 및 상품 사업화 연계,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통한 우수 상품의 시장 정착 및 관련 산업 발전 지원
-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휴양공간인 해수욕장의 편의·안전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복합 해양레저관광 연계기반 마련

- (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자체 협업 등을 통한 해양레저 체험 다양화 및 소비자-사업자 연계가 가능한 행사* 추진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 국제요트컵 대회 개최, 해양소년단 리갯타대회 등

- (크루즈 활성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지원체계 구축*,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등 국내 크루즈 산업의 성공적인 리부트를 위한 활성화 정책 추진

* 제2차 크루즈 기본계획 수립, 연안크루즈 지원방안 검토,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등

** 관계기관 합동 온·오프라인 Port Sales,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등

*** 유튜브, 방송매체 등을 통한 크루즈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마리나 인프라 조성)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 마리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거점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 [공사 중] 울진후포, 진해명동 [설계 중] 여수웅천, 안산방아머리 [계획수립 중] 부산해운대, 당진왜목

- ('21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성과관리과제의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지표 재수립 추진(6월), 해양관광 트렌드변화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발굴 등 정책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12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구축·운영방안 마련	'22.1월	
	치유 R&D 다부처 성과 공유회 추진	'22.1월	
	크루즈 홍보 동영상 제작	'22.2월	
	해중공원 활성화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2.2월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지원 추진계획 수립	'22.3월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계획 수립	'22.3월	
	2022년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22.3월	
	태안 해양치유센터 착공	'22.3월	
2/4분기	해양레저관광 정책포럼 개최	'22.4월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규명·안전관리 기술개발 R&D 추진	'22.4월	

	해양치유자원 정기조사 시행	'22.5월	
	우수콘텐츠(해양관광상품) 공모 및 해양레저관광상품 체험단 추진	'22.6월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22.6월	
	관계기관 합동 Port Sales 추진	'22.6월	
	마리나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22.6월	
3/4분기	포스트 코로나 해양관광활성화 대책 마련	'22.7월	
	부산항 축제 개최	'22.7월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연구 착수	'22.7월	국정 73-7
	KIMA WEEK 2022 개최	'22.8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2.8월	
	제2차('23~'27)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22.8월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22.8월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22.8월	
	해양치유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22.8월	
	후포 거점 마리나항 2단계 준공	'22.8월	국정 73-7
	우수 콘텐츠 지원사업 컨설팅 및 평가회 개최	'22.9월	
	해양치유지구 지정 매뉴얼 마련	'22.9월	
4/4분기	크루즈 홍보 콘텐츠 제작	'22.10월	
	신규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	'22.10월	
	해양치유체험프로그램 운영	'22.11월	
	시흥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	'22.12월	
	관계기관 합동 Port Sales 추진	'22.12월	
	우수 콘텐츠 지원사업 성과분석 간담회 추진	'22.12월	
	2022년 국제마리나컨퍼런스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레저관광 이용자, 레저관광 운영 및 관련 사업자, 관광지 상가 등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여행사, 여행상품 관련 업체, 일본, 대만 등 크루즈 유치경쟁 주변국, 크루즈 선사, 대리점 등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 역할 수행
- 해양치유 산업화를 통한 해양 휴양관광, 치유제품,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 및 연안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증진 도모
- 마리나 등 레저장비 산업분야 전시·판로확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해양레저관광 콘텐츠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발굴과 소비자-사업자 연계지원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성과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관광육성(Ⅰ-2-일반재정④)			
① 해양관광육성(2034)		481	588
▪ 해양관광육성(310)		481	588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412	519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15	21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		53	40
- (해양레저관광 정보 기반구축)	일반회계	3	3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5
해양수산업진흥(R&D)(Ⅰ-2-일반재정⑩)			
① 해양수산업진흥(R&D)(2046)		436	661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해수부)(R&D)(307)		9	12
▪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308)		-	20
▪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313)		-	24
해운물류지원(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10	8
▪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310)		10	8
마리나 항만개발(Ⅲ-3-일반재정⑬)			
① 마리나 항만개발(5062)	교특회계	65	153
▪ 마리나 항만(301)		65	1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콘텐츠 개발, 소비자-사업자 연계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달성을 위한 노력도(100%)를 목표로 설정 ①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및 상품운영 ② 전시회, 대회 등 해양관광 증대 행사 추진 ③ 제2차 크루즈 기본계획 수립, 생존수영 교육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 노력	① 콘텐츠 상품화율 (개발 건수 대비 상품 운용율 60% 이상)×40% ② 해양관광 증대 행사실적(연 2회 이상 개최)×30% ③ 제2차 크루즈 기본 계획 수립, 생존수영 교육 지원 여부(1개 완료 15%, 2개 완료 30%)	결과보고 및 추진실적 자료
② 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 추진율(%) (가중치 40%)	신규	100	100	100	1. 해양치유 제도·산업기반 구축율(50%) a 제도적 기반 구축(40%) ① 해양치유 고시 제정(50%) ② 해양치유지구 매뉴얼 마련(50%) b 산업적 기반 구축(60%) ① 해양치유산업 협업체계 구축(10%) ② 해양치유센터 조성 추진(30%) ③ 해양치유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20%) ④ 해양치유 R&D 연구 추진(20%) ⑤ 해양치유 자원조사 추진(20%) 2. 해양레저산업 정책 내실화율(50%) ① 국제보트쇼 개최를 통한 우수장비제조사 선정·홍보(30%) ②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관계 업단체 공청회(20%) ③ 해양레저관광 정책 포럼 발족(20%) ④ 해양레저관광 공모전 개최(20%) ⑤ 해양레저산업 R&D 추진(10%)	(해양치유 기반 구축율50%)+ (해양레저산업 정책 내실화율 50%)	결과보고 및 추진실적 자료(공문서) 등
③ 해양관광인프라 조성률(%) (공통)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5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의 조성률을 목표로 설정 * 총사업비('16~)해양레저관광 거점 (5개소), 마리나비즈센터(2개소), 해양치유센터(4개소), 해양 교육원 (2개소), 연안체험공원 1개소)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 × 100 *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16~(당해년도- 1년) 집행금액 합계 + 당해연도 집행실적	결과보고 및 추진실적 자료

2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Ⅲ-2-②)

해양정책과 (044-200-5226/5231/5294)

□ 추진배경 (목적)

- 체계적인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진흥을 통해 바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고, **해양교육문화 산업화**로 해양강국기반 조성 필요
- 국민의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이행수단 확보 필요
- * (Ocean Literacy)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과 콘텐츠 개발로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화·체계화하여 제도 정비, 운영 효율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

- (제도 정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1.2) 및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1.7)에 따라 제도 정비 등 체계 정비

< 가.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문화 지원 확대 >

- (교과개발) 고교학점제 도입(‘25)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선택권 확대와 학교장 신설 과목 지원을 위해 ‘통합해양’ 개발
- (평생교육) 생애주기에 맞는 세대별·계층별 해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해양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 (초·중·고) 해양체험프로그램, 해양동아리 지원, (대학생) 차세대 해양정책리더양성 아카데미(신규), (전 국민) 해양강좌, 해양교육포털, (교원) 교사연수 등

- (네트워크) 우리부 산하 교육문화시설 간 **해양교육문화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전시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유** 지원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등대박물관, 수산과학관 등으로 구성('16), 정례회의, 공동 사업 지원(신규) 등을 통해 연계 강화

<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이행체계 구축>

- (전문기관)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해양교육 정책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 (산업태동) 국공립 및 민간 해양문화시설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해양문화시설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유통·소비 채널** 마련

* 전국 단위의 정보공유 플랫폼, 공동 프로그램, 공동 학술대회(포럼) 등 추진, 첨단 콘텐츠(VR·AR·홀로그램 등) 개발·보급 환경 구축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

<다. 해양교육문화 디지털 생태계 기반 조성>

- (디지털 플랫폼) ‘해양교육포털(ilovesea.or.kr)’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K-오션 MOOC*) 디지털 해양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빅 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강좌 서비스 등 **스마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신규)

* Massive Open Online Course, 초기 저명인사 위주의 마스터클래스 강좌 제작·제공

- (운영 효율화)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기능 강화 및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해양문화복합시설로** 기능 개편
- **디지털화·첨단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 소통·공감** 공간으로 조성
- 국립해양박물관 **관리·운영**
- (디지털 오션관 건립) 첨단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전시관**, 대형 전시형 수장고 및 교육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 (필요성) 연관람인원(100만명) 대비 전시·수장면적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감형 체험 중심의 전시 구성, 해양교육기관으로서 역할 등 기능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필요

** (총사업비/사업기간/추진방식) 474억원/ 5년/ 임대형 민자사업

*** (추진일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23년 민간투자사업 한도액 반영('22.2~12)

- (전시·행사) 개관 10주년을 맞아 상설전시관 환경 및 콘텐츠 개선, 개관 10주년 기획전, 뮤지엄 나이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사업비/추진일정) 75억원 / 기획('22.1~6) → 용역 체결(~'22.8) → 설계 및 공사(~'23.5)

- (자료수집·관리) 국보급 해양자료 발굴·수집*을 강화하고, DB 구축 및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문화 확산 기반 고도화

* '22~'24년 해양자료수집 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요 전시와 연계한 해양자료 수집 ('21년 누적 수집자료 26,416점)

○ 국립해양과학관 관리·운영

- (전시) 해양과학 전시 중장기 로드맵('24~'28)을 마련하고, 증강 현실(AR), 가상현실(V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확충*

* 해양생태계(8)·극지(10존)의 모형 및 나열형 전시를 실감형 콘텐츠로 개선('22.3~12)

- (교육) 체험중심의 맞춤형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해양과학 교육 강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해양과학 특성화 교육 추진

* 어린이, 학생 교사 등 대상과 수준 및 목적에 따라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 구성

** 자체제작 교육영상 및 교보재 활용 프로그램, 온라인 쌍방향 교육프로그램 등 보급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요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19~'23. / 967억원(국비 870억원 / 지방비 97억원)
- (위치/규모) 인천시 중구(월미도 갑문매립지) / 부지 27,335m², 건축연면적 16,938m²
- (주요구성) 전시시설, 교육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수장시설 등
- (추진일정) '19~'21(설계) → '21~'23(공사) → '24.上 개관(예정)

- (건축공사) '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공사 착공('21.9~'23.12)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21.9~'24.5)

* (건축공사) '21.9~'23.12 / 58,958백만원, (건설사업관리) '21.9~'24.5 / 3,803백만원

- (전시공사) '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완료('21.8) 및 전시물 제작·설치 착수('21.8~'24.1)\

* (전시설계/공사) '20.3~'23.12 / 16,598백만원(설계 817, 제작·설치 15,781)

- (유물) 구입, 수증·수탁, 이관 등 전시주제에 부합하는 유물의 지속적 확보와 수집유물의 DB화 및 보존처리 용역 추진

* (유물수집비) 총 82억원('20~'23)

- (법인설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본격 추진에 따라 법인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 추진

* 추진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추진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추진

< 미래해양과학관 개요 >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5 / 1,043억원(국비 968 지방비 75)
- (위치/규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밀레니엄타운 내) / 부지 15,406㎡, 건축 15,175㎡
- (주요구성) 해양어드벤처관, 해양바이오관, 해양환경관, 해양로봇관 등
- (추진일정) '20~'21(설계) → '22~'24(공사) → '25.상 개관(예정)

- (공사착공) '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미래해양과학관 공사발주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22.10~'24.12)

* (건축공사) '22.10~'24.12 / 43,680백만원, (건설사업관리) '21.10~'25.4 / 2,576백만원

- (전시) 미래해양과학관 전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전시) '21.4~'25.4 / 38,567백만원, (추진일정) 전시기획('21.4~'22), 기본 및 실시설계('22), 작동물목업 및 콘텐츠 제작('23), 제작·설치·시운전('24.1~'25.4)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 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운동 '이달의 해양유물' 추진	'22.1~12월	
	해양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22.2~8월	
	디지털 플랫폼(해양교육포털) 전면 개편 홍보(네이밍 공모), 오픈	'22.3월	
	2022년도 청소년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마련	'22.3월	
2/4분기	해양교육문화 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	'22.4월	
	찾아가는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22.4~11월	
	해양교육센터 세부 지정기준 마련·고시	'22.5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건축 등) 발주	'22.5월	
	해양문화 교육사 양성	'22.6~9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수증유물 소개 웹툰 제작	'22.6월	
	제27회 바다의 날 해양문화행사 개최	'22.6월	
3/4분기	해양교육센터 세부 운영 기준 마련	'22.7월	
	2022년 바다동요대회 해양문화행사 개최	'22.7월	
	청소년 해양캠프 해양문화행사 개최	'22.8월	
4/4분기	2022년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해양문화행사 개최	'22.11월	
	'해양문명과 우리가 추구해야할 해양성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22.11월	
	K-오션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구축	'22.12월	
	제16회 장보고대상 해양문화행사 개최	'22.12월	
	해양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마련	'22.12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착공	'22.12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고선박(대부도2호선) 설계 및 착수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 국민, 특히 해양교육문화시설을 이용·활용하는 초·중·고 청소년, 관련 기관, 업계 종사자, 지역 주민 등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관련 기관, 시민 단체 등

□ 기대효과

- 해양교육문화 정책 강화로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향유권 향상, 향후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태동 기틀 마련

<해양교육문화 정책 변화>

구분	~ '20년 이전	'21년 이후 ~
법적 근거	없음	해양교육문화법·시행령·시행규칙
정책 방향	해수부 중심	범정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차관급)로 협업정책 가능
기본 계획	없음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 수립
운영 기관	민간단체	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 설치 등 법적기관으로 다변화
산업 육성	정책 부재	해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소비 지원 체계 마련

-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개선·확충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 관광객·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생산유발효과 9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3억원, 고용유발효과 842명, 취업유발효과 879명 발생

** (청주미래해양과학관) 생산유발효과 9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4억원, 고용유발효과 915명, 취업유발효과 955명 발생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문화 활성화(I -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 활성화(2031)	일반회계	534.5	747.9
▪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300)		49.4	50.8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308)		485.1	697.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가중치 50%)	신설	신설	신설	10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 추진 ① 해양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획 마련 (10%) ② 해양교육포털 디지털 플랫폼 전면 개편 (15%) ③ 스마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 (K-오션 MOOC) (15%) ④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가자수(만명): 8만명 (30%) (‘21년 7.2만명) 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여자 만족도(%) : 88.0% (30%) (‘21년도 83.6%)	①×10% + ②×15% + ③×15% + ④×30% + ⑤×30% +	관련 문서, 각 행사별 집계자료, 만족도 설문 조사 등
② 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가중치 30%)	신설	신설	신설	100	운영 효율화에 따른 박물관·과학관 목표 관람객수 및 관람 만족도 측정 ① 해양문화시설 목표 관람객수 (천명) : 29.8만명 (50%) (‘21년 관람객수 27.1만명) ② 해양문화시설 관람객 만족도 (%) : 91.1% (50%) (‘21년 86.5%)	①×50% + ②×50%	시설별 집계자료, 만족도 설문 조사 등
③ 해양문화시설 인프라 구축률(%) (가중치 20%)	신설	신설	신설	100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률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목표 공정률 : 32.9%(80%) (‘23년 99.7%, ‘24년 100%) ② 청주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목표 공정단계 : 착공(20%)	①×80% + ②×20%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관련 문서 등

(1) 주요내용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9) 수립에 따라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5차년도) /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 유지관리 등

□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

- 독도 시행계획 수립 등 독도 범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성과 지속적 확보

- 독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인프라 확충

- 이어도 등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체류형 연구 지속 추진 및 이안류 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위한 국가해양관측망 1개소 신설

*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추진 및 해양관측부이(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1개소 설치

□ 해양 과학영토 개척을 위한 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 (극지 진출)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非연안국 한계 극복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확대

- (심해저 광물탐사) 미래 개발에 대비하여 기 확보된 심해저 독점탐사광구에 대한 탐사 수행

- (대양연구) 해양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심해 환경 및 생태계 탐사 등을 위해 대양연구 수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이어도 및 해양 주권 학술 홍보 성과(%)	100%	100%	100%	100%	매년 2회 발간되는 <이어도 저널>과 이어도 관련 저서 발간 및 국내·외 전문가포럼 등 이어도 관련 학술 및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	학술논문 2편이상(15%) + 이어도 관련 저서 발간 2권(50%) + 국내·외 전문가포럼 1회(1건 * 15%) + 해양 아카데미 2회(20%)	자체 발간 <이어도 저널> 학술논문 및 이어도 관련 저서, 해양아카데미 수행 실적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이해관계집단(토지소유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관리유형 지정(변경)시 등 이해관계자별 설득·대응 필요
- 관련 전문가·지자체·소유자 등과의 무인도서 현장점검 및 이의 신청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

-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대응 독도 관련 사업 추진시 외교관계 및 안전·환경·문화재경관 보존 등과 상충될 우려
-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Ⅲ-3-①)

해양영토과 (044-200-5355 / 5356)

□ 추진배경 (목적)

- 유엔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해양주권 강화 및 효율적 국토관리 요구에 따라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영구시설물 관리 필요성 증대
-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에 대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2차('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20.6)*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 무인도서법 법령 일부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안(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서(섬) 관련 정책 연계관리 방안 마련
- 제2차 전국 무인도서 종합실태조사*(5차년도)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 및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 확보('22.12)
* 서해북부·남부 권역 323개 및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연차별 실태조사
- 사용자 맞춤형 무인도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22.12)
-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 지형도면(32개소)* 제작('22.12)
* 관리대상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정보의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등재용으로 '21년 현재 2,055중 2,023개소 제작 완료
- 이달의 무인도서 캠페인 등을 통한 무인도서의 영토적·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및 정책홍보 강화

- 영해기점의 영구시설물 설치가 완료(22개소, '21.12)됨에 따른 시설물 주기적 현장 점검(연중)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5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22.1월	
	영해기점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1
	무인도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유형 도면제작 추진 계획 수립	'22.2월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보험 가입	'22.3월	국정 41-1
2/4분기	무인도서 실태조사 착수보고 및 전문가 협의	'22.4월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신청 관련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22.4월	
	영해기준점 관리 관련 관계기관 협의	'22.4월	국정 41-1
	무인도서 관리시스템 상반기 설문조사	'22.6월	
3/4분기	무인도서 통계자료 제작	'22.7월	
	해양영토 및 무인도서 관련 홍보	'22.7월	
	영해기점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중간점검	'22.8월	국정 41-1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중간점검	'22.9월	
	무인도서 지형도면 제작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중간점검	'22.9월	
4/4분기	무인도서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2.10월	
	무인도서 실태조사 최종보고 및 전문가 협의	'22.11월	
	도서(섬) 관련 정책 연계관리 방안 마련	'22.12월	
	무인도서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22.12월	
	무인도서 관리시스템 하반기 설문조사	'22.12월	
	무인도서법 하위법령안 마련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토지소유자, 환경단체, 지자체

□ 기대효과

- 무인도서 등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도서의 체계적 보전·관리 기반을 통한 영토 주권 강화
- 무인도서별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유형 지정·관리 및 도서 정보의 공유·활용 등을 통해 조화로운 도서의 보전 및 개발
- 해양영토의 핵심 거점이며 새로운 경제 활동 창출의 공간인 무인 도서 정보 구축·제공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I -2-일반재정②)			
①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2032)		131	129
▪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311)		21	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무인도서 종합 정보시스템 고도화율(%) (가중치 40%)	산규	100	100	100	무인도서 통계자료 및 홍보물 제작과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를 목표로 설정	무인도서 통계자료(20%) + 지형도면 제작(20%) +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등 계획수립(30%) + 기능개선(30%)	내부 공문 및 관련 자료
② 무인도서 관리 기반 구축 추진율(%) (가중치 60%)	산규	100	100	100	하위법령안 마련 및 도서(섬) 관련 정책 연계관리 방안, 무인도서 실태조사 (5차년도) 결과를 목표로 설정	무인도서 관련 하위법령안 (20%) + 도서관련 정책관리 방안(20%) + 실태조사 추진율 (계획수립 및 전문가 자문 20% + 현지조사 20%)	내부 공문 및 관련 자료

② 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Ⅲ-3-②)

해양영토과 (044-200-5353)

□ 추진배경 (목적)

- 제4차('21~'25)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2년 범정부 시행계획 수립, '21년 연차보고서 작성으로 독도관련 정책 통합관리 추진
- 독도관련 영토주권 행사를 위한 과학적 논리근거 확보를 위하여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환경, 울릉도 형성원인 규명 등 과학적 조사활동 및 독도지반안정성 모니터링 활동 지속
 - 독도·울릉도의 형성기원과 관련성을 지질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저에서 암석채취 및 영상촬영
 - * 변화가 잦은 해류와 복잡한 해저지형을 극복하고 무인잠수정(해미레) 등 최첨단 탐사장비를 해저에 투입하여 연령·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 확보
-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활용·육성 하고 독도 접근기회가 낮은 사회적 배려층 대상 독도탐방 기회 제공
-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해양활동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안류 감시체계 확대 구축(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지원을 위한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 지속 추진 및 이어도 등 종합해양과학기지 시설보수 실시
 - 해양 예측정보 정확도 향상에 필수요소인 외해역 관측자료 확보를 위한 무인 이동형 해양관측시스템 운영 등 관측인프라 확충
 - *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외해역 관측은 과학기지 기반 3차원 지능형 해양관측 체계(AUV, 글라이더, 드론 등)를 구축하여 체류형 연구와 병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독도 정책통합 관리·공유를 위한 범정부 독도 시행계획 수립,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자료 확보·축적 및 독도 관련 교육·홍보 사업 지원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수호
- ◆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재난 대응 정보 정확도 향상 및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예보서비스
-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수유동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및 해양관측인프라 구축 확대, 해양활동 등 여가 증진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해양예보정보 서비스

-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환경 및 해저탐사 등 해양과학조사 기본 방침 확정('22.2.)
- '22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2.3.)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재정지원 공모사업 수행단체 선정·지원('22.4.)
- 범정부 독도관련 정책 추진현황 국회 연차보고('22.8.)
- 독도·울릉도 심해저 탐사를 통한 암석확보('22.11.)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과제 선정	'22.1월	국정 41-1
	'22년 해양과학기지 유지관리 용역 발주	'22.1월	국정 41-1
	이안류 해양관측부이 설치 계획 발주	'22.1월	
	독도 과학연구·조사 기본계획 수립	'22.2월	
	독도 민간단체 재정지원 공모사업 추진 계획 수립	'22.2월	
	독도 지속가능이용연구 및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착수	'22.3월	
	독도 탐방사업 수행단체 선정	'22.3월	
	'22년도 정부합동 독도 시행계획 수립	'22.3월	
2/4분기	이어도 등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 계획수립	'22.4월	국정 41-1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상반기 해양과학기지 관측자료 분석협의체 회의	'22.4월	국정 41-1
	독도 민간단체 공모사업 재정 지원	'22.5월	
	이안류 해양관측부이(울진 고래불해수욕장) 설치 완료	'22.6월	
3/4분기	'22년도 정부합동 독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22.8월	
	해양과학기지 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실시	'22.9월	국정 41-1
	해양과학기지 활용협의회 개최	'22.9월	국정 41-1
	해양예측모델(남해안 열염전선) 성능테스트	'22.9월	
4/4분기	해양과학기지 관측자료 분석협의체 회의	'22.10월	
	독도·울릉도 심해저 암석 채취	'22.11월	
	해양과학기지 유지관리 용역 준공	'22.12월	국정 41-1
	해양정보 활용 통계	'22.12월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연구 최종보고회	'22.12월	
	독도 드론 촬영 및 3차원 지형도 구축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독도 관련 연구·시민 단체, 독도관련 정책 합동 수립·협의 기관(국조실, 교육부, 환경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 기대효과

- 독도 관련 범정부 계획수립·이행으로 정책 중복성 방지·연계성 강화, 독도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과학적 논리근거 지속적 확보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독도관련 민간영역 육성
- 해양관측 인프라 확대 및 해양예·경보 정확도 향상으로 해양기인 재해·재난에 선제적 대응 및 해양감시체계 기반 구축

- 이안류 감시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해양안전 예측정보 생산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I -2-일반재정②)				
②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2032)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300)	일반회계	93	93	
해양정책및영토관리기반조성(I -2-일반재정③)				
③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2033)				
▪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307)	일반회계	374	36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독도 심해저탐사 성과(%) (가중치 50%)	22.5	49.5	74.4	100	'22년 최종목표치 (400kg) 90%가중치 + 목표달성시 10%가산	'22년 최종목표* (400kg) 채취*0.5(4/4년차)*90% + 최종목표 달성시 가산 10%	탐사결과 자료
② 사전예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율(%) (가중치 50%)	-	100	100	100	해양정보 제공 및 활용건수, 예·경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율 * 해양정보 활용건수: 매년 5% 이상 확대, 예측모델 및 국가 해양관측망은 연차별 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22년 2개소 신규구축)	해양 예·경보서비스 개선율(%) = (해양정보 활용건수 560만건 이상 제공) * 40% + (예측모델 연안해역 45개 권역 구축 완료) * 40% + (해양관측망 139개소 구축 완료) * 20%	자체자료

* 울릉도 10개 정점·독도 10개 정점 탐사 후 총 400kg 심해저 암석 확보(단, '21년부터 암석 절대연령·성분분석 결과 (성공시 10%p 가산)를 산식에 추가 적용)

③ 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Ⅲ-3-③)

해양개발과 (044-200-5225 /6182)

□ 추진배경 (목적)

- (극지 진출)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적인 연구 지역*이며, 과학연구를 통해 극지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 가능

*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전 지구 및 한반도 이상기후 초래

- 각국은 극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및 투자를 강화

⇒ 남극 내륙 핵심 연구거점 및 북극 종합관측망 확보, 기본계획 수립 등 극지 진출을 통한 글로벌 과학영토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심해저 광물탐사) 육상광물 공급부족, 가격상승 등 미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심해저 광물탐사를 통한 독점광구 확보 추진

* 해저열수광상(통가 EEZ, 피지 EEZ, 인도양), 망간단괴(태평양), 망간각(서태평양) 등 5개 독점탐사광구(11.5만km²) 확보

⇒ 광물가격 하락에 따라 심해저 광물의 상업화 시기 불확실성을 감안, 기 확보한 독점탐사광구의 효율적인 유지와 국제협력 필요

- (대양연구 확대)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의 빠른 상승*과 이상기후 현상 발생에 대응, 심해 환경특성 파악 등을 위해 대양연구 필요

* '68~'19년 간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1.26℃ 상승(전 지구 평균(0.51℃)의 약 2.5배)

⇒ 대양이 태풍, 고수온 등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심해 생태계 연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본 계획)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착수(3월), 제4차 남극연구 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4월) 등 중장기 극지 정책 추진 방향 정립

- (인프라 확대) 특수시료·실험공간 등 극지 환경을 재현한 산·학·연 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5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5월) 추진
- (연구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해저자원 탐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극지 및 대양 연구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서남극 빙하 붕괴에 따른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영향 연구, 북서태평양 태풍 강화 연구, 아북극-태평양 기인 한반도 고수온 연구
 - (해저자원 탐사) 북극 보퍼트해 해저환경 및 자원 탐사, 서태평양 망간각·인도양 열수광상 심해저광물 자원 탐사
 - (해양생태 연구)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변화 모니터링,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생태계 연구
- (연구생태 개방) 산·학·연의 북극해 연구·탐사 지원(5월), 쇄빙 연구선·대양조사선 등 연구인프라 공동활용(6월) 등 다양한 연구자의 극지·대양 연구 참여 활성화
- (국제협력 확대) 북극이사회 워킹그룹별 대응전략 마련(6월), 북극협력주간 개최(12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대응(9월)
- (인력 양성) 북극항로 운항 인력(10명/3월), 사회·과학(산업, 정책, 외교 등) 분야 인력(20명/7월), 북극 원주민 북방물류 교육지원(6명/3월) 등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 (정책 홍보) 극지체험전시회(8월), 논술 공모전(11월)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국북극전문가 네트워크(KAEN) 회의 개최	'22.2월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	'22.3월	
	극지해역 승무원 운항 및 안전교육 지원사업 착수	'22.3월	
	북극 원주민 교육지원	'22.3월	
2/4분기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22.4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착수	'22.5월	국정 41-1
	인도양 한-미 공동관측 연구 사업 착수	'22.5월	
	북서태평양 태풍 급강화 연구 사업 착수	'22.5월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변화 연구 착수	'22.5월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 추진	'22.5월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 선정	'22.6월	
3/4분기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22.6월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추진	'22.7월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22.8월	
	북그린란드 자동 기상관측장비 구축	'22.8월	국정 41-1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2.9월	
4/4분기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대응	'22.9월	
	남극 내륙진출로 개척(K-루트) 추진	'22.10월	국정 41-1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개최	'22.11월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개최	'22.12월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관측·감시망("K-Ocean Watch") 구축을 위한 예타사업 신청	'22.12월	국정 41-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산·학·연 및 극지 활동에 관심이 있는 민간 법인,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북극권 국가 및 극지 진출을 추진하는 경쟁국 및 관련 연구기관

□ 기대효과

- 제도·인프라·과학 연구 등 극지 및 대양 진출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통해 거버넌스 선도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I -2-일반재정①)				
①	해양영토관리 기반구축(2032) ▪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302)	일반회계	17.5 17.5	15.7 15.7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1110) ▪ 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301)	일반회계	851.8 851.8	894.4 894.4
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2042)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325)		- -	33.5 33.5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I -2-R&D①)				
①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2043) ▪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305) ▪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306) ▪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307) ▪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308)	일반회계	327.6 186.2 49.4 25 67	269.8 101.7 55 27.1 86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I -2-R&D②)				
①	해양자원이용 기술개발(R&D)(2041) ▪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R&D)(305)	일반회계	 34.8	 78.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 강화율(%)	신설	신설	100	100	-정책 기반 구축 (①제4차 극연구활동진흥기본 계획 수립(40%), ②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0%), ③인력양성(20명, 20%), ④극지 체험 전시회 개최(1회, 20%) - 연구 역량 강화 (①연구선 공동활용 과제 지원(30%), ②극지 및 대양연구 논문 발행(55건, 20%), ③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10%), ④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착공(20%) ⑤인도양 한-미 공동연구 착수(20%) - 국제협력 확대 (①북극협력주간 개최(25%), ②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대응전략 마련 (25%), ③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대응(25%) ④북극 원주민 교육 지원(6명, 25%),	(정책기반구축율+ 연구역량강화율 +국제협력 확대율)/3	내부 공문,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4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Ⅲ-3-④)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7)

□ 추진배경 (목적)

- 양자·다자 FTA 및 WTO 수산보조금 협상 시 수산업의 민감성 반영을 통해 국내 피해 최소화 및 수출시장 확대
- 국내 수산업 보호와 수출 유망 품목 확대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목적 달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상전략 마련) 기체결 FTA 효과와 주요 품목의 통계를 분석*하고 수산보조금 규범 국제논의에 문안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 대응 도모

* FTA 체결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변화와 수산자원관리, 수급동향 등 분석으로 국내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협상 대응 논리 마련 등(수시)

- (협상 진행 FTA) 메르코수르, 우즈베크, 멕시코, 에콰도르 등과 협상 진행에 따라 FTA별 수산물 양허전략 마련 및 협상대응(수시)
- (기체결 FTA) 한·아세안, 한·인도 등 추가 개선협상안 마련(수시) 및 한·뉴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22. 3) 등 성실 이행
- (신규 FTA) 한-UAE, 한-GCC 등 신규 FTA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관세감축, TRQ 및 장기철폐 등 개방을 최소화하고 수출 유망품목은 개방 요구
- (WTO) 제12차 WTO 각료회의('22.6.12~17)에서 수산보조금 협정을 타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협상 방향 마련

* IUU어업·과잉어획된 어종의 어획, 기타 보조금(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관리 수역 외 공해상의 비규제 어업 보조금) 금지

** 협정 발효(WTO 회원국 3분의 2 이상 비준) 후 **4년 내에**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유에 관련 후속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 수산보조금 협정 전체가 **실효**(일몰조항)

- (IPEF) 9월 개시 예정인 **IPEF 세부협상*** 대비 우리부 참여 필러**별 각료선언문 초안 분석 및 해양수산 관련 협력 의제 발굴·제안

* 7.26~27 화상 장관회의에서 현황 점검, 9.8~9 대면 장관회의(LA)에서 협상 개시 목표

** 필러1(무역), 필러2(공급망), 필러3(청정경제)

- (CPTPP 대응) 수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소통 및 보완대책 방향 보강을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국내 보완대책 TF 및 공청회 등 국내 가입절차 추진*

* 수산업·단체 및 어업인 설명회,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체결계획 수립), 국회보고

○ (대책회의 운영) FTA 협상 대비 사전 및 사후 대책회의(연중)를 통해 협상 역량 및 ‘대책-협상-결과’ 환류체계 강화

- 기 구축된 각종 협의회에 적극 대응하여 부처 간 공조 추진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등

○ (수입수산물 체계적 관리) 일본 김 수입할당(IQ) 제도 대응 및 안정적인 관세제도 운영으로 수입수산물 관리체계 효율화

- (김 IQ) 김 입찰·상담회,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를 통해 對일 김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김 수출쿼터의 공정한 배분 기준 마련

- (탄력관세 운영) 기획재정부의 탄력관세(조정·할당관세) 심사('22.9~12)에 적극 대응하여 해당 품목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

○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통상협상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수산현장 위주 홍보 실시

- WTO 수산보조금 및 FTA 협상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 개최(연중)

- 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연중)

- 인포그래픽 등 SNS 홍보콘텐츠 및 기고를 통한 이해도 증진(연중)

- 수산분야 통상협상 홍보

* 수산분야 통상협상 홍보 용역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설문, 빅데이터 이용 통상협상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계약 체결 시 ~ 22. 12.)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다자간 FTA 관련 수산업계 설명회 개최	'22.1~2월	
	해양수산 통상 관련 법률자문 계약 운영	'22.1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Mega FTA 수산분야 대응전략 용역 착수	'22.2월	
	한·뉴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2.3월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모형 개발(2차년도) 용역 착수	'22.3월	
	FTA 협상 대응	'22.3월	
	김 수출쿼터 배분관련 갈등영향 분석 용역 착수	'22.3월	
	할당관세 품목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22.3월	
	국가별 수산보조금 분석 및 WTO 협상 전략 마련 용역 착수	'22.3월	
	WTO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대응	'22.3월	
2/4분기	수산분야 통상협상 홍보 및 연구 용역 착수	'22.4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Mega FTA 수산분야 대응전략 용역 완료	'22.6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코드집 발간	'22.6월	
	WTO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대응	'22.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MC 12)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대응	'22.6월	
	김 입찰·상담회 개최	'22.6월	
	FTA 협상 대응	'22.6월	
3/4분기	김 수출쿼터 배분관련 갈등영향 분석 용역 완료	'22.7월	
	IPEF 협상 대응	'22.7월	
	수산분야 통상협상 홍보 및 연구 용역 중간보고	'22.8월	
	국가별 수산보조금 분석 및 WTO 협상 전략 마련 용역 중간보고	'22.8월	
	WTO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대응	'22.9월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모형 개발(2차년도) 용역 중간보고	'22.9월	
	FTA 협상 대응	'22.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수산물 탄력관세 대응 계획 수립	'22.11월	
	국가별 수산보조금 분석 및 WTO 협상 전략 마련 용역 완료	'22.12월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 개최	'22.12월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모형 개발(2차년도) 용역 완료	'22.12월	
	FTA 협상 대응	'22.12월	
	한-뉴질랜드 수산분야 협력사업 성과평가	'22.12월	
	수산분야 통상협상 홍보 및 연구 용역 완료	'22.12월	
	WTO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대응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FTA 및 WTO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증가로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업체

□ 기대효과

- 상대국 이해를 파악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제무대(WTO, CPTPP 등) 협상력 강화, 우리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및 수출 확대기반 마련
-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어업인 공감대 형성 및 신뢰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원양어업기반 구축(I-4 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회계	237	205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301)	농특회계	49	44
기금운영비(기금) * 성과관리번호는 없음(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① 기금운영비(기금)(7140)		수발기금	4	9
			(20)	(20)
▪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징수비용(254)		수발기금	4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수산분야 통상협상 FTA, CPTPP 관련 설명회 참석자(명)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600	○ 통상협상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년도 설명회 참석자(521명) 보다 상향 설정	홍보용역 설명회 참석자+ 해수부 주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참석자 +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참석자	홍보용역 설명회 해수부 주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참석자 수 산출
②주요 FTA 상대국의 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수용률(%) (가중치 60%)	14.0	14.7	24.7	17.8	○ 기존 3년간 실적 평균치를 목표치로 설정 - 수산업 피해 최소화 등 우리부 FTA 협상 전략에 따라 불수용률이 높을수록 통상협상에 잘 대응한 것임	(우리측 미개방 품목수 / 우리측 시장개방 대상 품목수)×100	FTA 협상 대응 결과 내부 요약 보고서

5 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Ⅲ-3-⑤)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1/5342)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수산 ODA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자협력을 통해 수산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ODA 규모 확대) 해외 조업기반과 연계한 ODA 사업 확대 및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관리
 - 핵심 조업어장 국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간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 (협력기반 구축·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전통 해양국가와의 협력기반 마련 및 既협력체계 활성화
 - 프랑스, 포르투갈 등 전통 해양국가와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해양수산 협력 MOU 체결 추진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협력체계가 既 구축된 국가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공동위 개최 추진
 - 공동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해양수산 주요 협력국과 주한공관의 주요 협력 추진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제이슈의 공동 대응 및 인적교류 확대 등 전략적 협력 추진
- (IUU 워크숍 개최) 세계해사대학(WMU)과 MOU를 토대로 개발도상국들, 국제기구, 각국 전문가 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 추진
 - 제1회('21.10) 및 제2회('22.2)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발표 자료와 논문 등을 취합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개발도상국에 보급

- (현장의견 정책 반영) 원양선사, 원양어업관련사업자 등의 ODA 수요 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 수산양식, 항만개발,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분야 업계·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년도 해양수산 ODA 신규사업 발굴 점검회의	'22.2월	
	해수부-WMU IUU 어업 대응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2.2월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계약체결	'22.2월	
	한-베트남 해기사 양성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22.3월	
	2022년도 무상원조시행계획 제출	'22.3월	
2/4분기	해수부-WMU IUU 어업 대응역량강화 워크숍 교재 개발	'22.5월	
	UN OCEAN 컨퍼런스 참석	'22.6월	
3/4분기	PIF 정상회의 계기 장관님 피지 순방	'22.7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 면담 및 해양수산협력 MOU 체결	'22.7월	
	한-베트남 해양협력 MOU 체결	'22.9월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운영예산 확보	'22.9월	
4/4분기	해수부-WMU IUU 어업 대응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2.10월	
	해양수산 ODA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2.11월	
	한-인도네시아 해양공동위 개최	'22.12월	
	신남방국가 승선실습프로그램 실시	'22.12월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22.12월	
	한-포르투갈 해양수산협력 MOU 체결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직접적인 수혜자는 ODA 수원국, 수원국에 입어하는 원양어업자, 개발도상국 등이며
 - 원양수산물의 국내 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국민도 수혜대상임
 - 또한, 주요 국가와의 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도 정보 확보에 기여하므로 해양수산분야 민간·학계도 수혜대상임
- (이해관계자) 원양어업자(관련 종사자 포함), 수산자원 보유 연안국 등

□ 기대효과

-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국격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 도모
- 양자협력 강화로 수산양식,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외교정책과 연계한 성과사업 발굴
-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원양어업기반구축(I -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		
	▪ 연안국과의 협력(ODA)(302)		158	125
	▪ 국제수산기구 협상(301)	농특	49	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정부 아세안 정책 연계 해양수산 ODA 추진 건수(건) (가중치: 60%)	신규	신규	10	12	정부의 아세안정책과 연계한 해양수산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매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전년도 아세안 국가 연계 해양수산 ODA 추진건수(10건) 대비 20% 증가한 12건으로 목표치 설정	아세안 국가 ODA 추진 건수	ODA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자료
② 양자협력 MOU 체결건수(건) (가중치 : 20%)	신규	2	4	4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MOU 체결은 중요한 단계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1년 체결 건수는 4건에 그침 '22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양·수산분야 양자 협력 저변확대를 위해 서면 협의 및 서면 또는 화상 체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년 동일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MOU 체결 건수	MOU 서명 사본
③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건) (가중치 : 20%)	신규	신규	신규 (1)	2	'21.6월 MOU 체결을 토대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21년에는 하반기에 1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나, '22년에는 상·하반기 2회 개최 예정	워크숍 개최건수	워크숍 보도자료 또는 결과물

6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Ⅲ-3-⑥)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4/5341)

□ 추진배경(목적)

- 해외 수산자원, 특히 원양어획물 확보는 국내 수산물 공급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특히, 명태, 꽁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참치, 이빨고기 등 고가 어종은 대부분* 원양어업을 통해 어획

* 명태, 참치, 이빨고기 100%, 꽁치 81%, 오징어 52%('21년 기준)

- 원양어획물은 주로 어획할당량이 결정되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수역에서 어획*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획물(약 43.9만톤, '21년 기준) 가운데 3/4 이상이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관할수역에서 어획되고 있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여도 확대) 자발적 기여금 출연, 지속적인 과학조사* 지원 및 수행을 통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다랑어 표지 방류사업('09 ~, 연 2억원),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남방참다랑어 생태특성 조사('15 ~, 연 1억원)

- (회의 대응)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하부위원회* 회의 및 연례회의의 적극적·연속적 대응을 통한 협상력 증진 및 어획할당량 확보

* 작업반 회의, 과학위원회, 이행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 (회의 개최 및 양자협약)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하부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일본, EU 등)과의 사전 양자협약(상시) 등을 통한 협상 밀도 강화

*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과학위원회 개최('22.9)

- (읍서버 역량강화)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모범조업국의 위상 확보를 위한 인력풀 확대* 및 직무교육 내실화(연2회→연4회)

* ('22) 68명 ⇒ ('23) 83명 ⇒ ('24) 100명 ⇒ ('25) 118명 ⇒ ('26) 137 ⇒ ('27) 158명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위원회 총회 대응	'22.1월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회의 대응	'22.3월	
2/4분기	상반기 찾아가는 직업설명회 개최	'22.4월	
	1차 국제읍서버 역량 강화 정기교육 개최	'22.4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대응	'22.5월	
	2022년 상반기 국제읍서버 발전협의회 개최	'22.6월	
	2차 국제읍서버 역량 강화 정기교육 개최	'22.6월	
3/4분기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연례회의 대응	'22.8월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회의 대응	'22.9월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과학위원회 개최	'22.9월	
4/4분기	3차 국제읍서버 역량 강화 정기교육 개최	'22.10월	
	제41차 CCAMLR 연례회의에 보존관리조치 제·개정안 제출	'22.10월	
	하반기 찾아가는 직업설명회 개최	'22.10월	
	2022년 하반기 국제읍서버 발전협의회 개최	'22.11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 대응	'22.11월	
	4차 국제읍서버 역량 강화 정기교육 개최	'22.12월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연례회의 대응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원양어획물을 소비하는 일반국민·원양업체 등
- (이해관계자) 원양어업 종사자, 한국원양산업협회, IUU 어업 관련 NGO 단체, EU, 미국 등 연안 조업국, 정부

□ 기대효과

- 국제수산물기구 대응 및 다자간 협력으로 어획할당량 확보, 우리나라 원양어업 여건 안정화 및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원양어업기반구축(I -4 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회계	237	205
▪ 원양어업활성화(300)		농특회계	47	44
▪ 국제수산물기구 협상 및 대응(301)		농특회계	49	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원양어업 조업쿼터 확보량(천톤) (가중치 60%)	47.9	49.0	62.0	61.0	국제적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유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양자 회의를 통한 쿼터 확보 등을 통하여 목표치를 3개년 평균 실적치(53)에서 약 15% 증가시켜 설정	러시아 수역을 제외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어획할당량	내부 보고자료,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결과 보고서(기구별 홈페이지)
② 읍서버 신규양성 및 제도활성화 추진율(%) (가중치 40%)	100	100	50	100	읍서버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읍서버 선발 및 직무교육 개최 수를 목표로 설정	①신규읍서버(15명)양성(50%) ②직무교육(4회)개최(50%)	내부 보고자료

* 어획할당량 산정 대상 지역수산물관리기구(8개)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1) 주요 내용

□ 해양환경 위해요소 관리체계 마련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 강화
-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및 해양오염 등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
-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 제어를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 및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등을 통한 해역수질 개선
- 대형방제선 준공, 침몰선박 등 잠재적 위해요소 선제 대응, HNS(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기술개발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 해양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구축

-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구축
- 해운·수산 온실가스 통계 생산 및 연안습지, 해양폐기물 등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반영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기반 마련
- 한반도 연근해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대국민 해양기후 서비스 제공 강화

□ 2050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추진

- 해양플라스틱 발생량을 '30년 60% 저감, '50년 제로화 목표로 발생예방-수거-재활용-기반구축 등 전방위적인 관리 강화
-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유입·발생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모니터링(매년) 결과를 정보공개 및 공유 추진
- 반려해변 등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 해양공간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해양공간 관리체계 정비 및 과학적 조정기반 마련
-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건강성 회복

-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 확대 및 갯벌 가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해양포유류 서식환경 개선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해양수질 개선율(%)	61	50	58	58	최근 3년간 평균 실적(56%)보다 2%를 상향한 58%로 설정 * 해양수질은 유입 부하량이 감소하더라도 강우량, 강우빈도, 해수온도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이 곤란	(WQI 1등급 점점 수) ÷ (전체 연안 해역 조사점점 수) × 100%	내부보고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강우량, 기온 등 기상조건과 육상 오염 물질 유입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각종 정책의 시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분석이 요구

* 연도별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질개선 추세치 분석값이 중요

□ 해양공간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해양공간 관리체계 정비 및 과학적 조정기반 마련
-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건강성 회복

-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 확대 및 갯벌 가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해양포유류 서식환경 개선 등 추진

(4) 기타

□ (참고자료)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법정계획 및 법령 제·개정 사항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Ⅲ-4-①)

해양보전과 (044-200-5301/5847)

□ 추진목적

- (해양쓰레기 대응) 해양쓰레기는 수산 자원 감소, 선박 운항 방해, 해양 환경 오염 등 해양·수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 체내에 축적되고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현안*으로 인식
- * G20 정상회의('19.6)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이행체계 채택, 유엔환경총회('22.3)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등 해양쓰레기 문제를 기후변화에 준하는 전 지구적인 현안으로 인식
- (오염해역 정화·복원) 오염퇴적물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 삶의 질을 저해
 - 조선소, 해양시설, 산업폐수 등으로부터 유입된 오염퇴적물은 확산·재부유 등에 의해 용출되어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등 야기
- (환경성 검토 강화) 해양 이용·개발 수요가 대규모·다양화되고 사회 갈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중요성 증대
 -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분별하고 공탁제 도입, 평가절차·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선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및 해양이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고도화로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 (예방·수거)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및 신속·효과적인 수거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 바다환경지킴이 법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실태 점검 및 인력 증원 검토
-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동결파쇄, 유해성분 제거 등)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친환경선박 개발 착수(450억, '22~'26)
- 해양쓰레기 수거 우수지자체 선정.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미세플라스틱)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 해양 유입·발생 평가, 환경거동 기작 규명 및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추진('22~'26)

* ①해양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 ②해양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③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차세대 친환경부표) 기술개발

-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 결과(90개 정점, 2회)를 공개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공유·개발 체계 마련

○ (재활용)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업사이클링 글로벌 마켓* 겨냥한 전문 업체 육성 등 ESG 경영과 연계하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율 30%까지 증대(現 10%↓)

* 삼성(갤럭시S22), 아디다스(Parley운동화), MS(마우스) 등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 中

- (민간참여) 반려해변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 확산으로 전국민 참여 캠페인화 추진, 바다가꾸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 활동역량 강화
- (협력강화) 기관 간 협업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22.9, 부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적극 참여
 - 신남방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성과를 체감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폐기물 협력사업(ODA) 추진
 -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 운영
 - *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계기관 협의회,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제2차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 (오염퇴적물 정화)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정화·복원하여 해양수질 개선하는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관리체계 고도화
 - * 육상오염원 관리·차단, 오염원인자 부담 추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해양 환경성 평가) 해양 이용·개발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추진
 - * 해양이용영향평가 개선방안 마련(5월)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7월)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2.1월	국정 41-7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7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22.3월	국정 41-7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착수	'22.3월	국정 41-6
2/4분기	반려해변 코디네이터워크숍 실시	'22.4월	국정 41-7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협의체 구성	'22.4월	국정 41-7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계획(방침)	'22.5월	국정 41-7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현장점검	'21.5월	국정 41-7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예정지 실시설계 착수	'21.5월	국정 41-6
	해양이용영향평가 개선방안 마련	'22.5월	국정 41-6
	바다가꾸기 온라인플랫폼 오픈	'22.6월	국정 41-7
	바다환경지킴이 법제화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6월	국정 41-7
3/4분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	'22.7월	국정 41-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실태 점검	'22.8월	국정 41-7
	오염퇴적물 수거작업 착수	'22.8월	국정 41-6
	사업 후 해양환경모니터링 3분기 현장조사 실시	'22.8월	국정 41-6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22.9월	국정 41-7
	런던의정서 2009개정에 대한 수락 및 2019 결의서에 대한 선언서 제출	'22.9월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공모전 당선작 제품화	'22.9월	국정 41-7
	2022년 해양쓰레기 수거 우수지자체 평가	'22.9월	국정 41-7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기념 행사	'22.9월	국정 41-7
4/4분기	2021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지 현장점검	'22.10월	국정 41-7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2.11월	국정 41-7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2.11월	국정 41-7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2.11월	국정 41-7
	신남방 국가 체감형 해양폐기물 협력 사업 추진	'22.12월	국정 41-7
	제2차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2.12월	국정 41-7
	2022년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완료	'22.12월	국정 41-7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22.12월	국정 41-7
	CCS 관련 해양수산분야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역주민·어업인·관광객, 부유쓰레기 수거를 통해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선박운항 관계자·승객
- (이해관계자) 사업대상지를 통항·이용하는 해운업계 및 어업인, 사전 환경성 평가 대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

□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및 오염퇴적물 수거·처리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 환경 개선 및 항행 안전 위해요인 제거
-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수요 증가
- 선진화된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 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및 국민 수용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I -1-일반재정②)				
①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1033)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일반회계	140	141
		일반회계	140	141
해양환경개선(기금)(I -1-일반재정⑦)				
① 해양환경개선(1065)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301)		수발기금	444	357
		수발기금	444	3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해양쓰레기 수거량(톤) (가중치 : 50%)	108,644	138,362	120,736	109,110	태풍발생횟수와 장마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목표치 상향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5년간 실적 평균 수준으로 설정	당해 연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양환경정보포털 입력 실적
②반려 해변 입양수(개) (가중치 : 40%)	신규	신규	23	39	'21년 23개+'22년 16개(8개 시도× 2개)	입양자 수 (누적)	입양 서약서
③오염퇴적물 수거량(천m³) (가중치 : 10%)	120	134	199	120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른 실적	오염퇴적물 당해연도 계획 수거량 대비 실제 수거량 비교	해양환경공단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준공검사서

②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Ⅲ-4-②)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1/ 5282)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 바다는 해수온·해수면 상승 등이 전 지구 평균치를 상회*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 시급한 대응 필요

* (표층수온) '68~'20 1.27°C↑(세계 평균 0.53°C) (해수면) '71~'06 2.56mm/yr↑(세계 평균 2.36mm/yr)

- 이에 따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323.7만톤)를 목표로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21.12)
- 탄소중립 로드맵 체계적 이행 및 해양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체계도 기후 위기 대응형으로 전환 필요
 - 해양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구축 및 장기 전망 연구 추진,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강화
 - 주요 탄소흡수원인 해양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깨끗한 해양수질 확보 및 해양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 해양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추진
 - 연안 마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고,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탄소중립 해양마을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구축
 -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하여 추진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개편
 - 해양 기후변화 통합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한반도 연근해 해역 맞춤형 장기 해양기후예측 모델 개발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온라인 콘텐츠 제작(2종) 및 보급,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금년도 선정된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탄소중립 해양마을 조성 사업 추진 지원

○ 깨끗한 해양수질 확보 등 해양 건강성 회복

-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 제어를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 및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등을 통한 해역수질 개선

-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감시 강화 및 발전소 온배수 관리체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해역 이용의 토대 마련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조성하기 위해 하구 관리방안 수립

○ 해양환경 위해요소 대응체계 구축

- HNS(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기술개발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 2차 항행안전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침몰선박 관리 강화

- 악천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대형방제선 준공을 통해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분야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22.1월	
	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추진계획 수립	'22.1월	
	탄소중립 해양마을 선정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22.2월	국정 41-7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방사능 오염수 감시 강화 포함)	'22.2월	
2/4분기	온배수 관리방안(이해관계자 의견수렴용) 마련	'22.4월	
	하구관리방안 수립	'22.4월	국정 41-6
	해양 기후변화 통합관측·장기전망 R&D 착수	'22.5월	국정 41-7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개선방안 마련	'22.6월	
	탄소중립 해양마을 지자체 설명회 개최	'22.6월	국정 41-7

3/4분기	다목적 대형방제선 준공 및 취항식	'22.7월	국정 41-6
	찾아가는 강사단을 활용한 교육 실시	'22.8월	
	온배수 관리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2.8월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22.8월	국정 41-7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 실무매뉴얼 개정	'22.9월	국정 41-6
4/4분기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22.10월	
	2022년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작업(1척)	'22.10월	국정 41-6
	특별관리해역 유입 점오염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2.12월	국정 41-6
	포스트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체제 운영방안 마련	'22.12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온라인 콘텐츠 제작(2종)	'22.12월	국정 41-7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2020년) 구축	'22.12월	국정 41-7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마련	'22.12월	국정 41-7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연안환경 영향 평가 대응 지침서 개발	'22.12월	국정 41-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특별관리해역 인근 지역 및 연안지역 거주 주민, 어업인 등 전 국민
- (이해관계자)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원, 바다를 활용하는 지자체, 주민, 어업인, 단체 등

□ 기대효과

- 해양 기후변화 대응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에 기여
- 자료 기반 체계적 해역관리를 통해 해양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 기반 조성
- 해양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로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I -1-일반재정②)				
①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1033)		일반회계	111	145
	▪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300)	일반회계	41	45
	▪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운영(320)	일반회계	67	98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260-01)		3	2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술 개발(III-2-R&D①)				
①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4132)		일반회계	30	40
	▪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술 개발(306)		30	40
해양오염피해복구(I -1-일반재정⑤)				
① 해양오염피해복구(1036)		일반회계	239	370
			(246)	
	▪ 해양환경교육 운영(301)		42	36
	▪ 침몰선박 관리사업(304)		37	66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305)		160	268
지역밀착형 오션뉴딜				
① 어촌뉴딜300(3345)		농특회계	-	19
			-	-
	▪ 탄소중립형(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310)		-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해양수질 개선 개소수(개소) (가중치 : 50%)	14	10	11	12	최근 4개년간 WQI 1등급 달성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1년도에는 1등급 달성 실적 반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1~'30)에서 제시하고 있는 '25년도까지 1등급 해역 17개소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 연차별 목표치 배분('21년도: 11개소 → '22: 12 → '23: 13 → '24: 15 → '25: 17)	ΣWQI 1등급 달성해역 * 전체 26개 해역	내부보고자료
② 해양오염 방제교육 이수인원 (가중치 : 50%)	3,762	4,100	5,350	6,420명 (신규)	선박해양오염방지인교육 및 전문방제교육 이수 인원 최근 5년 연간 증가인원 평균	해양환경교육원 교육 이수자 수	해양환경교육원 통계

③ 해양보전과 이용의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Ⅲ-4③)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3/5266/5297)

□ 추진배경 (목적)

- 국민 모두가 바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 계획의 체계적 운영과 해양수산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이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의 차질없는 수립 및 효과적인 운영과 이에 연계된 각종 제도들의 고도화 및 정비가 요구되며,
 -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해양수산정보의 통합·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빅데이터분석 및 디지털트윈 등 플랫폼 구현의 가속화 필요
- 해상풍력 등 공유수면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공유수면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증대하고 있으나,
 - 그간 공유수면 관련 제도는 공유수면의 이용·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부족
 - * 「공유수면관리법」(‘61) 및 「공유수면매립법」(‘62)이 제정된 이후 약 60년 간 매립·점용·사용 등 공유수면 이용·개발 중심의 제도 운용 중
 - 이에 공유수면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공유수면의 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전·관리 중심으로 전환 필요
- 해양공간에 대한 활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해상경계가 명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간 갈등이 장기화·극대화된 상황
 - * 웅진·태안(‘05~‘09), 홍성·태안(‘10~‘15), 고창·부안(‘16~‘19), 경남·전남(‘15~‘21) 등 현재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해상경계 분쟁해결 시도 급증
 - 해상경계에 관한 법제 마련을 통해 해양공간·환경 관련 지자체 간 권한·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비용 저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및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

- 합리적인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고시
 - 충남·강원·울산·전남·전북·경북 등 해양공간에 대해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한 해양공간계획 고시로 우리나라 쏘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확정 완료 추진

※ 해양공간계획 확정 : 부산('20)→인천·경기·제주·경남('21)→충남·강원·울산·전남·전북·경북('22)

- 해양공간계획 체계 고도화 및 실효적 관리수단 확보 등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법제 개편
 - 용도구역 세분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 등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시) 어업활동보호구역 : 자원관리(보호수면), 이용(양식), 개발(어항), 복합(낚시, 관광)

** 해양공간을 개발하기 전 해수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제도

- 전문가 워크숍,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법제 개정 수요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법 법률 개정안 마련
- 해상풍력사업의 이해관계자 소통 및 의견수렴을 위해 어업인, 수협 등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와의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정보 민·관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및 품질관리
 - 해양수산정보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데이터 품질 개선, 정보 통합(165종) 및 해양공간종합지도 구축
- 수집된 해양수산정보의 분석·활용서비스 강화
 - 디지털트윈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AI 분석모델(3개 과제) 개발

< 보전·관리 중심의 공유수면관리체계 구축 >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등의 종합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상정·보고(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정비
 - 공유수면 제도 개선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보고회 및 포럼 등 개최
- * 본부- 지방청 공유수면 관리청 정기업무협의회(분기별 1회),

<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기반 마련 >

- 해상경계 설정 관련 법령 부재(현재 현재 심판으로 조정中)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경계 획정기반 마련
 - 해상경계 설정 기본방향·원칙 및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 해상경계 설정위원회 구성·운영, 설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해상경계설정추진단 설치 근거 등
- * 법령안 마련('22.3) → 전문가 의견수렴 2회('22.4~5) → 지자체 의견수렴('22.8~9) → 국회 전문가 포럼('22.9)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22.下)

< 해양관할구역 설정 중장기 추진계획 >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추진 내용	해상경계 설정 기본계획 수립	해양경계 획정 (동해안)	해양경계 획정 (남해안 동부)	해양경계 획정 (서·남해안)	해양경계 획정 (서해안)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6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상정	'22.1월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 고시	'22.2월	국정 41-6
	해상풍력 관련 해양수산 분야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간담회	'22.2월	국정 41-6
	해양수산정보 산·학·연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22.2월	국정 41-6
	해양공간계획제도 발전방안 전문가 워크숍	'22.3월	국정 41-6
	해양관할구역 설정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22.3월	국정 41-6
2/4분기	해양공간계획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22.5월	국정 41-6
	해양공간계획법 법률 개정안 마련	'22.6월	국정 41-6
	울산·전남·전북·강원·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 고시	'22.6월	국정 41-6
	해양수산정보 산·학·연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22.6월	국정 41-6
3/4분기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 관련 이해관계자·전문가 간담회	'22.8월	
	해양수산정보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	'22.9월	국정 41-6
	해양관할구역 설정 법률안 제정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등 의견수렴회	'22.9월	국정 41-6
	해양수산정보 산·학·연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22.9월	국정 41-6
4/4분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의견수렴	'22.10월	
	해양관할구역 설정 법률안 마련	'22.11월	국정 41-6
	해양수산정보 산·학·연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22.11월	국정 41-6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빅데이터·AI분석모델 개발	'22.12월	국정 41-6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본설계·구조 도출 및 정책시뮬레이션 대상 선정 분석 보고서 마련	'22.12월	국정 41-6
	해양수산정보 산·학·연 이용활성화 및 맞춤형 제공계획 수립	'22.12월	국정 41-6
	해양수산정보(165종) 통합 및 해양공간종합지도(경북, 강원) 구축	'22.12월	국정 4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마련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일반국민,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해양수산 특성화 학교, 민간 기업 등
- (이해관계자) 해양공간·공유수면 인접 지자체, 주민, 어업인, 사업자,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해양공간통합관리 체계의 내실화 및 안착 기반 조성을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해양공간관리 행정 구현
-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개방으로 타 분야 정보와의 융합기반을 제공하여 해양수산 분야 정책 지원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허가절차 위주의 현행 공유수면 법제도를 종합적 관리정책으로 체계화·다변화하여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전하고, 제도 간 충돌로 인한 갈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 평균 10여년 소요되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하여 지자체 행정비용 및 사회적 갈등비용 저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I -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1031)	일반	30 (30)	26 (26)	
▪ 해양공간 통합관리(305)		30	26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I -5-정보화⑨)				
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4280)	일반	24 (24)	24 (24)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500)		24	24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Ⅲ-3-R&D⑦)				
①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4132)	일반	-	32 (32)	
▪ 디지털트윈 기반 해양공간 입체적 통합관리 및 서비스 개발(312)		-	32	
연안관리(I -1-해양환경보전④)				
① 연안환경관리(일반)(1034)	일반	-	3 (3)	
▪ 연안관리(300)		-	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및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가중치 40%)				100 해양공간통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공간계획 고시 및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과 해양공간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관련계획·보고서 마련을 목표로 설정 ① 충남·울산·전남·전북·강원·경북·해양공간계획 고시·확정 ② 해양공간제도 고도화를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개정안 마련 ③ 해양수산정보 산·학·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 상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④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본설계·구조 도출 및 정책시뮬레이션 대상 선정 분석 보고서 마련 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정도 (165종 수집) 및 해양공간종합 지도(강원·경북) 구축	①(고시건수/목표건수(6건))×35% ②(마련율/목표마련율(100%))×35% ③(수립건수+개최건수)/목표건수(5건, 수립1개최4)×10% ④달성건수/목표건수(1건))×10% ⑤(당해연도까지 해양수산정보 누적 구축율/목표구축율(100%))×10%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② 보전·관리 중심의 공유수면관리체계 마련 (가중치 40%)	-	-	-	100 공유수면제도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전부개정안 마련, 각종 협의회 개최 및 소통실적건을 목표로 설정 ①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장관급 협의체 상정·보고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마련 ③ 추진과정 중 각종 보고회, 협의·간담회 등 개최 ④ 공유수면관리청 대상 정기적 업무협의회 개최	①(개편안 상정 보고 건수/상정·보고목표건수(1건))×20% ②(마련율/목표마련율(100%))×50% ③(개최건수/목표건수(4건))×15% ④(개최건수/목표건수(4건))×15%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③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기반 마련 (가중치 20%)				100 바다의 관리 영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해소를 위해 해양경계 획정관련 법제 마련 및 관련 협의회 운영실적을 목표로 설정 ①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안 마련 ② 추진과정 상 전문가 포럼, 지자체 설명회 및 의견수렴회 등 개최	①(마련율/목표마련율(100%))×60% ②(개최건수/목표건수(4건))×40%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4 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Ⅲ-4-④)

해양생태과 (044-200-5313~8 / 5327)

□ 추진배경 (목적)

- 다양한 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개발·이용 수요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 수단 확보 및 시행
 - 갯벌 등 연안에 대한 개발·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자산에 대한 보전·보호 강화 필요
- * 해역이용협의 실적(건) : ('09) 1,663 → ('12) 2,150 → ('16) 2,274 → ('20) 2,401
-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해양생태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폐염전 등 훼손된 갯벌을 자연갯벌로 복원하고 유휴 갯벌에 식생 복원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탄소 흡수능력 증진
- ◆ 갯벌세계유산의 통합관리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생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

① 정책(제도) 기반 마련

- 갯벌세계유산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갯벌법」 개정(안) 마련 및 국가해양정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22.下) 추진
-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 및 채취금지 구역(No-take) 설정 등 용도구역제 도입 방안 마련
- 대륙붕 등 신규 블루카본 발굴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반영, 블루카본의 체계적 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2.12)
 - *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블루카본 2단계 R&D 추진 및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량을 계량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반영

②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추진

-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증진과 함께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 등을 위해 신규 식생복원 4개소 추진(공모)
-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보호가치가 있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속적으로 지정·확대
 - * 해양보호구역 지정(누적) 계획 : ('20) 30개소 → ('21) 32개소 → ('22) 34개소
- 갯벌세계유산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및 현장 관리시스템 등 통합관리 이행기반 마련
 - 갯벌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세계유산 통합센터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 등
- 갯벌 등 우수 해양자산·자원 보전 관련 대국민 인식 증진
 - 2022년도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해양보호구역대회 등 개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운영, 갯벌체험행사 및 갯벌정책 홍보
 -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영상제작 및 홍보 추진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사회 해양생태계 보전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람사르 습지도시 추가 인증 추진
 - *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지역은 6년간 '람사르' 상징을 독점 사용하여 국제적 모범 습지도시라는 지역주민 자긍심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발전 견인에 기여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 개정을 위해 블루카본 국제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제협력 추진
 - * 국제협력을 통해 IPCC 지침 개정(식생갯벌만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 및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비식생갯벌을 반영, 해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국가통계 반영 확대 추진

- 현장의견 수렴, 민관협의 등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계획 마련, 확대(신규) 지정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 및 갯벌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블루카본 국제 포럼 개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7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평가계획(안) 마련	'22.2월	
	해양보호구역 확대(신규) 지정 관련 주민 간담회	'22.2월	
	갯벌식생 복원사업(2개소) 신규사업 확대	'22.3월	
2/4분기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개최	'22.4월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마련	'22.5월	
3/4분기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22.7월	
	갯벌체험행사 개최 및 갯벌정책 홍보	'22.8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사항 점검	'22.8월	
	해양보호구역 확대(신규) 지정 관련 주민간담회	'22.9월	
	해양보호구역 대회 개최	'22.9월	
4/4분기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안 마련	'22.11월	
	갯벌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22.12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성과보고	'22.12월	
	해양보호구역 용도구역제 도입방안 마련	'22.12월	
	블루카본 추진전략 수립	'22.12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영상제작 및 홍보(12월)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 또는 사업의 수혜자) 일반국민
- (이해관계자)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지역 인접지역 주민, 어업인 등

□ 기대효과

-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등 갯벌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갯벌복원사업을 통해 해양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I -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1031)	일반	167 (284)	242 (393)
▪ 해양보호구역(301)		56	114
▪ 갯벌생태계복원(304)		111	1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갯벌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율(%) (가중치 40%)	신규	100	100	100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완비하고, 갯벌복원사업 확대를 통한 갯벌관리체계 구축율 측정	제도적 근거 마련 (하위 고시) 50%* + 갯벌복원사업 1개소 신규추진 50% * 갯벌법 하위 고시(안) 마련시 40%, 고시 제정 완료시 50% 적용	내부자료
②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가중치 60%)	29	30	32	34	최근 3개년('19-'21) 간 연평균 1~2개소씩 추가 지정(또는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산출* * 전국 연안습지 58%(1,437.8km)를 보호지역으로 기지정, 추가(확대) 지정이 쉽지 않은 상황	Σ(연도별 해양 보호구역 지정 또는 확대 개소수)	고시문

5 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Ⅲ-4-⑤)

해양생태과 (044-200-5313~8 / 5327)

□ 추진배경 (목적)

- 기후변화, 연안개발 등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따른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국제사회의 주요·핵심 환경 현안
- 5대 해양생태축 관리, 해양보호생물 및 유해·교란 해양생물 등 위협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계 건강성,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유해·교란 해양생물 제거·관리사업 등 추진

①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강화

- (기반 구축)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추진계획 수립, 5대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방안 마련 및 서식지의 보전기관 지정·운영 지침 개정
- (민관 협력) 해양동물 구조·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위한 협의체 개최
- (홍보 강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 관련 책자 발간,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발행, 콘텐츠 공모전 및 해양보호생물 방류 홍보 이벤트 개최
- (국제 협력) 황해 상괭이 보전을 위한 한·중 워킹그룹 구성(6월), 생물다양성협약(CBD) 대응(연중) 등

②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강화

- (기반 구축) “제4차(’23~’27) 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12월), “제2차(’23~’27) 해파리 폴립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12월)

- (민관 협력) 해양수산물 LMO 국경검사 및 유통관리를 위한 정밀진단 키트 보급(6월), 연구자·국경감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③ 해양생물 서식지 건강성 제고

- (기반 구축) '22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및 복원사업 추진계획 마련(2월), 백령도 점박이물범 쉼터 서식환경 개선
- (홍보 강화)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시행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세부시행 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7
	'22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추진계획 수립	'22.1월	
	'22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및 복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22.2월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22.3월	
2/4분기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갯벌·연안·암반생태 및 바닷새 등) 관련 전문가 회의	'22.5월	
	백령도 점박이물범 쉼터 서식환경 개선	'22.6월	
	해양수산물 LMO 정밀진단 키트 보급	'22.6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자 및 국경감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22.6월	
	해양보호생물 홍보 기념우표 발행	'22.6월	
	해양생태계 진단·평가 지표 마련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2.6월	
3/4분기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시행	'22.7월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22.9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및 관리 교육 비대면 워크숍 개최	'22.9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 관련 책자 발간	'22.9월	
	'22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22.9월	
4/4분기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22.10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홍보(리플릿, 카드뉴스, 학술대회 등)	'22.11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자 및 국경감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22.11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운영 지침 개정	'22.11월	
	제4차('23~'27) 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	'22.12월	
	제2차('23~'27) 해파리 폴립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22.12월	
	갯끈풀 뿌리제거 및 서식지 자연생태조사	'22.12월	
	백령도 점박이물범 쉼터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	'22.12월	
	5대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방안 마련	'22.12월	
	'22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 또는 사업의 수혜자)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국민
- (이해관계자) 어업인, 연안지자체, 해양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자, 환경(동물)보호단체,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기관(16개소),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11개소) 등

☐ 기대효과

-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전된 해양생물(또는 자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I -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1031)	일반	86 (284)	89 (393)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303)	일반	86	89
해양환경개선(기금)(I -1-일반재정⑦)				
①	해양환경개선(1065)	수산발전기금	75 (559)	77 (474)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304)	수산발전기금	75	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추진율(%)	100	100	100	100	제도 개선, 계획 수립, 실행 사업 등의 달성도(100%)를 목표로 설정 ④ 법령 및 고시 제·개정(1건) ⑤ 관리계획·대책(안) 수립(3건) ⑥ 교육·훈련 및 워크숍 등(5건)	(달성건수/목표 건수(1건)×0.3) (달성건수/목표 건수(3건)×0.5) (달성건수/목표 건수(5건)×0.2)	방침문 방침문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에 따라 어업생산량 지속 감소세, 대외 개방(CPTPP), 위생·안전 우려 증가로 수산업 경쟁력 저하
 - * 연평균 연근해 어획량(만톤) : ('80) 152 → ('00) 115 → ('21) 94
- 과학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와 체계적인 불법어업 방지, 친환경·스마트 양식 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등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낮은 소득, 일자리·생활서비스 부족 등으로 최근 20년간 어가인구 61% 감소, 어촌지역 읍·면·동(492개) 58% 소멸 위험
 - * 삶의 질 만족도('20년) : (섬) 3.8 < **(연안어촌) 4.9** < (농촌) 5.7 < (도시) 6.1
 - ** 어가 인구(만명) : ('00) 25.1 → ('10) 17.1 → ('20) **9.8**
- 섬·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안정,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연안경제 활력 제고 필요

◇ 그간의 성과

- 연근해어업, 양식, 어촌, 수산기업, 유통 등 수산업 전 분야의 종합적 혁신전략인 '수산혁신 2030 계획*('19.2)' 수립 및 시행
- 「수산식품산업법」 제정('20.2), 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진입 및 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28.3억 달러) 달성
- 양식산업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개소) 지정, 양식장 HACCP 확대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1% 이하로 관리

- TAC 사업 확대(11개→12개 어종), 및 과도한 어선세력 감척('17~'21, 1,404척) 및 TAC 대상 어종 국가 지정 법적근거(「수산자원관리법」 개정, '22.6) 마련
- 국제사회의 조업규제 등 제한된 생산 여건에서 국제 수산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원양조업 쿼터량* 지속 확보
- * 원양조업 쿼터 확보량(톤) : ('17) 43,200 → ('19) 45,700 → ('21) 60,200
- “어촌뉴딜300 사업”(~19)을 통해 어촌 300개소의 노후화된 항·포구 시설(접안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 내용

-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특화마을 조성,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활력넘치는 어촌 조성
-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조성 등 어업경쟁력 강화, TAC 업종·어종 단계적 확대, 수산자원증대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 불법어업 단속·처벌 강화를 통해 법 앞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질서를 확립 및 불법어업 감시망 구축
-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및 원산지·이력표시 강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등 수출 경쟁력 확보 추진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생산·유통환경 조성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1번(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3번(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7	3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① 수산물 수출액 (억불)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 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①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① 어촌 활력 추진율(%) ② 어항개발 추진율(%)
	②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① 어촌활력지역 변화율(%)
	③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① 소득보장 및 경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④ 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① 소규모 어업경영 자금 이용 어업인 지원율(%) ② 수산업 분야 지속적 세제감면 노력율(%)
	⑤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소득 기반 강화	① 조경불리지역 직불금 수급 어가수(호)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척)
	⑥ 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①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②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율(%)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 수산자원 직접 조사 정점 수 목표 달성율(%)
	① 수산자원 조성 관리 강화	① 바다숲 탄소흡수량 누적 증가 실적(톤) ②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② 수산자원관리체계 고도화	① TAC 참여업종 증가율(%) ② 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③ 어업경쟁력 강화형 어선 감축 추진	① 근해어선 감척 이행율(%)
	④ 주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	① 국내어선 불법 조업율(%) ② 중국어선 불법대응 건수(건)
	⑤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① 원양어선 평균 선령 감소율(%) ② 해외어획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율(%)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 양식 생산량(천톤)
	① 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① CO2 저감량 (tCO2) ② 교육 수료자의 양식 취창업율(%)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①양식 9대 전략 품목 생산량(천톤) ②배합사료 사용비중(%)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①산지가격 변동률(%) ②임대형 양식장 도입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①양식장 인증부표 교체비율(%) ②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획득(%) ③수산물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확충(%)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①상생할인 수산물 매출액(억원) ②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②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①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율(%) ②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율(%)

(1) 주요내용

□ 어촌·어항재생을 통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 (정주 여건) 낙후된 접안시설, 여객복합편의시설 등 개선이 시급한 생활SOC 선제적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 어촌마을 조성
- 어촌·어항의 시설개선 측면의 사업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체계, 인력양성 등 S/W측면의 정책과제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수행

□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업경영 여건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재해 대응 지원 및 소득기반 확충

- 어업인 정책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 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어업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복지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어업구조개선 추진

- 어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 사업으로 전환·확대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조성 등 어업경쟁력을 강화

□ 수산자원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사·분석으로 생태계 기반의 실효성 있는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TAC제도 확대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불법조업 대응 강화 및 어업관리 역량 강화

- 국내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육상 어업관리 강화, 관계 기관 간 협업 및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어업 감시 체제 구축
- 한중 간 어업협력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제도기반 구축 및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 강화

- 친환경·첨단 양식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내수면 및 육상 대규모 스마트시설 조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융복합 친환경·스마트 산업화
- 임대형 양식장 도입, 청년·귀어인 신규면허 우선 발급 근거 마련 등 양식 생산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어장에서부터 출하 전까지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및 안전성 조사 확대, 생산해역 관리 강화

□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K-Seafood관'을 확대하고,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쇼케이스 및 라이브 판매 등 지원으로 비대면 소비시장 대응 강화
-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연구·가공·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거점단지 및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위판장 위생환경을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위판장 의무 위생기준 마련 및 위판장 수익구조 다변화 등 추진

□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양식장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HACCP 등록 양식장을 확대(237→350개)
- 온라인 거래지원 포털 구축, 신선유통 R&D 등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수산물 비대면·스마트 유통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수산물 수출액 (억불)	23.3	23.8	25.1	23.2	28.2	32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변화,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26년 목표치 32억불 설정('21년 대비 13.5% ↑)	관세청 수출통계	관세청 수출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어촌 인구 급감, 고령화 심화로 어촌과 수산업을 이끌 수산인력 부족
 - 인프라 개선과 함께 소득, 복지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도시·농촌에 비해 생활 여건 미흡
 - 청년인구 유입, 수산전문인력 양성으로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의 부담완화 필요
- 어촌·어항의 시설개선 측면의 사업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체계, 인력양성 등 S/W측면의 정책과제 실행 미흡
 - 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수행
- 관광기능을 보유한 특화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변사업과 연계부족 및 민간투자 저조로 기대효과가 다소 미흡
 - 어항구역 내 어업인과 해양 레저객들의 선양장 등 어항시설 이용 마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 불법어업, 해저 침적 폐어구 등의 요인으로 더디게 회복
 - * ('08) 128만톤 → ('10) 113 → ('16) 91 → ('18) 101 → ('19) 91 → ('20) 93 → ('21) 94
 - 육·해상 단속에도 중국어선 등 상습·고질적인 불법행위 지속
 - * 단속실적(어업단·지자체, 건): ('18) 1,679 → ('19) 1,694 → ('20) 1,953 → ('21) 1,664
 - 해저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 피해, 해양환경오염 및 선박사고 유발 등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 * 폐어구로 인해 연간 약 3,800억원의 유령어업 피해 발생 추정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하고, 업종간·지역간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어업분쟁 갈등해소 추진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트롤, 저인망 등 감척('19~'23, 1,300척 목표)

- TAC,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금어기·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어업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수용성 및 효과성 저하

- (TAC) 당초 '21년 TAC 도입 예정되었던 갈치·참조기·삼치는 어업인의 반대로 1년 연기되어 '22년 재추진

- (구조조정) '21년 직권감척 대상자의 83%가 직권감척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대해 국회·업계도 문제 제기

- (금어기·금지체장) 비선택적 어업(안강망·정치망 등)은 어종 혼획이 불가피하여 혼획한 개체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으나 분류과정에서 대부분 폐사되어 자원보호 효과에 대해 지속적 문제 제기

- 양식산업의 양적인 성장 한계에 따라 첨단기술 접목, 생산원가 절감, 환경·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양식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양식생산량(만톤) : ('17) 231 → ('18) 224 → ('19) 241 → ('20) 230 → ('21) 239

-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관심 증대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필요

* 19년 대국민 수산물 소비행태 조사(KMI)에 따르면 위생·안전(26.6%)은 소비자의 구입 결정시 최우선 고려사항

- 공유자원인 바다를 이용하는 양식산업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갈등

-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 확대, 플라스틱 오염 예방, 청정어장 재생 등 친환경 양식 보급 확대를 통한 갈등관리 추진

□ '21년 수산물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회복하며, 전년대비 21.9% 증가한 역대 최고 수출액 28.2억불 달성

* 수출액(억불) : ('16) 21.3 → ('17) 23.3 → ('18) 23.8 → ('19) 25.1 → ('20) 23.2 → ('21) **28.2**

○ 수산식품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출 상위 품목 다수가 원물 형태이며, 대부분의 수출·가공업체가 영세한 수준

* 원물 수산물 수출 비중('21) : 57.6%, 16.3억불 / 중소기업 수출 비중('21) : 76.5%

○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식품 가공·수출 지원 및 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 마련 필요

□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논의 등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유통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 원산지표시 위반사태가 지속 발생*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유통 이력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건) : ('17) 677, ('18) 818, ('19) 916, ('20) 543

** 이력제 표시물량(0.6만톤)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371만톤)의 0.16% 수준('20)

(4) 기타

□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마을 홍보창구인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을 운영하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다양한 어촌관광정보 제공

(1) 주요 내용

□ 어가소득 안정화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

-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소득 안정 도모
- 어업인 정책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재해대응 능력 강화
- 어업인 기초생활 보장,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와 어촌생활돌봄 지원 등으로 어업인 인력을 확보하고, 복지체계 강화
- 영세어업인 등 금융지원 및 수산업 분야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 지원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촌·어항재생을 통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 (정주 여건) 낙후된 접안시설, 여객복합편의시설 등 개선이 시급한 생활SOC 선제적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 어촌마을 조성
- (안전강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 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추진

- (소득창출)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431	511	600	617	최근 3년('19~'21) 실적 평균대비(514명) 대비 20% 증가한 617명을 목표로 설정	귀어 창업·주택 자금 지원대상 선정자 수	자체 행정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신규인력 어촌 진입 시 높은 진입장벽 극복 필요

- 어촌지역은 어가인구 고령화, 도·농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삶의 질 및 열악한 노동 여건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 정체
- 어업은 사업 형태가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하며, 타 산업보다 재해율도 높아 어업종사자의 안심 근로체계 마련 시급

* 산업별 재해율('20기준, %): 어업(4.31) > 건설업(1.17) > 운수창고통신업(0.77) > 제조업(0.72)

□ 가계·경영 기반이 없는 도시민 귀어귀촌 수요 증대 방안 마련

- 상담, 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등 귀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통해 단순 관심 단계의 도시민이 추후 실질적인 어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
- 귀어귀촌 박람회, SNS 활용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일반 국민 대상 귀어·귀촌 관심도 제고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체류형 실습교육, 1:1 컨설팅 등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지원 정책 제한으로 정착 시기 지연 우려

□ 수산공익직불제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양한 직불제 도입 요구 증가

-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시 보조금 제한 등에 따라 직불제가 대안이 될 수 있어 행정수요는 증가 추세
- 또한, 지역소멸 등과 맞물려 농어촌 및 농어업인 복지 확대 요구에 따라 선택적 직불이 아닌 포괄적 직불 도입 요구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IV-1-①)

어촌어항과 (044-200-5651 / 5652)

□ 추진배경 (목적)

- 어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어촌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 확대 및 안전한 어촌관광 재개 필요

* 귀어가구(가구) : ('17) 906 → ('18) 917 → ('19) 904 → ('20) 897

** 귀어인(명) : ('17) 991 → ('18) 986 → ('19) 959 → ('20) 967

*** 어촌체험객(만명) : ('17) 131 → ('18) 145 → ('19) 150 → ('20) 96

- 어항 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어항시설을 조성하고 수산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을 통해 국가어항을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

⇒ 귀어·귀촌 지원 사업 확대, 특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어항개발·정비를 통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촌 활력 】

-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민의 귀어·창업 및 어촌정착 지원

-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고, 정보, 상담, 교육, 정책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어촌 신규인력 유입 활성화

* 귀어·귀촌 창업·주택구입 및 청년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22.3.),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22.6.), 귀어학교 개설지 조기선정('22.9.),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현장 점검('22.12.)

- 귀어·귀촌인 임시 주거시설, 기술교육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인 귀어인의 집 조성(6개소), 귀어학교(6개소) 교육비 전액 지원 실시

*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임차 등 개소당 최대 50백만원을 지원하여 6개소 조성(1.5억원, 국비 50%)

- 어촌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촌자산 투자펀드 추진
 - 어선·양식장 등 어촌지역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어촌자산 투자펀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60백만원 / 투자사 등 컨소시엄
- 안전한 어촌관광 재개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어촌마을 밀키트 개발, 어촌관광 인력 양성 확대, 해양치유마을 시범 조성 등 장기휴양 체험 마을로 전환 추진
 - * 민간협업 어촌마을 밀키트 개발(10개), 바다해설사 양성(30명), 해양치유마을 조성(2개소)
 - 안전·위생 기준 강화 및 ESG 가치를 반영한 어촌관광 등급제 개편, 트렌드 맞춤형 마을역량 강화 및 마을 기반시설 조성·개선 지원
 - * 「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기관 지정 및 등급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22.3.), 대학과 협업을 통한 마을역량 강화('22.10.), 마을 기반시설 고도화 지원('22.5.)
-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기업을 연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기업·단체·대학의 어촌계 대상 재능기부, 의료인·사회취약계층의 어촌 관광지 방문 스탬프 투어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 * 한의, 이·미용, 자동차·전자제품 정비 등 어촌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능기부 추진, '국가중요어업유산-어촌체험휴양마을-코리아둘레길' 연계 스탬프 투어 개발
- '어촌'의 법적 정의 명확화, 기타 어촌 관련 법령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어촌·어항법」 전부개정 추진
 - 어촌 분야 기본계획 마련 및 현재 수립·시행 중인 계획*과의 연계, 舊 어촌종합개발사업('94년~'13년) 관련 조항 전체 정비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귀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귀어귀촌 활성화 대책, 어촌·어항 재생 개발계획 등
 -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0년~)으로 추진 중
 - 어항 개발사업 추진 단계의 명확한 구분(행정계획과 실시계획 분리), 지방청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체계 마련
 - * 개정방안 연구용역 추진('22.3~9./ 1억원), 「어촌·어항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23.上)

【 어항 개발 】

○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시행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추진

-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매칭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및 중장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국가어항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21.4.) 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22.12.)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1.7.) 후속 조치

-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 추진

- 국가어항 유희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 수익모델 선정 및 시범사업대상지 실태조사 실시, 투자설명회 개최 등 사업화 추진

* 국가어항 민간투자 시범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착수('22.5.), 민간투자 투자설명회 개최('22.10.)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항 특화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수산·관광·레저 기능과 지역 특색을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 어항 내 수산기능 재편·강화, 지역사업과 연계한 기존 어항시설 리모델링 추진

◆ 어항 특화개발 사업 유형

- ① 다가능어항 : 시범사업 13개항('04~'13), 확대사업 10개항('14~'26)
- ② 아름다운 어항 : 4개항('14~'22)
- ③ 어항 이용고도화 : 4개항('11~'21)
- ④ 어촌 마리나역 : 신규 10개항('15~'22), 다가능어항내 포함 5개항('17~'26)

* (다가능어항 6개소) 위미항('22.7.)·물건항('22.7) 준공, 저동항·서망항·남당·옥지항 지속 추진('22.1.~'22.12.),

** (어촌마리나역 3개소) 물건항('22.7.), 위미항('22.7.), 신양항('22.2.) 준공

- 배후 어촌마을의 문화와 자연경관을 살린 한국형 '아름다운 어항'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아름다운 어항 1개소)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사업 준공('22.5.), 정책홍보 용역 계획 수립('22.1.), 국가어항 사진전 개최('22.6.),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22.7.)

○ 스마트어항 구축 및 정화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 선제적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방파제 등에 광학장비 (LiDAR) 및 계측센서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 도입하여 원격 유지관리체계 구축

* 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 / 설계착수('22.4),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구축('22.12.)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 수역 내 항행장애물과 부유·침적 폐기물 수거 및 준설 등 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어항 조성

* 어항관리선 중장기 운영방안 용역('22.5),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연중)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어항 정책홍보 용역 계획 수립	'22.1.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방침	'2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의원입법 발의	'22.1.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발주	'22.2.	국정 73-4
	신양항 어촌마리나역 사업 준공	'22.2	
	「어촌·어항법」 전부개정 연구 방침	'22.2	
	어촌마을 밀키트 출시	'22.2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22.3.	국정 73-4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2.3.	국정 73-4
2/4분기	국가중요어업유산 정책 설명회 개최	'22.4	
	바다해설사 신규양성 추진	'22.4.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고도화 작업 지원	'22.4.	국정 73-4
	「어촌·어항법」 전부개정 착수보고	'22.4.	
	국가어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2.4.	
	스마트어항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구축 설계용역 착수	'22.4.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사업 보조금 교부	'22.5.	국정 73-4
	차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22.5.	국정 73-4
	어촌체험휴양마을 방역 점검	'22.5.	국정 73-4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남해 권역)	'22.5.	
	어항관리선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용역 착수	'22.5.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수익모델 대상지 실태조사 착수	'22.5.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사업 준공	'22.5.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22.6.	국정 73-4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지침 마련	'22.6.	
	기업·단체의 어촌계 대상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22.6.	
	국가어항 사진전 개최	'22.6.	
3/4분기	'국가중요어업유산-어촌체험휴양마을-코리아둘레길' 연계 스탬프 투어	'22.7.	
	위미항 다기능어항 및 어촌마리나역 사업 준공	'22.7.	
	물건항 다기능어항 및 어촌마리나역 사업 준공	'22.7.	
	스마트어항 시설물 계측기기 구매·설치공사 착수	'22.7.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동해 권역)	'22.7.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점검	'22.8.	국정 73-4
	국가어항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22.8.	
	귀어학교 추가 선정	'22.9.	국정 73-4
	차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22.9.	국정 73-4
4/4분기	국가어항 민간투자 설명회 개최(동해권)	'22.10.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서해 권역)	'22.11.	
	국가어업유산 발전방향 워크숍	'22.12.	
	안도항 다기능어항 사업 준공	'22.12.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22.12.	
	스마트어항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22.12.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 실시 및 최종평가	'22.12.	국정 73-4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현장점검	'22.12.	국정 73-4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22.12.	국정 73-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 어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이용 단체인 수협, 어촌계, 여객선사 등

□ 기대효과

-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청년·도시민의 어업 창업과 어촌 정착지원을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 증진**
- 어촌지역의 새로운 잠재 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물의 생산·유통, 해양관광 등 **어항의 복합기능수행**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력 제고
- 어선 접안시설, 어업활동 지원 등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 정주 환경 조성 및 어업인 편의 제공**
- 기상악화 대비 스마트어항 관리시스템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1	'22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I -3-일반재정①)				
①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3340)	농특회계	84	104	
▪ 어촌활력기반구축(301)		84	104	
귀어귀촌지원(I -3-일반재정④)				
② 귀어귀촌지원(3347)	농특회계	41	50	
▪ 귀어귀촌활성화(303)		41	50	
귀어귀촌지원(I -3-일반재정⑤)				
③ 귀어귀촌지원(3347)	농특회계	16	17	
▪ 청년어촌정착지원(363)		16	17	
어항기반시설조성(I -3-일반재정②)				
① 어항기반시설조성(3345)	농특회계	3,078	3,083	
▪ 국가어항관리(302)		263	272	
▪ 국가어항(303)		2,609	2,626	
▪ 가거도항복구(306)		206	1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어촌 활력 추진율(%)(가중치 70%)	신규	신규	100	100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직접소득액 추세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대비(184억원) 8% 상향한 200억원으로 설정 * '22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액이 급감한 '20년 제외, 5개년('15~'19)의 전년 대비 직접소득액 평균증가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증가율임 ** 직접소득액(억원) ('15) 270, ('16) 299, ('17) 257 ('18) 274 ('19) 254 ('20) 170 ('21) 184 ○ 신규인력에게 귀어귀촌 정책자금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2년 평균 정책자금 수혜자 비율(52%) 보다 10% 상향한 62%를 목표 * 정책자금 수혜율 <table><tr><td>구분</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r><tr><td>귀어인(명)</td><td>1,005</td><td>991</td><td>986</td><td>959</td><td>967</td></tr><tr><td>수혜자(명)</td><td>375</td><td>403</td><td>431</td><td>511</td><td>600</td></tr></table> ** 통계청의 귀어인 수는 다음 해 6월 발표되어 발표연도 기준으로 지표 산정 <table><tr><td>구분</td><td>'18</td><td>'19</td><td>'20</td><td>'21</td></tr><tr><td>예산 인원(명,a)</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r><tr><td>선정 인원(명,b)</td><td>100</td><td>169</td><td>208</td><td>206</td></tr><tr><td>비율(a/b)</td><td>100</td><td>84.5</td><td>104</td><td>103</td></tr></table> * 지자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기준	구분	'17	'18	'19	'20	'21	귀어인(명)	1,005	991	986	959	967	수혜자(명)	375	403	431	511	600	구분	'18	'19	'20	'21	예산 인원(명,a)	100	200	200	200	선정 인원(명,b)	100	169	208	206	비율(a/b)	100	84.5	104	103	①어촌관광·체험 직접소득액 (억원) (60%) ②정책자금 수혜율 (%) (30%) * 정책자금 수혜율(%) = (정책자금 수혜자 수/귀어인 수)×100 ** 정책자금은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자금기준 ③청년 신규인력 정착률 (%) (10%) * 신규 청년어업인 정착률(%) = (예산 대비 청년어업인 지원 인원 수/ 선정 지원 인원 수) ×100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기준('22.12.31)	마을운영자가 어촌체험 마을관리 홈페이지 (바다여행누리집)에 입력한 실적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수협 (대출지원 자료) 지자체, 해수부 자료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자료)
구분	'17	'18	'19	'20	'21																																								
귀어인(명)	1,005	991	986	959	967																																								
수혜자(명)	375	403	431	511	600																																								
구분	'18	'19	'20	'21																																									
예산 인원(명,a)	100	200	200	200																																									
선정 인원(명,b)	100	169	208	206																																									
비율(a/b)	100	84.5	104	103																																									
②어항개발 추진율(%)(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어항 적기 확충을 위한 주요 과정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 ㉠ 국가어항 디지털 유지관리체계 구축 3개소 ㉡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선정 3개소 ㉢ 인프라 확충 : 어항개발 착수 17건 및 준공 9건 ○ 국가어항 관광객 방문자 수 전년 대비 3년평균 증가율(2.2%) 보다 상향한 53,041,264명(증1,160,030명) * 방문자 수(천명): ('19)49,637 ('20) 49,126 ('21) 51,881	①과정 달성도 (%) (80%) (㉠×0.4) + (㉡×0.3) + (㉢×0.3) ②국가어항 관광 방문객조사(명) (20%) * (측정방법) 국가어항 대상, 카드사 매출,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숙박인구 조사	내부자료 외부전문기관 의뢰조사 보고서																																						

2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IV-1-②)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 6171)

□ 추진배경 (목적)

- (정주 여건) 낙후된 접안시설, 여객복합편의시설 등 개선이 시급한 생활SOC 선제적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안전강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관광자원)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지속기반)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 근거 법령 >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위계획인 국정과제와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 내실화

주요과제명	관련 과제 번호	주요내용
국정과제	73-4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생활수준 향상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어촌 생활권 규모·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 진행중인 어촌뉴딜300사업과 신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낙후된 어촌의 활력 제고

< ① 사업 관리 내실화 추진 >

○ (기본계획심의) 대상지별 사업 목적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필요 시 시설 규모 등 세부 사업내용을 조정 및 확정

* 기본계획 심의 전 사업의 목표 및 비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장자문 지원(2회)

○ (성과체계)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어촌뉴딜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관리 강화

* 어촌활력지역 변화율 등 2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자문단 운영) 토목, 건축,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 역량강화 등 자문(91명)

* 대상지별 자문위원 : 25개조 총 91명으로 구성(조당 3명, 1~2개 대상지 전담)

○ (주민주도) 사업계획 수립권자와 시행권자는 지자체이나, 공모 단계부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구성*

*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지역주민과 공무원 공동위원장)

○ (사후관리) 어촌뉴딜사업 성과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소득사업 운영 컨설팅 및 사후관리 모델 발굴 등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완료 후 시설 운영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유희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컨설팅 시범지원** 추진(시범 3개소)

* 어촌뉴딜300 소득사업 운영방안 연구 추진('22.5~12)

** 예비대상지 선정 및 모니터링(~'22.7) → 대상지 확정('22.9) → 컨설팅 지원(~'22.12)

< [2] 성공사례 발굴 · 확산 >

- (사업관리) 사업 준공연도 대상지('20년)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
 - 문제해결형 어촌혁신모델 정립을 위해 시범도입('21)한 리빙랩의 실행 단계 지원을 위해 리빙랩 운영지침 마련, 기본계획 심의 등 추진
- (선도사업) 어촌뉴딜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 적용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성공 모델 도출
 - * '19년도 8개소, '20년도 5개소 선정, '21년도 3개소 선정
- (성과홍보) 현장 및 언론 소통 강화, 방송 프로그램·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동력 확보
 - 「어촌뉴딜 300사업 백서」 제작을 추진하여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3] 어촌어항재생 지속 기반 마련 >

-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동일 어촌 생활권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계 인구의 유입 전략 마련·시행
 - * 시범사업 공모('21.12 ~ '22.2) → 사업 평가('22.2) → 대상지 선정('22.2)
- (신규모델발굴) 리빙랩, 어촌활력증진 등 어촌뉴딜과 연계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모델 개발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23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60개소)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22.9~)

◆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추진

- (소득창출)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 전국 31개 시·군 124개 읍·면 대상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10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2억원 이하, 1년)

- (특화센터) 어촌공동체 중심의 창업·컨설팅, 판매·유통·홍보 등 어촌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 운영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10개소) : ('16) 전남, 경남 ('17) 강원, 충남, ('18) 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촌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22.1월	
	'22년 어촌뉴딜사업 사업 시행지침 개정	'22.1월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25개조, 91명)	'22.1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22.2월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22.2월	
	어촌테마마을 '22년 준공 예정지구 현장점검	'22.3월	
	어촌뉴딜300 백서 제작 추진	'22.3월	
2/4분기	어촌뉴딜300 소득사업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2.4월	
	어촌테마마을 '22년 사업지구 현장자문 실시	'22.4월	
	어촌뉴딜300사업 1차 현장 자문 실시	'22.5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설명회 개최	'22.5월	국정 73-4
	'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사업성 평가	'22.6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추진상황 현장점검	'22.6월	
	리빙랩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22.6월	
3/4분기	어촌뉴딜 사업 기본계획 심의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22.8월	
	어촌뉴딜300사업 2차 현장 자문 실시	'22.8월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전략 마련	'22.9월	국정 73-4
	'23년 어촌 유희시설 리모델링 사업대상지 선정	'22.9월	
	'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심의 위원회 개최	'22.9월	
	어촌뉴딜 특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시범지원	'22.9월	
4/4분기	하반기 어촌뉴딜사업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2.10월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추진	'22.10월	국정 73-4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3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 시행지침안 마련	'22.11월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	'22.12월	
	'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안 마련	'22.12월	
	'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22.12월	
	'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승인(50개소)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사업대상지역 거주 주민 및 어업시설 이용 어업인
- (일반국민) 여객선이용객, 관광 목적 방문객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지역의 지역주민, 어촌계, 여객선 선사, 수협, 사업위탁 공공기관

□ 기대효과

- (해상교통 편익 증진) 소규모 항·포구의 접안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도서민 정주 여건 및 관광객의 교통편익 증진
- (어촌 활력증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는 어촌에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에 기여
 - * 갯벌체험장, 낚시 특화센터, 수산자원 브랜드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등
-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필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생산성 증대 및 작업효율을 제고
- (생활공간 혁신) 취약한 섬·어촌 지역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

- (국가 균형발전) 낙후된 어촌지역 생활밀착형 SOC를 공급으로 국가균형발전 구현과 공도화(空島化) 및 어촌소멸 방지에 기여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발굴하여 일반국민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어촌지역에 어촌 뉴딜을 통해 인프라를 보강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찾고 싶은 어촌 조성
- (일자리 창출) 어촌 재생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I -3-일반재정②)				
①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3345)			5,219	5,236
▪ 어촌뉴딜300(310)	농특	5,219	5,236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I -3-일반재정①)				
①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3340)				
▪ 어촌활력기반구축(301)(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내역사업 일부)	농특	84	104	
▪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305)	농특	3	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어촌활력지역 변화율(%) (어촌뉴딜 대상지)	신규	신규	38.9	40	(' 22년) 40.0% → (' 25년) 45.0% -측정산식 : 4·5등급 어촌* /250개소(전체대상지) * 인구사회(지역소멸지수), 산업경제 (수산물 판매금액변화율), 물리환경(어항투자비용)의 종합 산정하여 4.5등급으로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	3개 부분 값*을 정규 분포화 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4.5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의 전체중 비율 *사업대상지의 인구사회 (지역소멸지수), 산업경제 (가구당 수산물 판매실적), 물리환경(적당 어항투자비용)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③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IV-1-③)

소득복지과 (044-200-5461/5462)

□ 추진배경 (목적)

- 어촌지역은 지역 특성상 생활 서비스(보건·복지 등) 전달이 어려워 삶의 질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살만한 환경조성 필요

* 삶의 질 만족도 : 섬어촌(3.8) < 어촌평균(4.6) < 연안·도시어촌(4.9) < 농촌(5.7) < 도시(6.1)

- 어업의 경우 사업 형태가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하며, 타 산업보다 재해율이 높아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필요

* 재해율('20기준,%): 어업(4.31)>건설업(1.17)>운수창고통신업(0.77)>제조업(0.72)

- 어촌지역의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보건·인력 등을 지원하고 어업인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소득보장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삶의 질 향상) 어업인 대상 보건관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거주를 위한 필수 생활·복지 지원강화
 - 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 교육,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등을 통한 지역별·연령별·성별 맞춤형 건강지원 체계 마련
 -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1만여 세대, 최대 28%) 연금보험료 지원(약 13천명, 최대 50%)으로 소득안전망 확대
 - 어업작업 환경의 안전성 제공, 어업활동 전·후 체온유지 도모, 탈의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재해보장) 재해보험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재해 대응 능력 강화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 및 모든 어선 의무가입 확대
연착륙을 위해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및 정책보험 홍보 실시
- 자연재해(이상수온 등)로부터의 보호, 어업인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위해 고수온 특약 보험료 지원 확대(50% → 60%) 시범 추진
- 선주 날인 폐지를 통한 보험급여 절차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2.12)
수산정책보험 보험료 국비·지방비 동시 지원 등 보험 보장강화

○ (인력확보)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대상 인력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등을 통해 어업 근로 여건 개선

- 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렵거나, 고령화 가구 등 어업
인력이 부족한 어가 대상 어업활동, 어촌생활돌봄 지원
- 어번기 등 특정 시기 인력부족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품목·지역 확대
- 외국인 어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 지원, 장기
체류 비자변경* 등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변경(체류기간 4년10개월 → 무기한 갱신)

○ (후계어업인 양성) 수산계 고교의 활성화 지원, 어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확보

-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정 합동 홍보 등으로 어업환경 인식개선을 통해 미래 어선원의
관심 유도

*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교육부, 교육청 등) 제1차 정례협의회('22.7)

-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22.4) 마련을 통한 어선해기사 집중 양성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층 어선원 육성 기반 마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계획 수립	2월	국정 73-4
	'22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2월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관계기관 MOU 추진	2월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점수제(E-7-4) 고용추천 제도 운영	3월	
	위판가격보장보험 도입 타당성 연구 방안 추진	3월	
2/4분기	양식보험 '22년 사업계획 수립	4월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 마련	4월	국정 73-4
	어업활동·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 홍보 실시	5월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추진 현황 점검	5월	국정 73-4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상반기 일제조사 실시	5월	
	위판가격보장방식 전문가 등 간담회 실시	5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	5월	
3/4분기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동 홍보 업무 협약식	7월	
	수사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해수부·교육부·교육청 정례협의회	7월	
	어업활동 및 어촌생활돌봄 지원사업 홍보	7월	국정 73-4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지원단가 업무협의	8월	국정 73-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어업분야 제도개선 의견수렴	8월	국정 73-5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를 위한 사전설문조사 실시	8월	국정 73-5
4/4분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시행	10월	국정 73-4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현황 관리	11월	국정 73-4
	지역별 수산정책보험 발전협의회 개최	11월	국정 73-5
	어선원재해보험 어선통합정보시스템 대내외기관 연계 시스템 운영	12월	국정 73-5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현황 관리	12월	국정 73-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업인, 외국인 근로자
- (이해관계집단) 수협(정책보험 사업자) 및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재해대책(II-4-일반재정⑤)				
	① 재해대책(3443)	농특	1,592	1,559
	▪ 양식어업재해보험(300)		283	253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301)		1,189	1,163
	▪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303)		120	143
수산경영안정(II-4-일반재정③)				
	① 수산경영안정(3440)	농특	121	115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300)		69	71
	▪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311)		14	17
	▪ 어업인삶의질향상(312)		38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	신규	신규	신규	100	어선원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3톤 미만 가입률 3년 평균(9.7%) 대비 10% 상향한 목표(10.6%) 설정	① 3톤 미만 어선원 보험 가입률(%) (25%)	내부자료
					영세어선인 10톤 미만 어선의 어선보험 가입률 3년 평균(30%) 대비 10% 상향한 목표(33.0%) 설정	② 10톤 미만 어선보험 가입률(%) (25%)	내부자료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누적 82개소)	③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누적개수) (25%)	지자체 보고자료 내부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확대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종·지역허용(25%)	내부자료

4 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IV-1-④)

수산정책과 (044-200-5431/5432)

□ 추진배경(목적)

- 귀어자, 수산분야 창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피해 등으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어업경영 안정지원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 분야 세제 지원 유지·확대로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업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정책자금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세법* 개정 등 추진

* 조특법·지특법·석유류특례규정·소득세법 등 개정 건의 등 추진

- 어업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급 규모 확대 추진
 - 어업인 고유가 극복 등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금리 인하, 상환유예 조치('22.4~6.) 및 '23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추진('22.3~11)
-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및 면세유 공급 한도 확보
 -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국세·지방세 감면건의서 제출('22.3~4), 조특법·지특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22.5~12)
 -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를 위해 '22년 연간한도량 신청 및 기재부 협의('22.3),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추진사항 점검('22.6)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상수온·조류 등 재해피해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2.1월	국정73-5
	'22년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추진	'22.1월	국정73-5
	'22년 어업경영자금 운용계획 수립	'22.2월	국정73-5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건의서 제출	'22.3월	국정73-5
	'22년 어업용 면세유 연간한도량 신청 및 기재부 협의	'22.3월	국정73-5
	'22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추진	'22.3월	국정73-5
2/4분기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국세 감면건의서 제출	'22.4월	국정73-5
	내수면 양식어가 대상 배합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22.4월	국정73-5
	어업인후계자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 확대	'22.5월	국정73-5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농신보 담보대출 대손보전대상 추가	'22.5월	국정73-5
	농어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한도 확대	'22.5월	국정73-5
	농어업 재해대책 특례보증한도 및 지원범위 확대	'22.5월	국정73-5
	어업분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22.6월	국정73-5
	어업분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22.6월	국정73-5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추진사항 점검	'22.6월	국정73-5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당국 설명	'22.6월	국정73-5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	'22.6월	국정73-5
	어업용 면세유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리뉴얼	'22.6월	국정73-5
3/4분기	재해피해 양식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2.6월	국정73-5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를 위한 기재부 협의	'22.6월	국정73-5
	어업경영자금 지원실적 상반기 점검	'22.7월	국정73-5
	어업용 면세유 공급실적 상반기 점검	'22.7월	국정73-5
	동해구 중형트롤어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22.7월	국정73-5
	농신보 예외보증 적용 대상 확대	'22.7월	국정73-5
4/4분기	'22년말 종료 예정 기존 세제지원 일몰 연장	'22.7월	국정73-5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국회 설명	'22.12월	국정73-5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추진사항 점검	'22.12월	국정73-5
	'22년 어업용 면세유 연간한도량 대비 공급실적 점검	'22.12월	국정73-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어업인, 유통·가공 등 수산업계 종사자,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은행 등

☐ 기대효과

- 영세어업인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어업인 대상 농신보 보증 잔액 확대, 어업인 세제 감면액 증가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Ⅱ-4 일반재정⑦)				
①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450)	농특회계	851	963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01)		851	963	
어업경영자금(기금)(Ⅱ-4 일반재정⑨)/ 용자사업				
① 어업경영자금지원(3465)	수발기금	415	426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300)		95	105	
▪ 양식어업지원(301)		22	22	
▪ 수산장비구입지원(302)		29	29	
▪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303)		200	200	
▪ 수산모태펀드출자(370)		70	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소규모 어업경영자금 이용 어업인 지원율(%) (가중치 50%)	43.5	46.4	47.4	48.0	한정된 자금안에서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고, 신규어업인 확대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는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율(%) 증가를 성과지표로 설정 * 최근 5년간 영세어업인(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평균 지원율 (42.2%) 및 '20년 실적치(46.4%) 등을 감안하여, '21년 실적보다 소폭 상향된 48.0%로 목표치 상향 설정	소규모 어업경영 자금 이용 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어업 경영자금 대출금액/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100	대출취급기관 통계자료(수협은행)
② 수산업 분야 지속적 세제감면 노력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100	주관부서(기재부·행안부) 등의 세제감면 혜택 축소 기조에 대응하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 세제감면 조항 일몰연장 건의(30%) + 세제감면 연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의원발의 노력(30%) + 수산분야 일몰도래 세제감면 조항 80% 이상 일몰연장(40%)	① 수산분야 일몰도래 세제감면 조항에 대한 기재부·행안부 연장 건의(30%) ② 세제감면 연장을 위한 관계기관 (기재부·행안부·국회) 협의 등(30%) ③ 수산분야 세제감면 조항 80% 이상 일몰연장(40%)	세제개편 건의 자료(기재부, 행안부 건의서 공문 등), 협의계획 및 결과, 세법 개정결과

5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IV-1-5)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 5453)

□ 추진배경 (목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5.)으로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21.3.)

*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어업인에게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TAC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수산정보화) 수산분야 정책수립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수산행정 지원, 관계기관 공동활용 제고 및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수산 정보의 통합·공유·개방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 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②어촌 마을 공동기금(개인 지급액의 20%) 조성·사용 등 요건으로 지급
- 모든 도서 및 해상 접경지역이 지급대상이며, 세부 지역은 별도 고시
- * 도서: 36개 시·군·구, 368개 도서 / 접경지역: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강원 고성
- ('22년 지급단가) 어가당 80만원(국고80%)
- * 조건불리지역 선정(고시) → 직불금 신청 및 자격 확인(지자체) → 직불금 지급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운영) TAC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어업인 지원

* 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어업인 신청 후 지급대상을 선정하여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지급

* 신청·접수(지자체) → 적합성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 직불금 지급

- (직불제 개편) 생산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 등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산 공익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추진

* (국정과제 73)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 지급,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

- (수산정보화) 직불금 미자격자의 부정수급 방지와 관계기관 공동활용 등을 위한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실시간 운영을 통해 사용자(해수부 및 지자체,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 서비스 지원

- 수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2년도 사업 시행지침 알림	'22.1월	국정 73-5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계획 알림	'22.1월	국정 73-5
	조건불리지역 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및 고시	'22.2월	국정 73-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가이드라인 알림	'22.2월	국정 73-5
	'22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 공모(추가)	'22.3월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추진	'22.3월	국정 73-5
2/4분기	수산공익직불제 홍보사업 추진	'22.4월	국정 73-5
	수산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운영	'22.4월	국정 73-5
	'23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2.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자 선정	'22.7월	국정 73-5
	수산 공익직불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2.7월	국정 73-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현장점검 추진	'22.9월	국정 73-5
4/4분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 의무 이행점검	'22.11월	국정 73-5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서비스 만족도 조사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어업인, 관계기관 수산업무 담당자, 대국민
- (이해관계자) 수협(정책보험 사업자) 및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및 지원 확대로 어가 소득 보전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계기관 공동활용,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정보의 통합·공유·개방을 통한 新 부가가치 시장 창출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어가소득보전(Ⅱ-4 일반재정⑧)			
① 어가소득보전(3460)		515 (608)	559 (559)
▪ 수산 공익직불제(310)	농특회계	515	559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Ⅱ-4 정보화①)			
①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3462)		14 (14)	14 (14)
▪ 수산정보화(505)	농특회계	14	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급 어가수(호) (가중치 50%)	16,570	16,874	16,775	16,400	조건불리직불금 수급 어가수 ○ 직불금 수급어가수는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직접지표로 어가인구 지속 감소, 고령화, 연륙교완공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와 '20년 및 '21년 사업실적 등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여 설정 * 직불금 수급어가: ('20)16,874→('21)16,775	○당해연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수급 어가수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22.1.1. ~ 22.12.31. -측정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각 지자체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각 지자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척) (가중치 50%)	-	-	신규	840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 ○ 직불금 수급척수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직접지표로 어선감척, 어가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고 '21년 사업(신규) 실적과 '22년 예산을 고려하여, '21년 대비 2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 직불금 수급척수: ('21) 699 예산: ('21)81→('22)119억원	○당해연도 수산 자원보호 직불금 수급척수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22.1.1. ~ '22.12.31. -측정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각 지자체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각 지자체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6 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IV-1-⑥)

연안해운과 (044-200-5731 / 5732)

□ 추진배경 (목적)

- 섬 주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으로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연안여객항로 운영 등 연안여객항로의 공공성 강화 필요
- 여객선 사고를 통해 노출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들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1일 생활권 미구축, 적자 발생 등으로 섬 주민의 교통권을 저해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수요 감소에도 항차를 유지하며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일반 항로 운항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 (운임 및 생필품 해상운송비지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스 등 기초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정주 여건 개선
- (공영제 도입) 여객 서비스, 선박 안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조항로(現 민간위탁)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 추진
- (국민정책 참여)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안전상태를 불시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부에 알려 시정하게 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운영
- (여객선 안전점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추석·행락철·하계·겨울철을 대비하여 항해·통신장비,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 (개요) 연 5회 이상 / 164척 전수 / 지방청·운항관리자, 해경, 검사기관 등

-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여객선 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 여객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 (연안여객선 현대화)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정책 및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여객선 신조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22.1월	
	설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22.1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모	'22.2월	
2/4분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 지침 개정	'22.4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운항결손액 산정기준 마련	'22.4월	
	여객선 안전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	'22.5월	
3/4분기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 제도개선	'22.7월	국정41-4
	국민안전감독관 및 공무원 연안여객선 합동 현장점검	'22.8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실태점검	'22.8월	국정41-4
4/4분기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통한 신조선 건조	'22.10월	국정41-4
	겨울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22.11월	
	'23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자 선정	'22.12월	국정41-4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실시방안 수립	'22.12월	국정41-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일반 국민

□ 기대효과

-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통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신뢰 및 수송실적* 증대

* ('17) 1,690만명 → ('18) 1,471만명 → ('19) 1,455만명 → ('20) 1,060만명 → ('21) 1,146만명

-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 운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도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여객선 안전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부터 전문기관, 선사, 시민까지 참여하는 다중 안전관리 제도 운영으로 여객선 안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Ⅲ-4 일반재정④)				
①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6134)		326	370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300)	일반	161	206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301)	일반	146	146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04)	일반	19	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공통)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가중치40%)	14,585	10,603	11,464	14,585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객수송 수요로 목표 설정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
②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율(%) (가중치60%)	신규	신규	신규	1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목표 신규 설정 ①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도(50%) ②여객선 안전제고방안 마련(50%)	①(개선이행건수/특별 점검지적건수)×0.5 ②방안 마련 및 지침 개정×0.5	내부보고 (메모보고 등) 내부방침 (메모보고 등)

(1) 주요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제로 전환

-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축소를 위해 향후 5년간('19~'23) 근해어선은 11.5%(300척), 연안어선은 2.7%(1,000척)* 감척

* 어획강도 및 업종 간 갈등·분쟁 등을 고려하여 연근해어선 감척

** '22년 : 근해어선 73척 및 연안어선 163척 감척(1,204억원)

- 기본적으로 자율감척을 유도*하고, 필요시 자원회복 등을 위해 자원남획이나 상습적 불법어업에 대한 직권감척도 병행 추진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상향하고, 직권감척은 불법어업 정도에 따라 감액

□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내실화

- 갈치 등 3개 어종에 대해 TAC를 신규 적용하고, 멸치를 어획하는 기선권현망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TAC 대상*을 확대**

* ('21) 12개 어종 14개 업종 → ('22) 15개 어종(+갈치참조가삼치) 17개 업종(+근해안강망 등)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 : ('21) 29% → ('22) 40% → ('30) 60%

- TAC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별 현장사무소 운영(20개소)과 수산자원조사원(120명) 교육 강화로 TAC 조사·관리 역량 강화

- TAC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안정자금의 지원 확대('21, 105억원 → '22, 120억원)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운영 및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21, 81억원 → '22, 119억원)

□ 생태계 기반의 통합 자원관리 추진

- 음향값 조사·바이오로깅 등 첨단 조사기법 고도화* 및 직접조사 범위 확대를 통한 자원조사 정밀도 향상

* 음향값 규명 : ('22) 멸치, 전갱이, 청어 / 바이오로깅 : ('22) 대게·멍태·대문어·꼼치

-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해 해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 확대('21. 55종→'22. 60종)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 평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근해 전역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목표 달성율(%)	79.0	100.0	100.0	100.0	- '16년~'20년까지 목표 : 매년 500개 정점 수산자원 직접조사 - '21년이후 목표 : 매년 500개 정점 수산자원 직접조사 유지 '20년까지의 정점수는 직접 조사 가능한 최대 정점수로, '21년 부터는 자원조사결과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직접 조사 가능 정점수를 유지	'22년도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 수산자원 직접조사 목표 정점수 500개] × 10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결과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19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1만톤 이후 더디게 증가 추세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과도한 어획, 어린물고기 보호 미흡,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 지속

* ('16) 91 → ('17) 93 → ('18) 101 → ('19) 91 → ('20) 93 → ('21) 94만톤

- 오징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 자원 감소, 중국·북한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어획 증가, 공조조업 등 국내 불법어업 등으로 매년 어획량 급감

* 오징어 어획량(천톤):('14) 164 → ('16) 122 → ('18) 46 → ('20) 57 → ('21) 61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하고, 업종간-지역간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어업분쟁 갈등해소 추진

* 5년간('19~'23) 총 1,300척 감척 목표(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

(4) 기타

-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조성을 위한 TAC 운영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수산자원 조성 관리 강화(IV-2-①)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6 / 5537)

□ 추진배경 (목적)

- 수산자원조성·관리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거점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기반 마련

- (바다숲 조성) 갯녹음 해소,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저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및 친환경 기법***을 활용한 조성 확대 추진

* 탄소저감: '09~'22년까지 바다숲 29,180ha 조성으로 연간 9.8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 조성면적(누적): ('09~'20) 24,258ha → ('21) 26,644ha → ('22) 29,180ha

*** 친환경 소재 확대 : 천연소재 모조주머니 및 친환경인증 부표 사용

- (수산자원증대) 해역별 맞춤형 바다목장* 및 어종별 생태를 고려한 산란·서식장** 조성 확대로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의 기반 마련

* 바다목장 완료(누적): ('21) 45개소 → ('22) 50개소

** 산란·서식장 조성: ('21) 6종, 14개소 → ('22) 9종, 20개소

- (대국민 홍보) 수산자원 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 (소통강화) 효율적인 어장환경 개선·복원사업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현안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등 소통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수산자원조성 세부사업 계획 수립	'22.3월	국정 73-1 국정 41-7
2/4분기	'22년 제10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2.5월	국정 73-1 국정 41-7
3/4분기	'22년 수산자원조성사업 관계자 워크숍	'22.9월	국정 73-1 국정 41-7
4/4분기	'23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규사업지 선정	'22.12월	국정 73-1 국정 41-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연근해 어업인 및 일반 국민
 - *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장 생산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 (이해관계집단) 업종별 어업인 단체 및 협회, 지자체

□ 기대효과

- 바다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우리바다 건강성을 회복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탄소 저감 기여
- 수산자원 조성·관리 내실화로 연안생태 및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해역별·어종별 맞춤형 자원조성을 통한 어장생산량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자원 조성 관리 강화(IV-2-②)				
①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3150)		농특회계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304)			657	6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바다숲 탄소흡수량 누적 증가 실적(톤) (가중치 70%)	72,421	81,750	89,790	97,831	- 직전년도 바다숲 조성관리 예산 300억원으로 추가 확보한 바다숲 탄소흡수량(8,040톤)을 기준*으로 예산 증감에 따른 목표치 설정 * (기준) '21년 바다숲 예산 300억원 신규조성 2,386ha(17개소) 적용 ** 22년 바다숲 실태조사 12.4억원 제외	- 직전년도까지 바다숲 누적 탄소흡수량* + 당해연도 신규 탄소흡수량 * 바다숲 조성면적 × 3.37톤(2019년 포항공대에서 바다숲 이산화탄소 흡수력을 측정한 실측 값)	내부 보고자료
②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가중치 30%)	2.24	2.29	2.44	2.56	- 지난 2년간 바다숲 조성완료(4년차) 해역의 생태학적 다양성 지수 평균 증가율 5%를 적용하여 매년 상향된 목표치 설정	- 당해연도 조성완료 해역(4년차)의 해조류, 저서동물 등의 생물종 다양성 분석* * (생물종다양성 산식) $-\sum_{i=1}^S P_i \cdot \ln P_i$ Pi = i번째 종의 개체수/총 개체수	내부 보고자료

2 수산자원관리 체계 고도화(IV-2-②)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 5534 / 5540 / 5541)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73'의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어업정책 추진을 위해 TAC 업종·어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 우리나라 연근해 전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수산자원조사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 스마트 TAC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수산자원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TAC제도 확대 추진
- ◆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첨단 수산자원 조사·평가 고도화 및 자원관리 전주기 통합관리 기반 마련으로 실효적인 수산자원관리 추진

- (TAC 확대) TAC 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22년 40%)하여 자원관리 기반의 어업구조 구축

- 갈치, 참조기, 삼치 등 3개 어종에 TAC를 신규 적용해 TAC 대상을 15개 어종(1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멸치*에 대해 TAC 시범 실시

* 자원감소 징후가 확인되는 대중성 어종인 멸치를 어획하는 기선권현망 업종에 대해 TAC 시범사업 추진

- (참여유인 확대) 경영 악화를 겪는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안정자금 지원 확대('21, 95억원 → '22, 105억원)

- TAC 참여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대상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21, 81억원 → '22, 119억원)

○ (수산자원관리 강화)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첨단 조사기법 고도화와 선진국 수준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통합 자원관리 기반 마련

- 음향값 조사·바이오로깅 등 첨단 조사기법 고도화 및 직접조사 범위 확대를 통한 자원조사 정밀도 향상

* 음향값 규명 : ('22) 멸치, 전갱이, 청어 / 바이오로깅 : ('22) 대게·명태·대문어·꼼치

-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회유경로 등 생태 특성 조사·분석 밀도를 강화하여 보다 정밀한 산란장 지도 작성

-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해 해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 확대('21. 55종→'22. 60종)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근해 전역

○ (조사 인프라 확충)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전용 조사선(4척)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원조사선 대체건조(3척) 추진

- 체계적 조사·평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CPTPP 가입 등 당면 국제현안 적극 대응

* 조사선 건조 계획(누계, 척) : ('21) 신조 3, 대체 1 → ('22) 신조 3, 대체 2 → ('26) 신조 3, 대체 5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자원 조사분야 정책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정 73-1
	총허용어획량(TAC) 운영·관리 협의회	'22.3월	국정 73-1
2/4분기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관련 전문가 협의회	'22.4월	국정 73-1
	동해 주요위판장 미성어 어획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22.4월	국정 73-1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수산자원조사 현장 점검	'22.5월	국정 73-1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관련 실무협의회	'22.5월	국정 73-1
	총허용어획량(TAC) 추진 관련 업계 설명회	'22.6월	국정 73-1
3/4분기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2.7월	국정 73-1
	친환경 수산자원조사선 대체건조 추진 점검	'22.9월	국정 73-1
4/4분기	수산자원회복 워크숍 및 하반기 광역 과학위원회 개최	'22.12월	국정 73-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22.12월	국정 73-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 어업인 및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어업인, 산업체 및 국·공립 연구소

□ 기대효과

-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어업인 전체 소득증대 도모
- 배타적경제수역 내·외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사·분석으로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대외 협상력 강화
-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확립으로 자원관리정책 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자원회복(Ⅱ-3-일반재정①)				
① 수산자원회복(농특)(3131)	농특회계	69 (69)	70 (70)	
▪ 연근해 특정해역수산자원 정밀관리(340)		49	50	
▪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341)		20	21	
수산자원조성(Ⅱ-3-일반재정⑧)				
① 수산자원조성(농특)(3150)	농특회계	815 (868)	895 (935)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304)		657	659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306)		158	236	
어업경영자금(기금)(Ⅱ-4-일반재정⑨)				
① 어업경영자금(기금)(3465)	수발기금	95 (95)	105 (105)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융자)(300)		95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TAC 참여업종 증가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4.8	54	○ 설정사유 총허용어획량 참여 확대 수준은 어종별 참여업종 증가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 ○ 산출근거 총허용어획량 확대는 어종별 대상 업종단위로 참여하고 있으며, '21년 12월 기준 12개 어종에 대해서 총 22개 업종이 참여(어종별 업종 수 누적 기준)하고 있는 바, 참여 업종 증가에 대한 적정 목표 설정 - TAC 참여 확대에 따른 업종 추가 * '21년 12월 기준 22개 업종(어종별 업종 수 기준) → '22년 12월 기준 34개 업종(어종별 업종 수 기준) 적용 예정	$[(\text{당해연도 참여 업종 수} - \text{전년도 참여업종 수}) / \text{전년도 참여 업종 수} \times 100]$ * '21년도 참여 업종 수 = 22개 업종 (어종별 업종 수 누적 기준)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② 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공통)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100	○ 설정사유 수산자원 정밀조사 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수평·수직 조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조사의 정밀도를 높여 정확한 자원상태를 파악 하고자 함 ○ 산출근거 자원정보는 연속성 유지와 정밀한 조사가 중요하므로, 기존의 정점 조사(수평조사) 수를 유지하면서, 음향조사를 통한 자원의 수직분포 조사를 강화하여 정밀도를 향상 하고자 함 * ('21) 1 → ('22) 1.4 → ('23) 1.8 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 목표 지수의 달성률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 \text{실적지수(a. 조사 기준정점 정밀 조사 달성지수} + \text{b.주요 자원 수직분포 누적 구멍지수}) / \text{목표치의 달성률}$ $[\text{a. (당해 조사 정점수/ 최대 정밀조사 기준 정점수 500개)} \times \text{비중 0.6}] + [\text{b. (수직분포 누적 조사종수/ 수직분포 조사 대상종 3종)} \times \text{비중 0.4}] / \text{목표 실적지수} \times 100\%$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사업 결과 보고서 (국립수산물과학원)

3 어업경쟁력 강화형 어선 감축 추진(IV-2-③)

어업정책과 (044-200-5516 / 5517)

□ 추진배경 (목적)

- 어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 사업으로 전환·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경쟁력 강화
 - (근해어선) 대형트롤, 기선권현망, 저인망, 안강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단기간내 집중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효과 최대화
 - (연안어선) 어획강도가 높고 타 업종과 분쟁이 심한 업종 위주 감척
 - * 어종별·업종별 어획노력량 대비 연근해어선 세력 9.8% 과다('18.11, 부경대)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노후어선, 대형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국정과제 41-7)
 - *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 연안-근해 어업분쟁 심화 및 어업생산량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 5년간('19~'23)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척 추진

- 수산자원 회복 및 연안-근해어업간 분쟁 해소를 위해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근해어선과 분쟁이 많은 업종 위주의 감척 추진
 - 특히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영향을 받는 업종 우선 감척('22. 1,204억원)
 - * '22년 : 근해어선 73척 및 연안어선 163척 감척 추진
- 감척 폐업지원금은 어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자율감척은 상향 지원하고, 직권감척은 불법어업정도에 따라 감액 지원
 - * 폐업지원금은 개별감정평가에 의한 90%에서 100% 지원 확대하고, 직권감척은 불법정도에 따라 90%~60% 지급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도 근해어선감척 감척 시행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7
	'22년도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집행지침 수립	'22.1월	국정 41-7
	'22년도 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1월	국정 41-7
	'22년도 근해어업 실태조사 착수 보고	'22.3월	국정 41-7
	'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22.3월	국정 41-7
2/4분기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22.4월	국정 41-7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22.4월	국정 41-7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집행상황 실태점검	'22.5월	국정 41-7
3/4분기	정치망어업 감척대상 확대를 위한 「연근해어업구조 개선법」 하위법령 개정	'22.7월	국정 41-7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22.9월	국정 41-7
4/4분기	근해어업 실태조사 최종 보고	'22.10월	국정 41-7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22.12월	국정 41-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연근해어선 어업자, 소비자 등
- (이해관계자) 어업인 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척수 유지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1,254 (1,254)	1,204 (1,204)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300)		1,249	1,1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92	103	114	70	○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 및 과거 자율감척 실적 등을 감안 하여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이행을 목표 설정 - 최근 3년간 어업인 자율감척 포기 비율(25.4%) 등을 고려 하여 추세치 반영 * 자율감척 포기 비율 : ('19) 25 → ('20) 35.7 → ('21) 15.4	(근해어선 감척수 / 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100	추진실적 자료(우리부)

4 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IV-2-④)

지도교섭과 (044-200-5562 / 5564 / 5571)

□ 추진배경 (목적)

-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한·중, 한·일 간 어업협정의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추진
 - 주변국과의 조업 경쟁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해 어업관리 역량강화 등 추진
- 연근해 어선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단속 체계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자원조사, 원거리해역대응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통해 어업인 조업권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불법어업시스템 개발 착수('22~'24)
- ◇ 대형어업지도선(3천톤급 3척) 신규 건조 착수, 어업지도선 교육훈련 강화 방안 마련(장관 방침)
- ◇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한·일 어업협상 재개 노력 등 추진

- (어업인 조업권 강화) 대형어선(트롤 등)을 이용한 서해 수산자원 조사를 통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재출어 가능성 타진 및 연평어장 안전조업 강화
 - 원양어선을 활용하여 最외곽(현행조업유지수역 등)에 투입('22.1~4),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고 대형지도선 운용효과 검증
 - * '22년 신규 사업으로 서해 수산자원조사(81억원), 원거리해역대응시범사업(14억원) 반영
 - 연평어장 봄어기(4.1~6.30) 및 가을어기(9.1~11.30)에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 확보
- (어업관리 역량 강화) 어업관리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 및 국가어업지도선 건조계획 등에 따른 인프라 확충

- 어업관리단 안전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보건 매뉴얼('22.1.) 및 어업지도선 신규 승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22.3, 장관 방침)

- 국가어업지도선 대체·신규 건조 계획에 따라 어업지도 역량 확보하고, 고속단정(3대) 적기 교체 및 무인항공기 시제품 개발하여 인프라 확충

*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 : ('20) 18억원 → ('21) 678억원 → ('22) 1,389억원

** 국가어업지도선 신규건조(3척, LNG)에 착수('22~'24)하고, 대체 건조(8척, '23년 준공 예정) 추진

-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불법어구 철거사업('22.下)을 통해 서해 우리 어선의 조업권 강화

- 관계기관간 유기적 정보 공유 및 불법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어구 전문 수거선을 이용 중국 범장망 어구를 철거하여 우리 어선 조업권 확보

- (국내 어업질서 확립) 빅데이터 기반 불법어업 지도·단속 분야 통계·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추진('22년)

* '22년 신규사업으로 '24년까지 구축(총사업비 27억원) 완료 예정

- 지역별·업종별·시기별 테마 단속과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5·10월)·특별단속(수시) 실시

- (한·중 어업협정) 제21차 어공위('21.11.19)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및 '23년 어기 한중 어업협상* 대응

-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자구노력 등 협력 촉구

* 1차 국장급 준비회담(9월/중국, 잠정), 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 개최(10월/한국, 잠정)

- (한·일 어업협정) 어업협상 촉구를 위한 실무적·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日 정부동향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소통 강화) 불법어업 근절 노력 표명 및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어업관리단 장관 방문을 추진하고,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에 대한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지자체 및 어업인 등과의 소통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 분기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마련(서해 어업관리단)	'22.1월	
	(어업인 조업권 강화) 서해 수산자원조사사업 추진	'22.1월	국정 41-1
	(어업인 조업권 강화)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추진	'22.1월	
	(소통 강화)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방문(장관)	'22.1월	
	(어업관리 역량강화) 어업관리단 중대재해 안전보건 매뉴얼 마련	'22.1월	
	(어업관리 역량강화) 어업관리단 인력 확대를 위한 직제 요구(안) 마련	'22.3월	국정 41-1
	(한중 어업협정) 한·중간 어업협상관련 일정 협의	'22.3월	
	(한일 어업협정) 한일 중간수역 어장환경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22.3월	
	(어업인 조업권 강화) 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22.3월	
2/4 분기	(어업관리 역량강화) 어업지도선 신규 승선직원 교육훈련 추진 * '22.3월 장관 방침 ⇒ '22.4~6 교육훈련 실시	'22.4~6월	
	(국내 어업질서 확립)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2.5월	
	(한중 어업협정) 주한중국대사관과의 간담회 개최	'22.6월	
	(어업관리 역량강화) LNG 추진 국가어업지도선 신규건조(3천톤급 3척) 건조 착수	'22.6월	국정 41-1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중국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안) 마련	'22.6월	국정 41-1
3/4 분기	(국내 어업질서 확립) 스마트 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2년 신규사업)	'22.7월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개최	'22.8월	
	(어업인 안전조업 강화)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22.8월	
	(한·중·일 어업협정) 한·중·일 어장환경개선사업(침적어구 수거) 실시	'22.8월	
	(한중 어업협정) 한중 공동 치어방류 행사 추진	'22.8월	
	(어업인 조업권 강화)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결과 보고	'22.9월	
4/4 분기	(국내 어업질서 확립)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2.10월	
	(어업관리 역량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자체 공정관리협의체 개최	'22.10월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한 차년도 한중 EEZ 상호 입어규모 등 논의	'21.11월	
	(어업관리 역량강화) 불법어업 지도·단속용 노후 고속단속정 등 교체	'22.12월	
	(어업인 조업권 강화) 서해 수산자원조사사업 결과 분석 등 보고	'22.12월	국정 41-1
	(국내 어업질서 확립) 연근해 IUU통제법 제정안 마련	'22.12월	국정 73-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어업인과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국민
- (이해관계자) 어업인, 지자체, 정부(외교부, 해양 경찰), 수협 등

□ 기대효과

- 우리 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어업인 안전·조업권을 강화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마련
- 한중 외교협력 강화, 합동단속 등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국내 수산자원 보존을 통한 향후 한·일, 한·중 협상에서 우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1	'22
어업안전지도강화(Ⅱ-3-일반재정②)				
① 어업안전지도강화(3132)	일반	1,111 (1,360)	2,051 (2,068)	
▪ 어업협정이행(300)		37	131	
▪ 어업지도관리(303)		704	1,536	
▪ 어업지도선관리및운영(305)		370	3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국내어선 불법 조업률(%)(공통) (가중치 40%)	15.3	18.0	17.8	17.5	'21년 목표(17.8%)에서 최근 3년간 실적 증감률의 평균치(0.3%)을 뺀 17.5%로 설정	국내어선 불법 어업 단속건수/승선조사건수×100	단속 및 승선조사 실적 본부 보고자료
② 중국어선 불법 대응건수(건) ('22년 신규) (가중치 60%)	2,536	1,865	2,500	2,650	최근 3년간 평균(2,300건)보다 향상된 목표를 설정하되, '21년 대비 목표를 약 6%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국정과제 성과지표 목표 수치와 동일함)	우리수역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건수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시스템상 중국어선 승선조사 등록된 건수 기준

5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IV-2-5)

원양산업과 (044-200-5361 / 5362)

□ 추진배경 (목적)

-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규제 강화, 어선 노후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국적어선의 원양 생산량은 지속 감소

* 원양 생산량(만톤) : ('90) 92 → ('17) 44 → ('18) 46 → ('19) 51 → ('20) 44 → ('21) 44

- 해외 수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외 어장 개척 등 원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양어선 안전성) 안전펀드('21년, 150억원)를 통해 노후 어선 신조를 지원하고, 어선안전협약(CTA)* 비준을 준비하여 안전성 제고
-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 이행 여부 지도·점검 및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양 연승어선 표준선형 개발 연구 추진

* 케이프타운협정 : 선체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어선안전 협정

- (어획할당량 배정) 지역수산기구별 어획할당량을 확보하여 각 선사별로 할당량을 배분하고, 조업·전배·양륙 등 지속 모니터링
- (어장 확대)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자원조사와 주요어장 국가에 대한 ODA*를 통해 해외어장 개발

* 원양 핵심어장 어촌뉴딜 ODA사업 추진('23~'25/67억원) 추진

- (IUU 어업 근절) 미국, EU의 불법어업국 지정 대비,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국적선 감시강화를 위해 원양어선 전자 모니터링(EM) 도입 추진

- (소통 강화) 원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의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 및 협력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31차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	'22.2월	
	원양 핵심어장 어촌뉴딜 ODA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추진	'22.3월	
2/4분기	해외어장 자원조사 선정위원회 개최	'22.4월	
	지역수산물구별 어획할당량 배정	'22.5월	
	전자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22.6월	
	원양 연승어선 표준선형 개발 연구 추진	'22.6월	
3/4분기	전자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22.9월	
	원양어업 통계조사 공표('21년말 기준)	'22.9월	
4/4분기	'22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계획 수립	'22.10월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 이행 여부 합동점검 실시	'22.11월	
	원양업계 간담회 개최	'22.12월	
	'23년도 원양어선 안전 펀드 사업계획 수립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원양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원양 어업인
- (이해관계자) 원양어업 종사자, 러시아, EU 등 연안 조업국 등

□ 기대효과

- 노후어선 대체 신조 등을 통한 원양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도모
- 해외 어장 확대를 통한 원양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I -4-재정(2))				
①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3541)		수발기금	180	150
▪ 원양어선 안전관리(301)		수발기금	180	150
원양어업기반구축(농특)(I -4-재정(1))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	57	54
▪ 원양어업활성화(300)		농특	47	44
▪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303)		농특	10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원양어선 평균 선령 감소율(%) (가중치 70%)	0	1	1	1	○ 원양어선 노후화 개선을 위해 안전펀드 지원 업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상승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수요가 적은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치 설정	(신조 미지원 시 3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 비율) - (안전펀드 지원 시 3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 비율)	원양 어선 허가 현황
② 해외어획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율(%) (가중치 30%)	8.3	7.6	8.2	7.6	○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수산물기구에서 요구하는 항만국검색 수준(5%)보다 검색을 확대하여 목표치 설정	$\frac{\text{항만국검색 척수}}{\text{전체 입항신고 척수}} \times 100$	항만국 검색 실적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친환경·첨단양식 기술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양식시설 구축 등을 통해 양식산업 생산성 혁신 및 고도화 추진
 - 순환여과·바이오플락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갯벌양식 기술개발 등으로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 IT·BT 등을 접목한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양식 시스템 등 첨단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양식업의 고도화 추진
 - 참다랑어, 뱀장어와 같은 고부가 품종의 R&D를 강화하여,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육성 추진
- 양식생산환경 지속가능한 이용, 재해예방 및 복구, 양식산업의 공공성 확대 등 양식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임대형 양식장, 청년·귀어인 신규면허 우선 발급 근거 마련 등 양식 생산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기후변화로 지속·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복구 지원 현실화 등 실질적 사후조치를 통해 양식산업 경영 안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양식 생산량 (천톤)	2,410	2,308	2,397	2,404	어장오염 악화, 어업인수 감소(어촌소멸), 자연재해 등으로 '17년 이후 양식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 소비충격, 물류난 등으로 양식생산량 지탱이 어려운 실정이나, 전년대비 0.3% 상향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양식산업의 양적인 성장 한계에 따라 첨단기술 접목, 생산원가 절감, 환경·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양식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양식생산량(만톤) : ('17) 231 → ('18) 224 → ('19) 241 → ('20) 230 → ('21) 239

- (경험 의존) 육안관측·경험에 의존한 생산·연구로 기술·설비가 표준화되지 않고 분절되어 기술 확산이 느리고 연관산업 미발달
- (재해 취약)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급변으로 해상양식은 영양염류 부족, 고·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

* 양식분야 어업재해 피해현황(억원) : ('17) 98 → ('18) 713 → ('19) 82 → ('20) 84 → ('21) 217

- (안전 우려) 금지약품 사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양식수산물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존
- (환경 훼손) 폐쇄형 연안에서 밀집·밀식으로 어장환경 수용력을 초과하고 있고, 생사료 및 폐기자재 퇴적 등으로 오염부하 심화

(4) 기타

- 어업생산 동향 등 통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www.kosis.kr)
- KMI 수산물관측(www.foc.re.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IV-3-①)

양식산업과 (044-200-5631 / 5635/ 5637)

□ 추진배경 (목적)

- (생산 환경변화) 50년간('68~'17) 한반도 해수온*이 약 1.23℃ 상승하여 수산자원 변동성 심화, 고수온 등 어업재해** 확대 우려

* 우리나라 바다는 전 세계 평균 상승폭(0.48℃) 보다 2.5배 빠르게 상승

** 양식분야 어업재해 피해현황(억원) : ('17)98→('18)713→('19)82→('20)84→('21)217

⇒ 스마트양식 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수산업의 저탄소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수산업 적응력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저탄소 적응형 양식 기반마련)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투입요소 (물·사료·에너지 등)를 최적화하여 양식산업을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형 산업으로 전환 기반 마련
 - 민간 및 지자체에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수처리설비, 스마트 양식 등 시설지원 추진(3월)
 - 에너지 절감설비(인버터·태양열발전설비·복합열 등) 보급 현황점검 및 에너지 다소비 구조개선을 위한 보급사업 관계자 워크숍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인력 양성·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1개소 착공 추진
 - 신규 인력양성 및 진입을 위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 및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추진

-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현황점검(11월)
- (경쟁력 강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양식수산물 품질 차별화로 경쟁력 향상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자 선정, 이해관계자 대상 현장 설명회 및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이행점검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양식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22.2월	국정 73-1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자 선정	'22.3월	국정 73-5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이전 및 창업컨설팅 착수	'22.3월	국정 73-1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2.3월	
2/4분기	친환경·첨단양식 기술교육 콘텐츠 게시	'22.5월	국정 73-1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관계기관 합동점검	'22.6월	
3/4분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회의	'22.7월	국정 7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1개소 착공 추진	'22.7월	국정 7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본계획(1개소) 승인	'22.7월	국정 73-1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현장 설명회	'22.7월	국정 73-5
4/4분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진현황 점검	'22.10월	국정 73-1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이행점검	'22.11월	국정 73-5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현장점검	'22.11월	국정 73-1
	첨단·스마트 등 양식시설 3개소 구축	'22.12월	국정 73-1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워크숍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체, 소비자, 수산물 취급관련 업체(유통, 가공업체 등)
- (이해관계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체 및 수산물 취급관련 업체(유통, 가공업체 등), 환경단체 및 일반국민

□ 기대효과

- 전통 방식의 양식업을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 기반을 마련
으로 양식업 분야 스마트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스마트양식 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 적응력 확보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농특회계	453	533	
		453	533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⑧)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410)	에특회계	243	248	
		243	248	
내수면어업(Ⅱ-3-일반재정④)				
① 내수면어업(3141) ▪ 내수면자원조성(303)	농특회계	82	188	
		82	188	
수산공익직불제(Ⅱ-4-일반재정⑨)				
① 어가소득보전(3460) ▪ 수산공익직불제(310)	농특회계	515	559	
		515	5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CO2 저감량 (tCO2) (공통)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11,340	21년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목표 용량(57,995kW)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 조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10,485tCO2)하여 목표를 설정	CO2 저감량 = 보급 전 유류(등유) 탄소 배출량(tCO2) - 보급 후 에너지 절감시설 탄소 배출량(tCO2)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 결과
②교육 수료자의 양식 취·창업률(%) (가중치 40%)	17.1	23.1	24.2	21.4	코로나-19로 자본 확보 지연 등에 따른 창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실정을 반영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치 21.4%로 설정	(취·창업인원(단기포함)) /(원스톱 창업지원대상) ×100	교육 및 컨설팅 수혜자 대상 조사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2 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IV-3-②)

양식산업과 (044-200-5631 / 5633/ 5683)

□ 추진배경 (목적)

- (현장대응 강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양식전략 품목 대외 경쟁력 확보
- (동반성장) 종자·사료·기자재 등 양식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및 자재 등을 연계 개발양식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부가 양식품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스마트양식 추진을 위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핵심기술 개발 R&D 추진
 - (핵심기술 개발)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기술 개발 및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 개발 추진 현장 컨설팅 및 중간모니터링 실시
 - (대량생산) 양식산업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대응 중충 침설식 가두리 설치 지원
- 수산종자 및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 수산종자 산업 데이터 기반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수산종자의 품질표시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유형별 생산이력 (종자명칭, 생산지 등) 표시에 필요한 맞춤형 표시기준 및 방법 등 마련
 - 재해대응(태풍·고수온 등) 종자시설(김 냉동망) 지원 및 수산종자 수급동향(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등) 조사를 위한 관측사업 추진
 -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관상어 박람회 개최

-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기반 구축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추진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추진
-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추진현황 현장점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22.3월	국정 73-5
	수산종자관측 사업추진	'22.3월	
	수산종자 품질표시 사업추진	'22.3월	
2/4분기	수산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업계 간담회 개최	'22.4월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사업자 선정	'22.4월	국정 73-1
	수산종자산업·유수식 디지털 혁신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업무협약	'22.5월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추진	'22.6월	
3/4분기	수산종자산업·유수식 디지털 혁신기술개발 현장 컨설팅	'22.9월	국정 73-1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이행점검	'22.9월	국정 73-5
4/4분기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결과보고	'22.11월	국정 73-1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추진현황 현장점검	'22.11월	국정 73-1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	'22.11월	
	수산종자산업·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 개발 중간 모니터링	'22.12월	국정 73-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양식어가, 소비자, 수산물 취급관련 업계 (유통, 가공, 수출업계 등)
- (이해관계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체 및 수산물 취급관련 업계 (유통, 가공, 수출업계 등)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및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병에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종자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
-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친환경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조성
-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로 질병 발생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 및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
- 우량종자 생산 유통 기반 조성을 통한 수산종자 생산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원 및 안정적 양식산업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농특회계	565	700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300)		32	66	
▪ 수산종자산업육성(305)		10	19	
▪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350)		45	44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453	533	
▪ 관상어산업육성(351)		25	38	
어업인소득안정지원(Ⅱ-4-R&D①)				
① 수산연구개발(3433)	농특회계	-	69	
▪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325)		-	19	
▪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326)		-	50	
수산공익직불제(Ⅱ-4-일반재정⑨)				
① 어가소득보전(3460)	농특회계	515	559	
▪ 수산공익직불제(310)		515	5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양식 9대 전략품목 생산량(천톤)(공통) (가중치 60%)	1,018	948	980	990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양식생산량 확대로 글로벌 수산 강국 도약을 도모하고자 전략품목* 양식생산량을 목표로 설정 * 넙치, 전복, 김, 해삼, 뽕장어, 참다랑어, 굴류, 연어류, 새우 등 9대 전략품종	9대 전략품목 양식생산량	전략품목 양식생산량 (통계청)
② 배합사료 사용비중(%)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27.9	양식산업 경쟁률 제고 및 고품질 배합 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18~’20) 배합사료 평균 사용비중*인 26.6%보다 5% 상향한 27.9%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 (‘18) 24.6% → (‘19) 27.7% → (‘20) 27.6%	(배합사료사용량 /양식장사료총 사용량)*100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배합사료생산량통계)

③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IV-3-③)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1 / 5614)

□ 추진배경 (목적)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적정 어가인구 유지를 위한 양식 제도 개선 및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복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여건 조성 필요

* 양식생산량(만톤) : ('17) 231 → ('18) 224 → ('19) 241 → ('20) 230 → ('21) 239

-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도 불구하고, 폐쇄적·독점적 양식업권 운영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인력 양식업 진입 곤란

* 어가/어가인구(내수면 제외) ('17) 5.3만가구/12.2만명 → ('21) 4.3만가구/9.4만명

** 어가 고령화율(% , 65세 이상) : ('11) 23.1 → ('20) 36.0 → ('21) 40.5

- 기후변화와 계절 특성에 따른 고·저수온, 이상조류,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양식생산 수급 불안정 및 산업인구 이탈 우려

* 양식 재해 피해현황(억원) : ('17) 98 → ('18) 713 → ('19) 82 → ('20) 84 → ('21) 217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 스스로 수산물 소비 촉진,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지원*

* 자조금 품목단체 10개 지원('22년 35억원) : 김, 전복, 굴, 미역, 관상어, 메기, 향어, 민물장어, 광어, 송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방성 강화) 기존 어업인 중심의 면허제도, 귀어인이 되기 위한 엄격한 자격조건* 등 폐쇄적인 어촌사회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양식면허 등이 기존 어업인 우선으로 되어있어 신규 진입자의 면허 획득 곤란

-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구역, 생산품종, 행사(임대) 현황 등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양식장 정보를 통합 조사하여 정책 수립기반 통계 마련
- (양식제도 개선) 양식면허제도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양식장' 도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부전략** 수립 추진
 - * 양식장 임대범위 확대, 재임대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 양식장 확보 → 신규인력 선정 및 교육 → 임대형 양식장 운영 및 관리
- (안정적 공급 기반)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한 안정적 양식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 (사전대응) 수온·유해생물 등 관측정보 분석을 통해 재해 우려지역 중심으로 재해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지원
 -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40억원), 적조 등 유해생물구제(38억원)
 - (피해복구) 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으로 피해 양식어가의 안정적 경영 재개 지원
 - * 피해신고 → 합동 피해조사 → 피해복구계획(안) 수립 →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수부 차관) → 피해복구 지원
- (수급 안정화) 주요 양식수산물의 입식·사육·생산량, 산지·도매·소비지 가격 등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제공하여 급격한 가격변동 최소화
 - * 전문가와 어업인이 참여하는 품목별 동향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수급전망, 수급 불안요소 관리방안 등 공유
- (수요 확대) 양식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육, 펫사료, 메디푸드 등 미래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요처 및 수급 체계 마련
 - * 미역 등 해조류를 활용하여 대체육, 우유 등 미래식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협업으로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한 해조류 계약재배 시범사업 추진

- (자조금 활성화) 양식 생산자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의무자조금단체 전환 및 임의자조금 신규 품목단체 확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연 2회/반기별) 및 품목별 생산자 현황 통계제공 등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 지원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넙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22.2월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계획 수립	'22.3월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22.3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착수(양식실태조사계획 승인 및 예산교부)	'22.3월	
	해조류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2.3월	
2/4분기	임의자조금 신규품목단체 운영	'22.4월	
	임대형 양식장 도입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22.5월	국정 73-4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점검	'22.6월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22.6월	
3/4분기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22.7월	
	임대형 양식장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	'22.8월	국정 73-4
	주요산지 수급동향 현장점검	'22.9월	
	어업재해 피해 현장점검	'22.9월	
4/4분기	생선회 외식처 등 양식수산물 소비 트렌드 조사 및 분석	'22.11월	
	임대형 양식장 추진전략 수립	'22.12월	국정 73-4
	수산물 자조금지원사업 점검	'22.12월	
	양식재해 대응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22.12월	
	수산물관측 중앙자문위원 정책 토론회 개최	'22.12월	
	양식재해 대응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2.12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22.12월	
	수산양식 박람회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양식어가, 종사자 등 양식산업 관련 업계 및 귀어·귀촌 어업인 등 양식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자본 등
- (이해관계집단) 양식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양식수산물 수요 식품업체, 어촌계 등 기존 어업인

□ 기대효과

- 기후변화로 지속·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생산복구 지원 등을 통한 양식수급 적정량 유지 지원
- 임대형 양식장 도입 등 청년·귀어인의 양식업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 자조금단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 조절, 품질개선 등 양식생산자단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재해대책				
① 재해대책(3443)	농특회계	80	80	
▪ 양식등재해대책비(302)		80	80	
수산관측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농특회계	35	35	
▪ 수산관측(300)		35	35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농특회계	3	3	
▪ 양식장관리실태조사(301)		3	3	
수산물가격안정				
① 수산물가격안정(3065)	수산발전 기금	35	35	
▪ 수산물자조금지원(301)		35	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산지가격 변동율(%) (가중치 : 50%)	11.3	12.1	16.2	12.8	- 공급조절, 소비홍보, 수출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의 사업을 통해 양식 수산물 가격안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주요 품목(5개)의 산지가격변동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최근 5년간 평균 산지가격변동률 적용	(B-A)/A*100 B:금년도 대상 품목 전체의 산지평균가격 A:전년도 대상 품목 전체의 산지평균가격 대상품목은 수산물자조금 품목중 수산물관측을 통해 산지가격 확인이 가능한 '김','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의 평균가격	수산물관측 내부자료
② 임대형 양식장 도입 (가중치 : 50%)	신규	신규	신규	100	- 양식면허제도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양식장' 도입	Sum(A:F) -A : 임대형 양식제 도입 방안 마련(10) -B : 개정안 입법 예고(10) -C : 개정안 규제영향 평가(10) -D : 개정안 법제심사(10) -E : 개정안 차관·국무 회의(20) -F : 개정안 국회 제출(40)	행정자료

4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IV-3-④)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5 / 5623 / 5620)

□ 추진배경

- 해양환경 영향에 따른 양식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양식어장 환경 관리 필요

* 우리나라 해안의 플라스틱 쓰레기(68%) 중 스티로폼이 55%(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수부)

-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과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수산생물질병 관리 요구

* 국내 수산전염병 발생 현황(건) : ('17) 49 → ('18) 83 → ('19) 42 → ('20) 5 → ('21) 20

* 수입 수산질병 불합격(건) : ('17) 20 → ('18) 47 → ('19) 58 → ('20) 102 → ('21) 39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서식환경에서 수산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약품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 친환경, 고품질, 잔류안전 등 질적 생산 중심으로의 생산패러다임 변화에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역량 향상 필요

* ('24)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21-'25)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장환경 개선) 어장종류별 청소 방법 마련*, 어장청소 이행 방식 전환 (과태료 → 이행강제금), 어장환경평가 주체변경(시·군·구 → 국가)** 등 어장관리 실효성 강화

*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7월)/ ** 「어장관리법」 개정(국회 제출, 4월)

-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 금지*, ^{스티로폼부표를 대체} 인증부표 신규 보급 확대(200→400억 원), 청정어장 재생 등으로 어장환경 개선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22.11.~) → 기타 양식장('23.11.~)

- (수산물 질병관리) 수산물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유입 수산물질병 감시체계 강화 및 수질관리 기술 개발
- (제도정비) 위생·검역(SPS) 규범 이행 등을 위한 수출 및 해외 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관리, 현지점검 근거 마련*, 양식수(사육수·배출수)의 품질·위생·환경·질병 등에 대한 통합 관리기술 개발 추진('22.상)
 - * 「수산물질병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22.2) → 법제처 제출('22.8) → 국회 제출('22.11)
- (예찰강화)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 질병 예찰 확대* 등 체계적인 질병 관리를 통해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
 - * 전염병(26종) 시설 예찰율 : ('21) 2,928개소(20%) → ('22) 3,566개소(24%)
- (국제공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 수산동물 위생규약 개정 대응*, 「한·중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 협정」 체결
 - * 수산동물건강표준위원회(4.14.) 지역위원회 회의(5.16), 정기총회(5.23 ~ 26) 참석
- (의약품 안전사용)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감시* 및 안전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 *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소,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 등, ** 전국 양식장의 30% 이상
- 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 운영 활성화, 전문가 항생제 처방 교육 강화
 - *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내 적정사용, 확산 방지, 감시체계 행동계획 이행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기준 강화*에 대비 수산동물용 의약품 확충·정비 및 어업인 교육 강화
 -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안전기준이 설정된 물질 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수산분야는 어류, 동물 약품에 우선 적용('24),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 (의약품 정비·확충)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확충과 신규 수산 의약품 개발을 통하여 어업현장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지원
 - * 허가된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가능 품종 확대 (연 10종), 신규 수산용 의약품 개발(연 10종)

- (교육 및 홍보) PLS 제도 이해 이해관계자 적극 소통으로 어업인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통해 수산물 안전경쟁력 강화

* 수산물 안전정보 누리집 등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간담회, 설명회 등 어업인과 적극 소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동물용 의약품등 사용·지도 점검 계획수립·시행	'22.1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2.2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계획수립·시행	'22.2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창구구축	'22.3월	
	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이해 간담회 개최	'22.3월	
2/4분기	어장환경평가 국가 사무 전환 등 「어장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2.4월	
	이식용 가리비 종패 수입검역 개선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 개최	'22.4월	
	제89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	'22.5월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행동계획 수립	'22.6월	
	인증부표 현장 의견수렴	'22.6월	국정 41-7
3/4분기	수산용 의약품 정책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2.7월	
	인증부표 홍보 전시회 및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단계적 금지 홍보	'22.7월	국정 41-7
	어장종류별 청소방법 마련 등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	'22.7월	
	「한·중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 협정」 체결 추진	'22.7월	
	청정어장 재생사업 현장 의견수렴	'22.8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어업인 대상 교육·홍보	'22.8월	
4/4분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22.11월	
	양식장 내 스티로폼부표 신규 설치 단계적 금지 시행	'22.11월	국정 41-7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수산질병관리사 대상 교육·홍보	'22.12월	
	수산생물전염병 1종(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청정국 지위 획득	'22.12월	
	수산양식 해수관리 기술개발 최종보고회	'22.12월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확충 최종보고회	'22.12월	국정 73-3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양식어가, 종사자 등 양식산업 관련 업계 등
- (이해관계집단) 양식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수산질병 관리사 등

□ 기대효과

- 책임있는 양식어업 규범의 국내이행으로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장별 청소방법 마련 등 어장 환경 보전·개선을 통한 양식업생산 여건 마련
 -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로 질병 발생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
 - 수산물 안전경쟁력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제공으로 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3100)				
친환경양식육성(3140)				
▪ 친환경어구보급(303) - 친환경부표보급		농특회계	2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양식장 인증부표 교체비율(%) (가중치 : 40%)	28.1	31.5	38.0	49.3	양식장의 스티로폼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22년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 * 전년 대비 30% 상향	양식장 인증부표 수 / 양식장 부표 수(5,500만개)×100	지자체 보고자료 및 수협 전수조사
② 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획득(%) (가중치 : 30%)	신규	신규	신규	100	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서 과거 10년간의 질병 미발생, 모니터링 실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방역 및 검역시스템의 운영 등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바, '22년 도전적 목표 설정	B/A*100 B : 금년도 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 실적 A : 금년도 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 계획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청정국 등재
③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확충 (%) (가중치 : 30%)	신규	신규	신규	100	어종별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설정목표(10종) 달성을	B/A*100 B : 기준설정 실적 A : 금년 설정 계획(10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 주요내용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위생환경을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현행 경영실적 위주)하고, 위판장 의무 위생기준 마련 및 위판장 수익구조 다변화 등 추진
-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주문·배송·재고관리 서비스 일괄 제공 추진
-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수산물 소비쿠폰 행사('22, 200억원) 지속 추진

□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기하고 수산물 소비활성화

- (물가관리) 대중성어종 등 물가 안정 관리품목 중심 일일 가격 모니터링 추진 및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계 운영(7.11~)

* 전통시장 24개 등 대상 명태 425톤 방출 완료(5월, 7월), 마트 대상 추가 수요 조사 중

-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판매처(33개사), 전통시장 연계 수산물 할인 행사('22, 610억원) 개최, 단체급식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학교·군 급식에 수산물 공급이 확대(現 4,288억원)될 수 있도록 단체 급식 레시피 개발 및 국내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 확대(月 170만원)*

* 학교·군 대상 레시피 개발, 쿠킹클래스, 신선 식품 구입비 등 지원('22, 4.3억원)

□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K-Seafood관’을 확대하고,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쇼케이스 및 라이브 판매 등 지원으로 비대면 소비시장 대응 강화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김산업 진흥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전략 등 제1차 김산업진흥 기본계획(‘22~’26) 수립

* 관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공포(‘22.4)

- 김 제품 개발 및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산업화를 위해 수산식품 연구기관을 「김산업법」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 추진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22.上) 후 전문기관 지정(‘22.下)

- 가공·R&D·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을 위해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실시설계 및 부산권** 설계 공모

* (전남권) 해조류 특화, 종합단지형 클러스터(가공공장, R&D시설, 창업수출센터, 거래소 조성)

** (부산권) 어류·원양수산물·어묵 특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수산식품개발플랜트(R&D 기능), 수출거점복합센터(수출지원 기능), 혁신성장지원센터(창업·수출·홍보지원 기능) 조성)

-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연구·가공·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거점 단지* 및 스마트 기능을 접목한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화순, 해남, 통영 추진 중(22년까지 19개 조성 계획)

** 총사업비 : 380억원,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사업대상지 : 전북 군산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	-	3	4.8	12.9	「수산식품산업법」 제13조에 의거, 전남권·부산권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정률을 목표치로 설정 * 전남권 클러스터('20~'25), 부산권 클러스터('22~'26)	(연도별 예산 누적 투자액(국비)/ 총사업비) × 100	내부보고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외식소비 회복 및 수산가공식품 시장 지속 성장

- 전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 전환으로 외식 소비는 회복세이며, 이와 함께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해외 소비 동향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수출 마케팅 확대와 함께, 온라인 중심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신선 가공·유통 인프라 확대 필요

□ 수산물 먹거리 안전 및 소비위축 대응 필요

- 수산물의 원산지, 유통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유통이력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
- 특히,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국내 수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시급

□ 日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고조 등 수산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이 지속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으로 수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위생·안전 확보 필요

(4) 기타

- ☐ (김산업 육성)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김 제품 개발 및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산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육성 필요
- ☐ (관련 정보제공 누리집)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net>)

☞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유통경쟁력 강화로 국민이 공감하는 유통생태계 혁신 도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IV-4①)

유통정책과 (044-200-5441)

□ 추진배경 (목적)

- 생산비용(유가 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산물 물가는 4월 이후 2%대 지속,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등으로 수급불안 지속 전망
 -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 동월비): (1월) 0.5%→ (2) 0.3→ (3) 0.6→ (4) 2.3→ (5) 2.7→ (6) 2.9
- 이와 함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예상
-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0%(연근해 수산물 82%)가 위판장*을 경유하나,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경우가 많아 위생확보에 한계**
 - * 연근해 수산물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첫 단계로서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은 양륙-선별-위판-배송단계를 거쳐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
 - ** 211개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위판장 85개소(40%), 위생시설이 없는 위판장 114개소(69%)
- 1-2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수산식품 유통·소비트렌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재편 중
 - *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통계청) : '17년 2조 4천억 → '20년 6조 2천억(연평균 37% 증가)
 - ** 온라인 식품 구매경험(식품소비행태조사) : '16년 29.1% → '19년 51.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급·물가관리) 비축·수매, 할인행사 등을 적기에 시행하고, 수급 불안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 수급관리 역량 강화 추진
 - (모니터링)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물가 상황 확인을 위한 수산외식업 실태조사* 추진
 - * ('22) 0.5억원, 명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품목→ ('23~) 매년 2억원(요구 중)
 - (할인행사)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도 지속 개최
 - (역량 강화) 대중성어종 등 물가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생산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이를 활용, 수급예측모형 고도화 추진
 - * 수급·물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량 예측모형' 개발 R&D 기획연구 추진('22.下)

- (위생·안전관리) 수산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이력 등 관련 정보도 철저하게 관리
 - (위판장) 유통물량 상위 100개소를 선정, 순차적으로 현대화* 추진
 - * 목표: '29년까지 연근해산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 (現 전체 위판량의 9.1%)
 - 시설·운영 현황 등을 분석, 유형별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양륙-경매 등 위판全过程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 추진
 - * 위판장 표준건축(안) 마련(수산물-사람 접촉 최소화), 전자경매 및 자동선별 시스템 개발 등
 - (국내산 이력제) 참여 방식을 대폭 줄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공공이력제 도입 등 이력제 개편방안 추진계획 수립
 - * 위판장에서 정보를 일괄 입력,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정보시스템 연계
- (채널 다변화) 공영홈쇼핑(연 18개소)·로컬매장* 입점 및 직판장 운영 생산자단체 대상 직거래 자금(융자) 지원 등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 * (~'21) 충청권, 호남권 20개소 → ('22) 영남·제주권 10개소
 - ** 직거래 수산물 구입자금(연 39억원):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 1년 상환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특별전 개최	'22.1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감짜특별전 개최	'22.2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3월 봄맞이전 개최	'22.3월	
	산지거점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협의회 개최	'22.3월	국정과제 84-4
2/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풍어기원특별전 개최	'22.4월	
	어한기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비축 물량 방출 추진	'22.5월	
	수산분야 외식업체 등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22.5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감짜특별전 개최	'22.6월	
3/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특별전 개최	'22.7월	
	위판장 현대화 등 기술개발 연구협의회 개최	'22.7월	국정 73-3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특별전 개최	'22.9월	
	생산량 예측모델 및 수급관리모형 개발 R&D 기획연구 착수	'22.9월	국정 73-2
4/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코리아수산페스타 개최	'22.11월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안) 마련	'22.12월	
	수협 위판정보시스템 및 이력정보시스템 연계	'22.12월	국정 73-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차적으로는 어업인, 유통업계 종사자이며, 최종 수혜자는 수산 식품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어업인, 수산물 유통업계 등

□ 기대효과

-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물 유통개선(농특) (Ⅱ-2-일반재정②)				
① 수산물유통개선(3040)	농특회계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17)	농특회계	50	23	
▪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319)	농특회계	28	26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 (Ⅱ-2-일반재정③)				
①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3041)	농특회계	22	24	
▪ 수산물이력제(302)	농특회계	22	24	
수산물어촌알리기 (Ⅱ-2-일반재정⑤)				
① 수산물어촌알리기(3044)	농특회계	410	218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340)	농특회계	410	218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Ⅱ-2-일반재정⑧)				
①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3066)	수발기금	708	759	
▪ 비축사업(302)	수발기금	708	759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①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3068)	수발기금	1,278	1,187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300)	수발기금	1,278	1,187	
수산연구개발				
① 수산연구개발(3433)	농특회계	76	83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319)	농특회계	76	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상생할인 수산물 매출액(억원) (가중치 50%)	신규	신규	2,618	1,000	'21년 예산 590억원으로 2,618억원 매출 달성, 200억원 규모로 진행 시 887억원이 적정 목표이나, 10% 이상 상향된 매출액을 목표로 설정	상생할인 할인 품목 수산물 총매출액(억원)	- 사업결과 보고서
②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만톤	수협위관시스템과 이력시스템 연계를 통해 갈치·고등어에 대한 생산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대중성어종 최근 5개년 중 최저 생산량×50%를 목표로 설정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톤)	- 사업결과 보고서

2 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IV-4-②)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 / 5482)

□ 추진배경 (목적)

- '21년 수산물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회복하며, 전년 대비 22.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출액 28.3억불 달성
 - * 수출액(억불): ('17) 23.3 → ('18) 23.8 → ('19) 25.1 → ('20) 23.2 → ('21) 28.3
- 수산식품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출 상위 품목 다수가 원물 형태이며, 대부분의 수출·가공업체가 영세한 수준
 - * 원물 수산물 수출 비중('21) : 57.6%, 16.3억불 / 중소기업 수출 비중('21) : 76.5%
-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식품 가공·수출 지원 및 산업 전반의 육성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 * 상품 개발, 검사비, 해외인증 취득, 현지 판촉홍보 등 지원항목을 제시하고 기업 선택 사용
 - ** ('21) 15개사 / 성장 10, 고도화 5 → ('22) 33개사(+18) / 초보 10, 성장 15, 고도화 8
 - 굴·넙치·전복 등 대표 선도조직 육성을 위해 생산형·스타트·고도화 등 단계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 * 주요 품목별 선도조직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해당 품목 대표 통합조직으로 단계별 육성
 - ** ('21) 생산(3개조직)/스타트업(1)/고도화(4) → ('22) 생산(1)/스타트업(2)/고도화(5)
- 비대면 무역 거래 소비시장 대응 강화
 -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B2B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전시-상담-상품신청-물류(샘플) 등 수출거래 과정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 'K-Seafood관*'을 확대하고, '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쇼케이스 및 라이브 판매 등 지원('22. 신규)

* ('21) 아마존(미국)·타오바오(중국) 등 5개소 → ('22) 7개소 (+2개관 추가)

** 수도권에 장소 임대, 장비 및 전문운영인력을 확보하여 대여 및 콘텐츠 제작지원

○ 수산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

- 가공·R&D·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을 위해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실시설계 및 부산권** 설계 공모

* (전남권) 해조류 특화, 종합단지형 클러스터(가공공장, R&D시설, 창업수출센터, 거래소 조성)

** (부산권) 어류·원양수산물·어묵 특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수산식품개발플랜트(R&D 기능), 수출거점복합센터(수출지원 기능), 혁신성장지원센터(창업·수출·홍보지원 기능) 조성)

-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연구·가공·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거점 단지* 및 스마트 기능을 접목한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화순, 해남, 통영 추진 중('22년까지 19개 조성계획)

** 총사업비 : 380억원, 사업기간 : 2022년~2025년, 사업대상지 : 전북 군산시

- 지역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해 부산·목포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신제품·기술개발, 상품화 등 역량강화 지원 추진
-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회유성 어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 (현행)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저차 가공품 → (개선) 영광굴비, 안동간고등어 등

○ 김산업 육성기반 마련

-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김산업 진흥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전략 등 제1차 김산업진흥 기본계획('22~'26) 수립

* 관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공포('22.4)

- 김 제품 개발 및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산업화를 위해 수산식품 연구기관을 「김산업법」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 추진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22.上) 후 전문기관 지정('22.下)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년 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 수립	'22.1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목포) 공정관리 계획 수립	'22.1월	국정 73-2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사업 지원대상 선정	'22.3월	국정 73-2
2/4분기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2.4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목포) 총사업비 변경 관련 관계 기관 협의	'22.5월	국정 73-2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 수립	'22.6월	
	온라인 수산박람회 개최	'22.6월	국정 73-2
3/4분기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성과 보고회(중간)	'22.8월	
	K-SEAFOOD 해외 온라인 판매관 개설	'22.8월	국정 73-2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22.9월	국정 73-2
4/4분기	K-SEAFOOD 해외 온라인 판매관 연계 마케팅	'22.11월	
	김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22.11월	
	전남 수산식품 클러스터(목포) 실시설계 완료	'22.12월	국정 73-2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차적으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업체이나, 수산물 원료를 공급하는 어업인, 수산식품을 공급받는 모든 국민이 수혜자임
- (이해관계자) 수산식품 수출·가공업체, 어업인, 수산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수산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가공품 중심의 수출체제로 개선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식품 제품 개발,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수산식품 가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수산물 수출지원(Ⅱ-1-일반재정③)				
① 수산물 수출지원(2837)	농특회계	328	410	
▪ 수산물해외시장개척(300)		328	410	
품목별 경쟁력 강화(Ⅱ-1-일반재정④)				
① 품목별 경쟁력 강화(2838)	수발기금	1,324	1,324	
▪ 우수수산물 지원(융자)(302)		1,324	1,324	
식품산업육성(Ⅱ-1-일반재정①)				
① 식품산업육성(2832)	농특회계	11	139	
▪ 수산식품산업육성		1	18	
▪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301)		10	121	
수산식품산업육성(Ⅱ-1-일반재정②)				
① 식품산업육성(2835)	균특회계	28.5	28.5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302)		28.5	28.5	
수산연구개발(Ⅲ-2-R&D⑤)				
① 수산연구개발(4145)	농특회계	-	46	
▪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300)		-	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①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율(%)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100	'수산물 수출 활성화(국정과제)'를 위한 주요 과정 및 결과의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	① 해외 K-SEA FOOD 판매 전용관 운영 (7개소) (20%) ②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전시 상품수 20% 확대 (20%) ③ K-SEAFOOD 미디어 스튜디오 신규 개설 (1개소) (30%)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④ 가공 수산물 수출액 역대 최고치 13.3억불 달성(30%)	관세청 수출통계
②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율(%)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100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정 및 결과의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20%) - 지역별 거점 단지 3개소 완공(10%) - 전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실시 설계 완료(10%) ② 수산식품 거점 단지 활성화 (20%) - 신제품 개발 20건 ③ 수산식품산업 육성 제도 기반 조성 (60%) - 김산업 발전 전략 마련 (20%) - 김산업 전문 기관 신규 지정 1개소 (20%)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 (20%)	외부보고서, 공문 등 -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공문 등 내부방침 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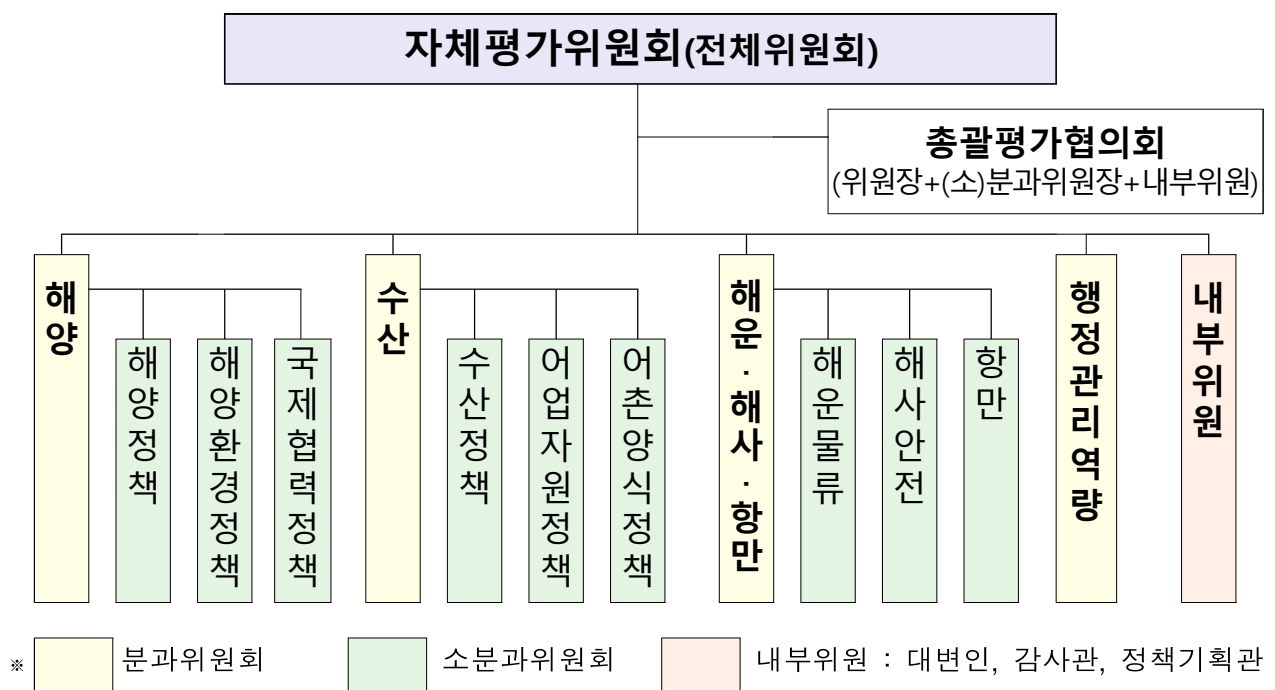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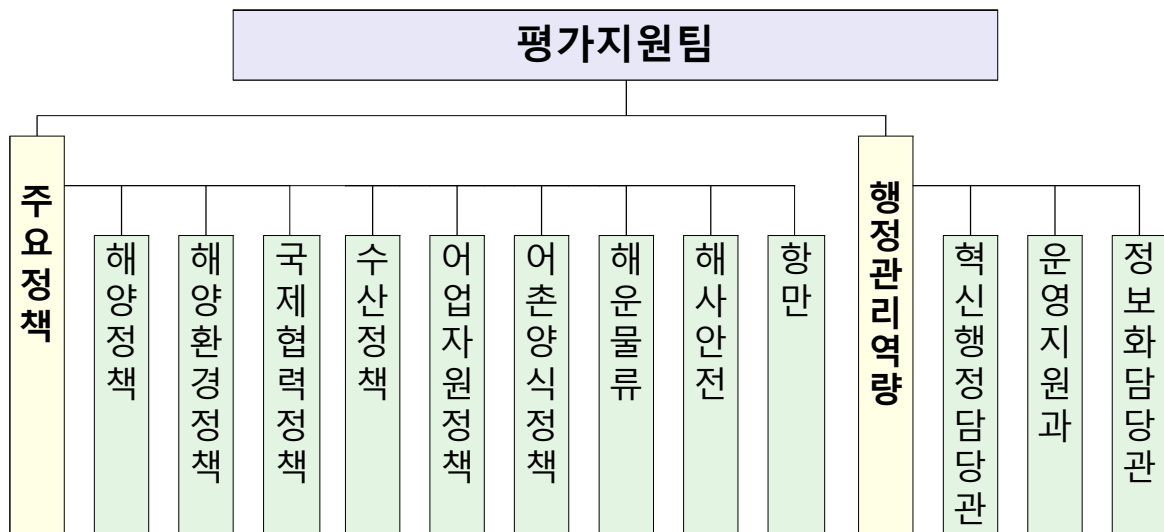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대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전문 분야별 분과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과 소관 관리과제 평가
- (총괄평가협의회) 위원장, (소)분과위원장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및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 수행



※ 재정사업평가부문은 별도로 구성·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점검 실시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총괄지원팀**과 **분과별 지원팀**을 구성·운영
- (**지원총괄팀**) 혁신행정담당관을 팀장으로 구성,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지원팀 총괄** 및 **추진현황 점검**
- (**분과지원팀**) 국(정책관)별 주무계장을 팀원으로 구성, 평가위원 정책 현장 방문 및 정책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과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



※ 총괄 : 혁신행정담당관

※ 소분과별 지원팀은 각 국(정책관)의 기획 또는 관리계로 구성

②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 평가 방법

- 관리과제별로 정책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하되, 성과 지표 달성도·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결과 확정

○ 추진실적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주관의 과제평가 및 과제 추진실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에 결과를 제공

○ 평가 결과 공개

-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평가결과(안)을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국조실)에 제출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
-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 평가 결과를 부내 공유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는 모범사례로 전파

< 자체평가 주요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내용
○ '22년도 계획 수립	3월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 '22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 계획 수정(필요 시)	6월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 '22년 성과관리 수정 시행계획 심의·확정
○ 중간점검	7월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1차 평가	3분기	· 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의 난이도 등 평가
○ 평가위원 정책현장 방문	3분기	· 주요정책 추진현황 파악(분과위)
○ 2차 평가 및 평가결과 최종 확정	'23.1월	· 분과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 분과별 과제 등급 결정
		· 총괄평가협의회 개최 *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 전체회의 개최 * 평가결과 심의·확정
○ '22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국무조정실 주관)	'23.2월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① 기본원칙

- 평가 결과는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매우 우수과제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부진 과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향상을 도모

② 평가 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최종 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 관련 사업 예산편성, 조직 재설계 등에 활용
- (주요정책 부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정책성과 향상 도모
 - 상반기 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지연과제, 정책효과 미흡과제를 발굴하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
 - 최종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관리
 - 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사업 성과관리 개선대책 등)를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반영하여 자체평가 부문 간 연계 강화
- (조직 부문) 주요정책 평가 결과 및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 인력증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
 -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 및 대국민 현장서비스 강화 등 집행 부문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우선확충 추진

- 특히, 조직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인력증원 소요제기 등 추진체계 강화
- (행정관리역량 부문)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관리 역량 제고
 - 특히,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 향상내용을 지속 점검하여 정책 환류를 도모하고,
 - 타기관의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제고

③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 최종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성과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인사, 개인 성과급 등에 반영
- (인사 부문) 승진·보직·직위공모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
 -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업무량 대비 인력 배분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전보·승진 등 인사 운영에 반영
 - 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성과달성도를 인사관리에 활용
- (포상)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정책과제의 우수 부서에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서 성과평가 가점 등을 지급(연말 표창)
 - * 장관 표창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 우수부서 표창 활용
- (성과급)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를 부서 단위의 평가항목에 반영(과제평가/40%) 하고, 부서 단위 평가 결과를 개인 평가에 반영*

* 부서장(과·팀장급 이상)은 부서평가를 100%, 부서원(복수직 4급 이하)은 60%

④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각 부서의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부내에 공유
- 평가 결과 매우 우수 관리과제와 지표의 난이도, 정책효과 등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를 모범사례로 전파
- 미흡과제는 미흡 원인의 핵심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사례로 전파

3. 변화관리 계획

① 추진배경

- 우리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속 지원 필요
-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속 요구 중

<'21년도 변화관리 평가>

- 전직원 워크숍(8.18, 온오프라인), 온라인 부서 간 협업프로그램(10.26~27)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해양수산 아카데미(11회), 연구모임(15개), 동호회(182개) 운영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 지원하는 등 변화관리 프로그램 계획 목표 달성
- 타 기관의 우수 조직문화 사례를 적극 활용(공정위 사례 : '일터를 갤러리처럼') 하고 우리부 사례를 공유(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어벤져스 활동성과 발표)하는 등 성과 홍보·확산 추진 중

2 추진방안

<'22년도 추진방향>

- '21년도 변화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길러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추진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방식 변화관리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 하되, 상황에 따라 집합프로그램 탄력적 운영 필요

1 해양수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일하는 방식 효율화>

- (단순·반복업무 RPA*) 자동화 필요 업무 수요 파악을 통해 단순·반복 업무의 비중 감소, 자동화 대상 업무 지속 발굴 추진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람이 하는 작업을 모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로봇,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처리

- (과제발굴) 범정부 RPA 활성화 계획('22.2월) 적극 이행 및 과제발굴 공모전(행안부)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데이터 기반 행정) ICT 기반 디지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시켜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
 - (ICT 기반 업무혁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ICT 기반 업무 효율화 추진
 - (공공 빅데이터 활용) 공공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민원해결, 사회현안 해결, 주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의 근거 마련
- (비대면 행정활성화) 전직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지사항 등을 자체 운영 포털(바다넷)에 게시하고, 이용현황에 대해 정기 점검(분기)

- '성과평가 계획' 반영*을 통해 영상회의, 모바일 결재 활용 실적 평가

* 부서별 달성 목표를 부여하고 부서별 인원 대비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국민 참여성과 정책화>

- (민관 소통 강화) 자문위원회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문 방식·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현안 발생에 적극 대응
 - (소위원회 활성화)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현안과제(반기별 1개 이상)를 심층 논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총괄 검토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
 - (다양성 확보) 비대면(이메일, 메신저 등) 자문방식을 대면토론과 병행하고, 자문위원으로 젊은(20~30대) 인재·현장전문가를 포함
- (국민참여제도 활성화) 해양수산 전분야에 다양한 국민 참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정책 서비스 개선과 국민 체감도 향상 도모
 -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하여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과 다양한 소통 및 국민이 정책을 직접 설계·기획할 수 있는 창구 활용
 - 정책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대한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② 조직문화 개선

<조직 내부 소통·협력 확대>

- (조직문화 진단) 직원대상 설문조사(연 1회)를 통해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 직원 워크숍) 본부·소속기관 등 직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합의 장 마련(연 1회)
- (부서 간 협업 워크숍) 혁신 아이디어 발굴, 타 부서의 정책 이해도 제고, 정책 개선방향 토론, 팀워크 빌딩 등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소통·화합 위한 기회 제공(부서별 2인 이상 참여)

<MZ세대 중심 조직문화 혁신>

- (일하는 방식) 팀원 간 수시 모임(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 중 변화가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방안 제안
 - * 근무경력 10년 이하, 81년 이후 출생 직원 13명으로 정부혁신어벤저스 구성(3월~)
- '22년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부에 적용 가능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적극 발굴
- (현장소통)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공직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청년기업·사회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 및 소통·협력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협업문화) 협업수준 진단(행안부)을 통해 우리 부 협업 증진요인 및 방해요인을 분석하여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 도출
 - 직원들이 조직 내 및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협업 프로그램을 운영
 - * 내부 직원 간 소통·협업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부처 간 협업 아카데미 운영(하반기), 협업 우수사례 창출 민간기관 등 방문(하반기)
- (협업시스템) 협업 상대방을 찾고, 이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업 이음터'를 적극 활용하고, 협업의 어려움은 '협업 SOS' 우선 활용

- 협업이음터 활용 교육, 협업이음터 홍보(누리집 등), 부서별 협업이음 현황(협업이음터 활용, 협업 SOS 해결 등)을 점검(분기)하여 성과평가 반영

* 협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상반기)

○ (협업과제) 기관관리 주관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행

- 온나라 협업블로그를 통해 협업과제를 등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 (인센티브) 협업 잘하는 개인·부서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협업인재에 대해 성과평가 점수 부여, 부서에 대해 성과평가 가점 부여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예방>

○ (기관장 선도) 국민편익 제고와 관련이 높은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책 수요 발굴

- ①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항만인프라 구축(탄소중립)
- ② 어촌지역 활력 제고 및 수산업 지속성장 지원(국정과제)
- ③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탄소중립)
- ④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 추진(국정과제)

○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5, 10월)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반기별 20명 씩)하고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소극행정은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점검 등을 강화

○ (보호·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소송지원 등으로 개인부담 최소화, 지원제도(위원회,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적극행정 추진 지원

- (소통·홍보)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우수사례 홍보, 심화교육 추진, 국민·공무원 인식도·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관심 및 이해도 제고

3 직원 역량 강화

<혁신교육 확대운영 및 다양한 학습 환경 조성>

- (혁신 교육)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디지털 소통 향상, 적극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월1회) 및 온라인 디지털 학습 콘텐츠 운영
*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간 유튜브 강연을 적극 활용하고, 직원 재능기부로 강사단 위촉
- (정책현장 체험) 직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어벤저스 등 현장체험 및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 제공
- (소통활동) 직원 혁신워크숍, 부서 간 협업 워크숍 및 장관님과 직원 간 소통 위한 온·오프라인(Zoom 등) 행사 개최(연 2회)
- (경진대회)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업무 성과 창출 독려 및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자체 경진대회 개최(상·하반기)
- (개인학습) 멀티미디어 지식 콘텐츠*, 나라배움터** 등을 활용하여 직원 개인별 직무 및 변화관리 학습기회 확대

* (지해로) '22년 서비스 제공업체 제작 콘텐츠(리더십, 4차 산업혁명, 인문교양, 글로벌 이슈 등) 및 우리부 특화 콘텐츠 제공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회적가치 등 개설·운영 중

<혁신 인센티브 제공>

- (혁신우수공무원) 협업,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혁신 성과를 거둔 공무원(부서)을 선발하여 장관 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 분야별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휴가 부여(2~3일)

- (연구모임 지원) 자발적으로 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토록 독려하고, 모임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강사료·도서구입비 등) 지원(15개 내외)
- (혁신 아이디어 포상) 혁신 아이디어 발굴 이벤트를 진행, 참여자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경우, 모바일 상품권 제공
- (가점 부여) 협업 우수 부서(장관 가점), 혁신활동 조직 참여 부서(1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부서(0.1점) 등 성과평가 가점 부여

4 성과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성과 모니터링>

- (키워드분석) 우리부 관련 온라인 기사, 댓글 등을 분석하여 우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 주요 홍보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정책기획홍보TF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데이터분석)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진단, 조치방안 검토
 - *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국민권익위원회), 온나라 '혜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중장기전략) 키워드분석 결과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관점의 우리부 변화관리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성과 확산 및 홍보>

- (디지털 소통) 혁신과제에 대한 카드뉴스, 썸네일(대표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등으로 제작, SNS를 활용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
- 정부혁신 1번가에 관련 홍보자료를 동시에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정부혁신 어벤저스 중심으로 유튜버 선발 및 혁신활동 수행

- (보도·인터뷰·기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방송,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추진
- (현장중심 홍보) 정부혁신 주요과제와 관련 있는 박람회 및 전시회 시, 정부혁신 키워드 또는 이미지 등 표출(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릿 등)
 - 정부혁신 주요과제 관련 장관님 등 간부급의 현장방문, 기념행사, 포럼, 세미나 시, 정부혁신 성과도 함께 홍보 추진
- (홍보 인센티브) 부서 및 소속기관별 정부혁신과제 홍보실적을 성과평가(부서평가)에 반영하고, 홍보 방식별 점수를 차등 부여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과제별 현장의견 반영계획

- (대상과제) 모든 관리과제가 대상이며, 과제담당부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개선 등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함
- (의견수렴 방법) 해당 정책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
- (정책반영·환류)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 노력을 평가

☐ 평가시 현장의견 반영계획

- 자체평가위원의 객관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책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방문을 추진

* 정책현장방문 계획(2분기)을 수립(실·국 및 자문위 협의)하고 3~4분기 현장 방문 추진

[불 임]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 분		성과지표						
		소계	정량화		지표성격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5	5	0	0	0	2	3
성과목표	15	15	15	0	0	1	11	3
관리과제	57	108	74	34	2	36	53	15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①원양 선복량 (만TEU)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126	정량	결과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①해양사고 인명 피해 (사망·실종, 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100	정량	결과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①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①실제 조사 정점 수 /조사 목표 정점 수(%)	①100	정량	산출	
	②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발행 수 (건)	②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건수 집계	②60	정량	산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①수산물 수출액 (억불)	관세청 수출통계	32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 발주, 터미널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100	정량	산출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2,108	정량	결과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 공공선박 친환경선박 전환 실적	국가예산 투입 선박 건조·개조 이행현황	48	정량	산출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 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	외국인 선원 대체고용 지원 실적 및 미취업·비전공자 대상 교육양성 인원	300	정량	산출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	항만재개발 사업 직접 공모 또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문	1	정량	산출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 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X 100	100	정량	산출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	5년간('17~'21년) 평균 해양 사고 발생건수(2,820건)를 기준으로 매년 3%씩 감축	2,735	정량	결과	
전략목표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하고 해양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 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차세대 선박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 친환경선박 보급 기반 마련율) ÷ 3 × 100	100	정량	산출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 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률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약3천여명)으로 해양레저 관광(지역축제, 해양레저 스포츠, 마리나, 해안가 캠핑) 체험율을 측정	17	정량	결과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 이어도 및 해양 주권 학술홍보 성과	학술논문 2편이상(15%) + 이어도 관련 저서 발간 2권 (50%) + 국내·외 전문가포럼 1회(1건 * 15%) + 해양 아카데미 2회(20%)	100	정성	과정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해양수질 개선율	(WQI 1등급 정점 수) ÷ (전체 연안 해역 조사정점 수) × 100%	58	정량	산출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 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귀어 창업·주택 자금 지원 대상 선정자 수	617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 수산자원 직접 조사 정점 수 목표 달성율(%)	'22년도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 수산자원 직접조사 목표 정점수 500개] × 100%	100	정량	산출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 양식 생산량(천톤)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2,404	정량	산출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연도별 예산 누적 투자액(국비)/총사업비) × 100	12.9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민간 주도 선박투자 활성화 등 지원체계 강화	①중소선사 경영안정 프로그램 추진율(%)	{{(S&LB 추진×0.5) + (중소선사 특별 지원프로그램 추진×0.5)}}×100	100	정량	산출	
		②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율(%)	{{(조세특례 예타추진×0.5) + (정책펀드 지원 추진×0.5)}}×100	100	정량	산출	
	②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①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임시선박 투입×0.5)+(중소화주 전용선적공간 제공×0.5)} × 100	100	정량	산출	
		②선·화주 상생 추진율(%)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 0.5)+(우수 선화주기업인증 제도개선×0.5)} × 100	100	정성	산출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①지능형항로 자율운항시스템 성능목표 달성도(%)	충돌회피 성공률(%) =회피횟수/조우회수 ×100	90	정량	산출	
		②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달성도(%)	법률 국회 제출·발의 시 100% 달성	100	정성	과정	
	②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율 (%)	④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구축(5%), ⑥고생산성 컨테이너 자동하역 장비 구축 완료(15%) 등	100	정량	과정	
	③동북아 물류 HUB 항만구축	①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 추진율(%)	④지역산업과 연계한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25%) 등	100	정성	과정	
	④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①해외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 (건) (계획포함)	해외 물류시장 신규 진출 건수 (계획포함)	8	정량	산출	
	⑤'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①주요 항만 '컨' 물동량(1~11월) (만TEU)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	2,582	정량	산출	
②민간투자유치 실적(억원)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 공모 시 제출한 기업의 투자계획 확인	3,0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⑥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마련	①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①항만 민자사업 정책 수립 건수 (3건)(40%) * 측정방법 : (실적건수 / 목표건수) × 100% ②우선협상대상자 선정(1건)(30%) * 측정방법 : (실적건수 / 목표건수) × 100% ③신규 민자 사업 발굴(1건)(30%) * 측정방법 : (실적건수 / 목표건수) × 100%	100	정성	과정	
		②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건수 (건)	해외협력사업 추진 건수	4	정량	산출	
		③해외항만개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율(%)	①해외시장진출 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20%) ②항만관계관초청연수(20%) ③협력국, 국제기구 등 협력기반 문서 체결(20%) ④ESCAP세미나개최(20%) ⑤지원협의체회의개최(20%)	100	정성	과정	
	⑦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①민간투자율 및 재해저감율(%)	민간사업자 투자율(70%) 재해저감율(30%)	95	정량	결과	
		②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이수인원(명)	교육 이수자 인원 집계	160	정량	산출	
		③제도개선 달성율(%)	'컨'터미널 출입관리 강화 방안 수립 여부(50%),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 수립 여부(50%)	100	정성	과정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 (e-Navi) 시행	①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85	정성	결과	
		②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요해양 사고(충돌·좌초· 침몰·접촉) 저감율(%)	[서비스 이용선박의 사고율 / 전체 등록선박의 사고율] x 100	20	정량	산출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①고품질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율(%)	eLoran 신규송신국 완공(40%)+ 해양 PNT 위치 정확도(≤10cm) 성과목표 검증(60%)	100	정량	산출	
	③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①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율(%)	친환경선박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마련(25%) 등	100	정성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친환경선박 전환 및 제도기반 마련율(%)	친환경 선박 전환 추진(63척)(25%),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110척)(25%) 등	100	정성	산출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①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율 (%)	해사고 목표 취업률 (80%) 대비 달성율(10%) 등	95	정량	결과	
		②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및 승선실습 제도개선 추진율(%)	정기적인 해기사 시험(4회) 시행(25%) 등	100	정량	과정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①선원근로여건 개선 추진율 (%)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이행 점검, 특별 근로감독·실태점검 등	100	정성	과정	
		②선원복지 증진사업 추진율(%)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확대 달성율(20%, 140척) 등	100	정성	과정	
	③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확대	①스타트업 창업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실적(명)	Σ(스타트업 창업인원)	60	정량	산출	
		②전문가 매칭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인력 양성실적(명)	Σ(전문가 매칭 인력양성인원)	253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①항만재개발 추진율(%)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20%) 등	100	정량	산출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북항재개발 추진율(%)	부산북항 1단계 (70%) 추진협의회 개최(20%) 현장간담회 개최(10%) 등	100	정량	산출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연안침식관리 강화	①연안정비사업 추진율(%)	(집행누계금액/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100	14.0	정량	투입	
	②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 안전항만 강화	①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강화 추진율(%)	재해안전항만 중장기 보강계획 수립(60%) 한국형 설계기준 로드맵 마련(40%)	100	정성	투입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평가(점)	전문가 대상 평가(설문조사) 결과	85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해양선박사고 매뉴얼 점검교육 등	100	정성	과정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①국적선 1천척당 해양사고 피해 지수 저감(점)	[3년평균 1천척당 사망· 실종자 + 3년평균 1천척당 주요사고* 건수] x 0.90	38	정량	결과	
	③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①안전·복지형 표준 선형 어선의 등록 증가율(%)	(연간 증가한 표준선형 등록척수) /(전년도 표준선형등록척수)x100%	100	정량	산출	
		②안전·복지형 표준 선형 어선의 에너지 절감율(%)	(기존어선 톤당 유류 소모량 - 표준선형 어선 톤당 유류소모량)/ 기존어선 톤당 유류소모량 ×100 = 7.0% 절감	7.0	정량	과정	
	④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	①'해로드' 앱을 활용 구조신고 비율(%)	신고 비율 = 해로드 앱을 이용한 신고 건 수/총 구조 신고 건 수	4.5	정량	산출	
		②등대스탬프투어 완주자 인원(명)	등대스탬프투어 완주자 수	760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 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①해양에너지 실증시설 추진율(%)	도서지역-조류발전 ESS 제작완료,파력발전시험장 이용건수(연 2회)	100	정성	과정	
		②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기반 구축율(%)	차세대선박구축공정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율	100	정량	산출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①해양수산생명 자원 주권 강화율(%)	확증표본 확보, 미확보종 확보, 소재효능 등급화 등 지표 합산	100	정량	과정	
		②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해양바이오 신소재 분야 인체적용시험 등	100	정성	과정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①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 지원 업체 수(개소)	지원업체 수	206	정량	산출	
		②투자유치액(억원)	지원업체의 투자 유치금액 합계	298	정량	산출	
	④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①창투센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수(명)	'22년 창업투자지원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원 수	1,401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창업기업수(개소)	'22년 창업투자지원 센터를 통해 신규 창업한 기업 수	35	정량	산출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①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콘텐츠 상품화율, 해양관광 증대 행사실적 등	100	정량	산출	
		②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 추진율(%)	(해양치유 기반 구축율50%)+ (해양레저산업 정책 내실화율 50%)	100	정량	결과	
		③해양관광인프라 조성률(%)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 100	50	정량	결과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 추진 등	100	정성	과정	
		②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운영 효율화에 따른 박물관·과학관 목표 관람객수 및 관람 만족도 측정	100	정성	산출	
		③해양문화시설 인프라 구축률(%)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률	100	정량	결과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①무인도서 종합 정보시스템 고도화율(%)	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 계획수립, 기능개선 등	100	정성	과정	
		②무인도서 관리 기반 구축 추진율(%)	무인도서 관련 규제개선, 실태조사 등	100	정성	과정	
	②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①독도 심해저탐사 성과(%)	'22년 최종목표* (400kg) 채취*0.5(4/4년차)*90% + 최종목표 달성시 가산 10%	100	정량	산출	
		②사전예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율(%)	해양 예·경보 서비스 개선율	100	정성	과정	
	③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①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 강화율(%)	정책기반구축율+연구역량 강화율+국제협력확대율	100	정성	과정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①수산분야 통상협상 FTA, CPTPP 관련 설명회 참석자(명)	홍보용역 설명회 참석자+ 해수부 주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참석자 +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참석자	600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주요 FTA 상대국의 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수용률(%)	(우리측 미개방 품목수 / 우리측 시장개방 대상 품목수)×100	17.8	정량	산출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①정부 아세안 정책 연계 해양수산 ODA 추진 건수(건)	아세안 국가 ODA 추진 건수	12	정량	과정	
		②양자협력 MOU 체결건수(건)	MOU 체결건수	4	정량	산출	
		③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건)	워크숍 개최건수	2	정량	산출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①원양어업 조업 쿼터 확보량(천톤)	러시아 수역을 제외한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어획할당량	61	정량	산출	
		②옵서버 신규양성 및 제도활성화 추진율(%)	신규옵서버 양성, 직무교육 개최	100	정성	과정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전(全) 주기 관리	①해양쓰레기 수거량(톤)	당해 연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109,110	정량	산출	
		②반려해변 입양수(개)	당해 연도 입양자 수	39	정량	산출	
		③오염퇴적물 수거량(천m³)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른 실적	120	정량	산출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①해양수질 개선 개소수(개소)	ΣWQI 1등급 달성해역 * 전체 26개 해역	12	정량	산출	
		②해양오염 방제교육 이수인원(명)	해양환경교육원 교육 이수자 수	6,420	정량	과정	
	③해양보전과 이용의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	①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및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고시건수/목표건수(7건)), (마련율/목표마련율(100%)) ×35% 등	100	정성	과정	
		②보전·관리 중심의 공유수면관리 체계 마련	개편안 상정보고 건수/상정·보고목표건수 (1건))×20% 등	100	정성	과정	
		③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기반 마련	(마련율/목표마련율(100%)) ×60% 등	100	정성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①갯벌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율(%)	제도적 근거 마련 (하위 고시) + 갯벌복원사업 신규추진	100	정성	과정	
		②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Σ (연도별 해양보호구역 지정 또는 확대 개소수)	34	정량	산출	
	⑤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①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추진율 (%)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중장기 계획·대책(안) 수립 등	100	정성	과정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①어촌 활력 추진율(%)	어촌관광·체험 직접소득액, 정책자금 수혜율, 정년 신규인력 정착률	100	정량	산출	
		②어항개발 추진율(%)	국가어항 적기 확충 달성 정도, 국가어항 관광 방문객수 등	100	정성	과정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①어촌활력지역 변화율(%)	3개 부분 값*을 정규 분포화 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45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의 전체 중 비율	40	정량	산출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①소득보장 및 경영 안정 지원 프로 그램 수혜율(%)	10톤 미만 어선보험 가입률, 3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률 등	100	정성	과정	
	④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①소규모 어업경영 자금 이용 어업인 지원율(%)	소규모 어업경영자금 이용 어업인(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어업경영자금 대출 금액/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100	48	정량	산출	
		②수산업 분야 지속적 세제감면 노력율(%)	수산분야 일몰도래 세제감면 조항에 대한 기재부·행안부 연장 건의, 세제감면 연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100	정성	과정	
	⑤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소득 기반 강화	①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급 어가수(호)	당해연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수급어가수	16,400	정량	결과	
		②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척)	당해연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척수	840	정량	결과	
	⑥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①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14,585	정량	결과	
		②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율(%)	(개선이행건수/특별점검지적 건수)×0.5, 방안 마련 및 지침 개정×0.5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조성 관리 강화	①바다숲 탄소흡수량 누적 증가 실적(톤)	직전년도까지 바다숲 누적 탄소흡수량 + 당해연도 신규 탄소흡수량	97,831	정량	산출	
		②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당해연도 조성완료해역(4년차)의 해조류, 저서동물 등의 생물종 다양성 분석	2.56	정성	과정	
	②수산자원관리체계 고도화	①TAC 참여업종 증가율(%)	[(당해연도 참여 업종 수 - 전년도 참여업종 수)/전년도 참여업종 수×100]	54	정량	산출	
		②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수산자원조사실적 지수 달성률 =실적지수(a.조사 기준정점 정밀 조사 달성지수+ b.주요 자원 수직분포 누적 구멍지수) 목표 치의 달성률	100	정성	과정	
	③어업경쟁력 강화형 어선 감축 추진	①근해어선 감척 이행율(%)	(근해어선 감척수/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100	70	정량	산출	
	④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	①국내어선 불법 조업율(%)	국내어선 불법어업 단속 건수/ 승선조사건수×100	17.5	정량	산출	
		②중국어선 불법대응 건수(건)	우리수역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건수	2,650	정량	산출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①원양어선 평균 선령 감소율(%)	(신조 미지원 시 3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 비율) - (안전펀드 지원 시 3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 비율)	1	정량	산출	
		②해외어획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율(%)	$\frac{\text{항만국검색 척수}}{\text{전체 입항신고 척수}} \times 100$	7.6	정량	산출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①CO2 저감량 (tCO2)	CO2 저감량 = 보급 전 유류 (등유) 탄소 배출량(tCO2) - 보급 후 에너지절감시설 탄소 배출량(tCO2)	11,340	정량	산출	
		②교육 수료자의 양식 취창업율(%)	(취·창업인원(단기포함))/ (원스톱창업지원대상)×100	21.4	정량	산출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①양식 9대 전략 품목 생산량(천톤)	9대 전략품목 양식생산량	990	정량	결과	
		②배합사료 사용비중(%)	(배합사료사용량/양식장 사료총사용량)*100	27.9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①산지가격 변동률 (%)	금년도 대상품목 전체의 산지평균가격/전년도 대상품목 전체의 산지평균가격 비율	12.8	정량	산출	
		②임대형 양식장 도입	임대형 양식장 도입 방안 마련(10), 개정안 입법 예고(10) 등	100	정성	과정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①양식장 인증부표 교체비율(%)	양식장 인증부표 수 /양식장 부표 수(5,500만개)×100	49.3	정량	산출	
		②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획득(%)	B/A*100 B : 금년도 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 실적 A : 금년도 수산생물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 계획	100	정량	산출	
		③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확충(%)	B/A*100 B : 기준설정 실적 A : 금년 설정 계획(10종)	100	정량	산출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①상생할인 수산물 매출액(억원)	상생할인 할인 품목 수산물 총매출액(억원)	1,000	정량	결과	
		②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10만톤	정량	결과	
	②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①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율(%)	해외 K-SEA FOOD 판매 전용관 운영,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전시 상품수 20% 확대 등	100	정량	산출	
		②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율(%)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수산식품 거점 단지 활성화 등	100	정성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 민간 주도 선박투자 활성화 등 지원체계 강화	국정 40-1
	② 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국정 40-2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국정 40-3
	②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국정 40-3
	③ 동북아 물류 HUB 항만 구축	국정 40-3
	④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국정 40-2
	⑤ '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국정 40-2
	⑥ 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국정 40-3
	⑦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 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 시행	
	②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국정 40-4
	③ 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국정 40-4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 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국정 40-5
	②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국정 40-5
	③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 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정 41-5
	②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102-3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 연안침식관리 강화	국정 41-5
	②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 안전항만 강화	국정 41-5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국정 40-4
	②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국정 40-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업무 3-3-2
	④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국정 41-1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국정 73-6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국정 73-6
	④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국정 73-6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국정 73-7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국정 41-1
	②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국정 41-1
	③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국정 41-1,5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국정 41-6,7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국정 41-6,7
	③해양보전과 이용의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	국정 41-6
	④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국정 41-7
	⑤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정 41-7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국정 73-4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국정 73-4,5
	④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국정73-5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⑤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국정 73-5
	⑥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 41-4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조성 관리 강화	국정 41-7, 73-1
	②수산자원관리 체계 고도화	국정 73-1
	③어업경쟁력 강화형 어선 감축 추진	국정 41-7
	④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국정 41-1, 73-1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국정 73-1,5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국정 73-1,5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국정 73-4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정 41-7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국정 73-3
	②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국정 73-2